

연구보고서

2020 청년주거 작은 연구모임 “슬기로운 연구생활”

기후위기 시대 주거·토지 문제의 전환 담론 모색

- 기후정의, 토지공개념, 커먼즈-커머닝, 지오멘탈리티를 통하여

공생연구소

소하연

이나경

이시원

장윤석

“부와 특권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발생하는 죄악과 비참함을 보면서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를 위해 노력하려는 독자에게 바친다.”- 헨리 조지, 샌프란시스코 1879년 3월.

“미증유의 기후위기와, 땅과 집의 불평등이 만들어낸 혼란과 부정의를 보면서 더 나은 사회와 지구를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를 위해 노력하려는 독자에게 바친다.”- 공생연구소, 서울 2020년 12월.

〈목 차〉

I. 여는 말 - 우리가 걸어온 길 -----	4
II. 서론 - 연구소개 -----	8
1. 문제의식	
1)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환란 속 극심한 불평등	
2) 그 가운데 평등한 토지, 안전한 집, 생태적 공간의 중요성	
3) 그린뉴딜에 부재한 주거정책, 녹색전환의 빈자리	
2. 연구목적 - 땅과 집을 보는 시선, 토지·주거문제의 담론 전환	
3. 연구방법론	
III. 기후정의-----	17
1. 청년주거문제와 기후정의	
1) 주거취약계층으로서 청년세대	
2) 한국 부동산	
3) 기후정의와 주거	
4) 한국의 기후정의 논의	
5) 기후운동과 주거권운동의 연대	
2. 만남 - 김혜미(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기후위기, 새로운 사회복지	
3. 제언 - 주거불평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자	
1) 책임과 피해를 함께 해결하기	
2) 전환 과정의 시민 주체 참여	
3) 궤적한 주거와 생태 보존이라는 딜레마	
IV. 토지공개념-----	38
1. 헨리조지의 녹색화	
1) 들어가며 - 지금, 헨리조지를 보는 이유	
2) 토지공개념 다시 보기	
(1) 분배 이론	
(2) 불황 이론	
(3) 헨리 조지의 정책 처방 - 토지단일세	
3) 현대의 토지공개념 이론 검토	
(1) 전강수의 제안 - 토지공공임대제	
(2) 김상윤의 제안 - 토지원리 확장과 특권 없는 세상	
(3) 남기업의 천연물 기본소득	
4) 단으며	
2. 만남 - 남기업 토지+ 자유연구소 소장	
3. 제언 - 토지공개념 확장과 천연물 기본소득에 대하여	
1) 토지세와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는 '천연물 기본소득'의 효과와 의의	
2) 토지공개념의 확장: '인간 종특권'의 사유	

V. 커먼즈-커머닝-----	56
1. 커먼즈로 집합적 주체를 창출하기	
1) 들어가며	
2) 커먼즈란 무엇인가	
3) 커먼즈의 문제의식	
4) 커먼즈 이론들	
5) 국내의 커먼즈 운동들	
(1) 솔방울 커먼즈	
(2) 경의선 공유지	
(3) 빙고	
(4) 비빌	
6) 나가며	
2. 만남 – 안새롬 솔방울 커머너	
3. 제언 – 기후위기 시대에 커먼즈·커머닝으로 소유권 다시보기	
1) 소유권 개념에 변화가 필요하다	
2) 소유권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3) 스튜어드십에서 인정적 정의로	
4) 소유권 너머를 이야기하기	
5) 마치며	
VI. 지오멘탈리티-----	80
1. 땅을 보는 마음들	
1) 들어가며	
2) 지오멘탈리티란, 개념의 정의	
3) 지오멘탈리티와 이데올로기, 패러다임, 틀-서구중심주의, 상상계의 탈식민화	
4) 균형잡힌 지오멘탈리티와 지구 한계	
5) 근대 이전과 이후의 지오멘탈리티	
6) 토지·주거 문제의 지오멘탈리티 – 투기적, 토건적, 수탈적 지오멘탈리티	
7) 지오멘탈리티의 확장 – 생태시티즌십과의 만남	
2. 만남 – 박순열 도시재생연구소 소장	
3. 제언 – 민주적·생태적·세계적 지오멘탈리티와 이에 바탕을 둔 섬세한 그린뉴딜	
1) 지오멘탈리티의 분석틀	
2) 민주적, 생태적, 세계적 지오멘탈리티 – 균형잡힌, 지속가능한, 올바른 지오멘탈리티의 제언	
3) 섬세한 그린뉴딜 – 사람도 생태도 지구도 없는 기준의 전환을 보완할 하나의 제언	
VII. 결론 -----	114
참고문헌	

I. 여는 말, 우리가 걸어온 길

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2019년 끝자락부터 성공회대학교 실천환경학회 ‘공기네트워크’ 안에서 ‘공기생태정치경제연구소(이하 공생연구소)’라는 연구모임을 만들고 함께 공부·연구·활동해왔다. 공생연구소는 폭력과 착취, 과괴가 아닌 대안의 삶을 꿈꾸며 기후위기 시대 전환의 담론을 꾸준히 찾아왔다. 기후위기는 자주 ‘거주 불가능한 지구가 될 것이다’라는 절망의 언어로 설명된다. 이를 뚫고, 비집고 나가고자 그린뉴딜, 탈성장, 코로나 시대의 경제학, 커먼즈 등 주류 학문을 벗어난 상상의 언어를 모아왔다. 고민의 과정을 지나온 공동연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을 열고자 한다.

윤석은 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 날 왕복 네 시간의 통학 길에서 뭐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다. 덜컹덜컹 실려 가다 떨구어진 영등포역의 한편에는 쪽방촌과 홍등가가, 다른 한편에는 온갖 명품이 즐비한 타임스퀘어가 화려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빙곤』을 읽으며 토지공개념을 공부하게 됐다. “왜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하지만 빙곤은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그의 물음은 거진 한 세기가 지나서도 들어맞았다. ‘부동산계급사회’의 극심한 불평등이 모든 부조리의 중심에 있다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은 없다.

이반 일리치와 프리드리히 슈마허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독한 ‘근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문제의 원인에 원인을 소급해 올라가다 보면 잘못된 생각 혹은 마음가짐 하나가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구나 싶었다. 빌려 쓰다 가는 존재인 한낱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 혹은 마음가짐, 이것은 어디에 그 바탕이 있을까. 칼 폴라니에 이르면 이것은 유기적 전체 속 인간과 자연의 통합된 관계에서 땅과 사람이 따로 뿌리뽑혀 버린 것이 된다.

윤석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동학 속 땅(과 하늘)과의 근대적 관계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편협한 경제학의 독점은 한 세기 이상 계속되었고,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이제는 의문과 의심의 대상이 아니게 됐다. 우리는 땅과 자연을 보는 편협한 마음틀을 가지고 살고 그 결과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생태계는 이미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

갖은 부조리 가운데 미래조차 없다는 진실은 윤석으로 하여금 지금 이 세상에서 너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고 묻는다. 이에 답하다가 지금은 너도나라, 녹색당, 공생연구소, 생태적지혜연구소, 청년기후긴급행동, AYARF 등 여러 공간에 몸을 담고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녹색전환(Green New Deal), 생태학살(Ecocide), 기후정의(Climate Justice) 등이 주로 잡고 사는 낱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지오멘탈리티(Geo-Mentality, 땅을 보는 마음틀)’라는 문화지리학의 개념을 토지·주거문제 담론에 적용하며 보이고자 한다. 참, 7년의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어느 지점이 지나가 버리면 윤석은 중앙에서의 싸움을 그만두고 변두리 어딘가로 떠날 생각이다. 어느 한적한 마을로 떠나 학문 공동체를 일구려 한다. 이반 일리치의 CIDOC(문화교류문화현자료센터)처럼. 헨리 조지 말대로 우리는 같은 별을 보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힘을 얻으니까.

시원에게 공부한다는 건, ‘내가 무얼 사랑하고 지키며 살아갈지’를 찾는 일이다. 먹거리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며,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 담긴 세상의 폭력과 수많은 생명의 죽음을 마주했다. 그렇게 동물권과 비거니즘에 다다랐다. 농사짓는 순간 훌러내리는 정직한 땀방울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생태주의에 다다랐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서히 변화하는 날씨의 감각을, 할머니와 철마다 자연으로 다니던 기억을 잊고 싶지 않아, 기후위기를 공부했다. 세월호 참사로 참혹한 아픔에 함께 연대하는 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살기 위해 공부한 페미니즘을 통해 같은 구조 아래 희생되는 모든 소수자에게 연결됐다. 그렇게 마음이 이끄는 공부를 해왔다. 자신의 삶과 연결된 수많은 문제로 시선이 뻗어 나갔다. 세상의 아픔에, 저절로 몸이 움직였다.

시원은 그저 창밖에 나무의 초록빛 일렁임과 파란 하늘이 보이고, 놀러 가 함께 재미난 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시골 마을에서의 삶을 꿈꾼다. 그렇게 다채로운 이야기보따리를 채워가는 삶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것들을 앗아가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하며 다른 가치를 무시한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부했다. 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언어를 찾기 위해, 그리고 다른 대안을 상상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지금, 시원은 외면해온 토지와 부동산 문제에 다다랐다. 항상 마음에 남아있던 문장.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추장 시애틀의 물음이 시원을 이리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다.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이자,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인 토지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춤추고 노래하며 함께 살 수 있을까.

세상이 자꾸만 지워내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일을 사명으로 여겨왔다. 이번엔 세상이 자꾸만 지워내고, 무시하는 마음과 가치에 귀 기울여보고자 한다. 그리고 먼저 이 고민을 해온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보려 한다. 다른 이들을 짓밟고 홀로 잘 살기 위해 빨버둥 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가치를 품고 아름답게 사는 삶을 위해. 평등한 토지와 안전한 집, 생태적 도시에 대해 연구하며, 새로운 상상을 풀어본다. 이 연구를 통해 아직 여기에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위해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고, 희망을 품고 다른 대안을 상상하는 이들이 있다고 함께 말하고 싶다.

하연은 알 수 없었다. 지구에 사는 모든 것들은 연결되고, 인간만 홀로 살 수는

없는 것임이 너무도 분명한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돌릴 수 없이 파괴하고 개발하는 것일까. 생태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삶인지는 알 수 없었고, 간절히 찾고 싶었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가 이 질문과 닿아있다는 것을 어렵잖이 알게 되었다. 터전이 망가져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되었다. 그 안에서 자신에게는 삶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고, 자신의 자리가 있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질문은 객체화되는 자연과도 닿아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말이 이상하게 다가왔다. 어떻게 자연을 인간이 보호해야 할 것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일까. 인간은 사실 자연 안에 속해있는 많은 존재 중 하나인데도 자신을 그와는 별개의 존재로 분리하여 자연 위에 섰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에 전제되어 있다. 생태 문제를 고민하는 건 ‘결국 영향이 인간에게 돌아와서’가 아니어야 한다. ‘얽혀 있는 연결망 속에서 존재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이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다.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돼지와 식탁 위의 고기 사이, 핵발전소, 고압 송전탑과 스위치만 누르면 들어오는 불 사이 알지 못하는 간극을 보며 많은 문제가 ‘간극’에서부터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였다. 과연 중앙으로 집중되고 규제되는 커다란 규모의 ‘이상적 모델 수립’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더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들로 기후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가 수단이나 객체가 되지 않고 그 존재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기와 두근거림으로 가득했던 순간이 모두 이미 늦어버리고 가망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지구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렇다면 무한하지 않은 지구에서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질문 던져야겠노라 마음먹었다. 주거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첫 발자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거대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지금 여기에 다른 가능성들이 들어찰 수 있는 틈들을 만들 수 있을까, 입을 떼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경의 어린 시절 꿈은 환경운동가였다. 지구온난화로 갈 곳 잃은 북극곰을 지키고 싶었다. 꿈이 잊혀 갈 때쯤 ‘IPCC 1.5°C 특별보고서’를 알게 되고, 기후위기가 나의 생존 문제라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기후악당 국가로 불릴 만큼 기후위기 인식 수준이 낮고, 대응 의지도 없다.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자본주의 체제는 기후위기의 원인이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문장이 기후 운동으로 나경을 이끌었다.

탄소배출이 필연적인 생산유통과정을 거친 삶, 반드시 화폐로 사야 하는 삶.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폐기물이 되어 활활 타오르며 탄소배출을 하는 삶에

의문을 품고 생태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한다.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만 하면 우리는 팬찮을까? 탄소배출만 줄이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 1%가 99%의 부를 차지하고, 자본이 이윤 대부분을 가져가고 서울이 지역을 착취하는 불평등한 구조가 유지된다면 재난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1995년 시카고에서 폭염으로 7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빈부격차로 인한 인재(人災)였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계급과 젠더, 인종, 나이와 장애에 따라 차별적으로 닥친다. 당사자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불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고 싶다. 우리 사회의 특권이 무엇인지 폭로하면서 동시에 타자화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 공론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존재들, 지식이 되지 못한 경험들을 담론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자본주의’라는 공통의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논의 될 수 없다. 이 교차점 중 하나가 ‘안전한 주거’와 ‘상품이 되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평등한 주거권은 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를 이 연구를 통해서 풀고자 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청년주거권을 살피는 이 작은 연구가 숲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나무 하나는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아니, 숲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늘 밖에서만 보던 기후위기라는 숲으로 들어가 나무들 사이에서 뿌리를 딛고 보고 싶다.

나경이 이 연구에 참여한 건 서울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지역으로 무작정 갈 수도 없는 고민이 바탕이 되기도 했다. 지구 하나로 충분한 삶을 고민하며 마음 한편엔 귀촌과 주거공동체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모든 삶이 정치적이며, 직업운동가가 되지 않아도, 제도정치 곁에 있지 않아도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시도한다면, 세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청년주거 작은 연구모임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우리의 문제의식을 고민하고 연구할 중요한 기회다. 기후위기 앞에서 삶은 더 불안정해졌다. 『도넛 경제학』을 쓴 케이트 레이워스는 “우리는 인류가 지구에 입힌 손상을 처음으로 깊이 자각한 세대이자 번영과 발전의 정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말한다.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그렇듯, 어느 한순간의 대격변은 우연이 아닌, 수십 년간 쌓인 축적의 결과다. 축적 없이 전환을 기대할 수 없다. 상상력을 키우려면 풍부한 언어가 필요하다. 우린 어떤 ‘녹색전환’을 꿈꿔야 할까. 기후위기의 피해자이자 가해자, 그리고 당사자로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 코로나가 우리 삶의 조건, 그리고 사회적 기반 자체를 흔든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기후재난 앞에서 미래를 계획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약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구성해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위험사회’에서 주거권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확립이 절실히 중요하다. 기후위기와 주거·토지 문제의 연결점을 공유하고 전환의 담론을 만드는 작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II. 서론, 연구소개

1. 세 가지 문제의식

1)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환란 속 극심한 불평등

다사다난한 해를 살고 있다. 하지만 곧 찾아올 미래에 우리는 지금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시답지 않은 이야기도,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다. 나와 당신, 우리가 알고 살고 사랑한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놓을,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고 말 미증유의 사태다. 우리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멸종의 문턱 위에 서 있다.¹⁾

평등한 토지, 안전한 집, 생태적 공간의 중요성은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당장 올 한 해를 보자. 초입부터 코로나-19로 갖은 사회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사회는 안전한 공간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극명히 나뉘었다. 다른 방도가 마뜩찮은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유일한 처방으로 제시되었는데, 거리를 둘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청도 대남병원, 밀곡 칠암 사랑의 집과 같이 장애인·노인·소수자들은 집단감염에 그대로 노출되어야만 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대기업들의 직원은 재택근무로 전환되었지만 구로 콜센터나 쿠팡 물류센터, 배달 라이더와 같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되었다. 격리생활을 하게 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집과 주위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절실해졌다.

한국을 벗어나 시야를 밖으로 돌리면, 아시아 각지에 늘여져 있는 슬럼가와 난민촌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모진 시간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한 공간 없이, 도무지 거리를 둘 수 없는 비좁은 틈바구니 안에서 그들은 철수하는 국제구호단체를 지켜보며 머물 곳과 식량을 확보하려 동분서주해야 했다.²⁾

한편 자영업자, 상인, 임시직 노동자들의 소득이 끊어졌는데, 이 ‘빌려 쓰는 사람들’에게 월세 날 어김없이 다가왔다. 세계 곳곳에서는 무상주거(Free Housing), 임

1)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이례적으로 「지구온난화 1.5°C에 대한 특별보고서(SP 1.5)」를 제출했고, 이에 따르면 근시일 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하로 제한하지 못 할 경우 지구는 자기회복력을 잃는다. 2040년 전후 지구 평균 온도가 1.5°C 상승하게 된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목표치인 2.0°C가 3년 만에 안일한 목표치였음이 확고해진 것이다. 심지어 IPCC의 예측과 제안조차 사태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호주 국립기후복원센터에서 발표한 「실준적인 기후 관련 안보 위기 - 시나리오적 접근」에 의하면 2030년에 지구는 이미 1.6°C 상승에 도달한다. 갈림길에 도달하기까지 IPCC는 20년, 호주 국립기후복원센터는 10년 남았다고 예측하는 것이다. 월 스테판(Will Steffen)과 같은 몇몇 급진적인 기후과학자들은 “이미 우리는 문턱을 지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지구의 문턱값(Tipping point)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기후 대응이 필요하지만 이대로라면 남은 ‘탄소예산’이 소진되기까지 약 7년 남았다.

2) 현재 방글라데시 남동부 쿠스바자르에는 약 100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밀집된 캠프에 살고 있다. 코로나가 한 번 발병하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대료 동결, 주거권 보장 운동이 일어났다. 코로나로 모든 게 멈췄는데 월세 날만 계속 돌아온다며 현 체제의 주거불평등 모순을 폭로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만 일어났을 뿐이다. 임대인의 선행에 구걸하는 체제 속에서 서민의 소득은 얼어붙었는데 불로소득은 계속 발생했다.

이상한 뉴노멀 시대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름 모를 위험 속의 나날들을 보내야 할 것이다.³⁾ 어느덧 일 년이 다 되어가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환란은,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계속 닥쳐 오는 재난의 성격이 예측 불가능하고 높은 불확실성을 지님을 시사한다. 분명한 것은 오직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의 '위험사회'에서 살게 된다는 것뿐이다.⁴⁾

올여름의 그칠 줄 모르던 장마를 기억한다. 연이어 신기록을 기록하던 장마에 각지에서 물난리가 났다. 집이 통째로 잠겨버린 수재민은 터전을 잃어버린 채 하늘만 쳐다봐야 했다. 유례없는 태풍이 찾아와 목숨을 잃은 이들도 여럿 있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폭염, 코로나, 물난리, 다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둘러싼 자연조건은 날이 갈수록 혐난해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한계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불평등 추이는 1930년 이후 가장 심화되었다.⁵⁾ 1930년의 불평등이 결국 2차 세계대전의 촉매가 되었듯이 인류는 전쟁 말고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다.

그 속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은 가히 위험수준에 다다랐다. 열 명 중 네 명은 단 한 줌의 땅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맨 위의 한 명은 전체 땅의 육할을 독점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정패널 지니계수를 보면 총소득 불평등도는 0.391, 노동소득 불평등도 0.466인 데 반해 자산소득 불평등도는 0.953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나온다.⁶⁾ 이는 부동산이 그 무엇보다도 불평등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말이다. 손낙구 선생이 우리 사회를 '부동산계급사회'라 이름 붙인 후 십 년이 더 지났는데 이 구조는 어찌 더 단단해진 듯하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온갖 모순이 그 민낯을 드러낸다. 자살률, 노

3) 코로나-19 사태를 초래한 총체적 원인-서식지 파괴, 공장식 축산, 자유무역-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인이다. 양자는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서로가 서로를 악화한다. 기후위기는 신종 감염병의 증가-화산-증폭을 가져오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사회적 대응력과 지역사회 회복력, 신뢰, 공공성, 민주주의를 위험 수위로 데려다 놓는다. (장윤석(노마),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②코로나와 기후위기」, 생태적지혜연구소 미디어, 2020.03.22.)

4) 울리히 베의 표현으로, 그의 『위험사회』는 불행히도 적중했다.

5) 2014년 옥스팜(Oxfam, 빈곤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은 전 세계 상위 부자 85명이 대략 35억 명에 이르는 인류의 하위 절반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표제로 제시했다. 2020년 올해는, 2019년 전 세계 억만장자 2,153명이 세계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46억 명보다 더 많은 부(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전했다. (옥스팜, 「불평등 보고서 2020」, 2020.01)

6) 0.953의 비밀은 부동산 소유 편중도에 있다. 상위 20%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하위 20%보다 75배 이상 높고, 상위 1%는 하위 10%에 비해 646배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 토지 소유자의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하고 있다.(전강수,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부동산정책의 전개」, 돌배계, 2016, 257p)

인 빈곤율, 정치 효능감 등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통계들은 기상천외한 수치를 기록한다.

한국의 PIR(Price Income Ratio,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1.6으로 세계 4위⁷⁾, 가계부채는 GDP 대비 97.9%로 세계 1위에 올랐다.⁸⁾ 이 통계들은 왜곡된 경제구조의 대부분을 설명해준다. 불로소득이 발생해 성실한 노동과 정당한 소득이 천대받고, 부동산 불평 신화가 만들어져 사람들은 돈이 모이면 그 돈을 부동산에 바치고, 기업은 생산에 투자하지 않고 땅 투기를 하며, 법과 제도, 정부의 주택 정책, 부동산학자와 언론의 편향된 보도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 주거문제가 대두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다. 안정된 환경과 공간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로 나서기는 굉장히 어렵다. 아무런 보상이 없는 ‘활동과 연구’는 생활비를 벌 아르바이트 시간을 잡아먹을 뿐이다. 극도로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에서 청년세대는 한해 4~50만 명이 공무원 시험을 치를 정도로 극도로 안정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 실업난이 반증하듯 위험하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안정을 지향한다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잘못 짜인 판이었다. 그랬으니 기후위기도 불평등도 이 지경에 이르렀으리라. 하지만 기후위기에 이미 늦었다고 응답한 청년 응답자 수는 67%였다.⁹⁾ 청년들은 광장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영끌’과 ‘빚투’를 통해 ‘인생역전’을 꿈꾸며 떠난다. 그리고 청년 파산과 회생신청 건수는 기록을 갱신한다. 청년 세대가 (학습된 무기력에 젖어) 그들이 속한 사회에 희망을 품고 대안을 요구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기후위기와 코로나, 그리고 불평등은 죄악의 조합이다. 재난은 사회의 아픈 손가락에 들이닥치고, 극심한 불평등이 기저에 깔린 사회는 위기를 대비하고 예비할 힘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저감과 적응의 대책 중 어느 것도 해낼 수 없다.¹⁰⁾ 자연이 우리가 살 수 없게 붕괴하고 사회가 양극단으로 찢겨나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연일 재난이 닥쳐오는 위험 사회, 불평등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

7) KB부동산은 2020년 1분기 PIR을 14.2로 내놓았다. 박현 기자가 한국감정원과 통계청이 제공하는 주택가격과 도시 가구의 소득 통계를 토대로 이를 산정해보니 PIR은 12.04배로 홍콩 말고는 이를 넘는 도시가 없었다. (한겨레, 박현 기자 “연소득 대비 집값” 서울은 12배, 뉴욕·런던보다 월등히 높다”, 2020.8.30.

8)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7.7%로 세계 39개 주요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 역시 세계 3위로 최상위권이었다. [IIF(국제금융협회), 2020.7.19.] BIS(국제결제은행)에서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5.5%로 43개국 중 7위고 증가속도는 4위라고 했다[BIS(국제결제은행, 2020.05].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쉽게 좌우되기에 폭탄과도 같다.

9) 한국갤럽, WIN(Worldwide Independent Network of Market Research), “기후변화 관련 인식 – WIN 다국가 비교 조사”, 2019.12.31.

10) 기후위기 대응은 저감과 적응의 양방향 대처가 필요하다. “당장 앞으로의 기후위기를 탄소배출의 ‘저감’을 통해 근본적으로 막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닥쳐올 코로나와 같은 재난들에 대비해 사회적 안전망 확보,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적응’의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에 저감과 적응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전환책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자연적 원인은 탄소배출의 ‘저감’과 함께 바꾸어나가고, 사회적 원인은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적응’으로 대처하면 된다.” (장윤석(노마),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③ 코로나와 그린뉴딜」, 생태적지혜연구소 미디어, 2020.09.02

탄력성과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는 평등한 토지, 안전한 집, 생태적 공간의 확보를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

2) 그 가운데 생태적 공간 · 안전한 집 · 평등한 토지의 중요성

(1) 생태적 공간의 확보

기후위기를 비롯해 각종 생태위기 속에서 생태적 공간, 녹지의 확보는 더없이 소중해진다. 먼저 재난에 대한 물리적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그렇다. 일례로 녹지면적과 도시의 온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 한가운데의 한여름 기온은 주변 일대보다 몇 도씩 높지만, 숲이나 공원 옆은 서늘하다. 그래서 도시 공간의 곳곳에 생태적 공간을 확보할 때 폭염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더하여 미세먼지 저감, 도시 소음, 온습도 조절, 빗물저장 차원에서도 녹지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군다나 삶의 질에 있어 인근 공원과 산책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코로나 국면에서 산책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생각하면 될 일이다. 이러한 생태적 공간의 확보는 공유지·커먼즈(Commos) 생성, 커머닝(Commoning) 활동과 연결된다. 즉 공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데, 그 과정에서 생태적인 공간이 등장하게 된다. 하늘 높이 치솟은 단단히 소유된 빌딩들 사이를 허물고 확보된 공유지, 도시공원, 녹지 등의 생태적인 공간은 재난을 예비하고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길일 수 있다.

(2) 안전한 집의 확보

주택의 공급률은 100%를 넘은 지 오래다. 즉, 이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 불리는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코로나가 보인 것은 안전한 집이 없을 때 재난은 더욱 가혹해지고, 하물며 그 재난이 일상이 되었을 때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평범한 사실이다. 폭염이 오면 찜질방으로 변하고 장마가 오면 수영장으로 변하는 집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는 재난의 피해를 가중할뿐더러, 건강한 사회를 방해하는 가장 슬픈 요인이다.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적응’ 부분에 있어 안전한 집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절실한 이유다. 그렇기에 모두에게 안전한 집을! 하고 외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확보를 넘어 안전한 공동체와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를 요구하는 구호가 될 수 있다.

(3) 평등한 토지의 확보

극심한 불평등을 허울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토지의 공공성을 되찾는 것이다. 즉 평등한 토지의 확보를 통해 주거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집값’의 담장을 허물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할 수 있다. 위기와 재난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이웃이고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과 관계망을 함께 사유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평등한 토지는 지역 불평등의 해소로 연결된다. 사람과 자원이 없어 자연적 재난에 취약한 지방(지역, 시골), 그리고 사람과 자본이 너무 몰려 사회적 재난에 뒤덮이는 도시(서울)의 도-농, 도-지 모순을 양방향으로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과 전 방위적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3) 그린뉴딜에 부재한 주거정책, 녹색전환의 빈자리

사태는 심각한데, 담론의 한계는 크고, 대안은 희박하다. 우리에게는 녹색전환이 필요하나 그 빈자리는 사뭇 공허하다. 공생연구소는 함께 그린뉴딜을 공부하고 와쳐왔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와 불평등을 없애고, 일자리를 늘리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정책”¹¹⁾으로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위기를 막는다면, 탄소배출을 제로로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한다면 그 책략과 방향을 그린뉴딜이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풀어나가는 녹색전환이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에서 보듯 한국의 그린뉴딜은 무늬만 그린 뉴딜, 구린뉴딜, 그린워싱이 되었다.¹²⁾ 이 안에 기후위기, 불평등 해결, 사회적 안전망은 구호만 등등 떠다녔을 뿐이고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결할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구린 뉴딜 말고 제대로 된 그린뉴딜’을 외칠 필요가 있다. 그린뉴딜에 기후위기에 점점 취약해지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 보장과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방책이 들어가야만 한다. 부동산 계급·세습사회의 ‘제도적 규제’와 생태적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은 그린뉴딜이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책략이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의 불평등은 부동산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린뉴딜에는 왜 주거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길도 없을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그린뉴딜과는 동떨어져 진행되고 있다. 산업전환, 그것도 녹색분칠(Green washing)로 얼룩진 산업의 전환만으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맞설 수 없다. 특히나 주거문제는 기후위기에 직격탄을 맞는 부분이자 불평등의 상징과 실체와 같다. 한국에서의 그린뉴딜은 반드시 부동산 불평등을 녹색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11) 민중의 소리,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그린 뉴딜 리포트] 코로나19 경제대책, 그린 뉴딜로 나아가야 – 2022년 대선까지 열린 의제 ‘그린 뉴딜’”, 2020.4.13

12)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설 때 한국판 뉴딜의 내용은 몇 달, 그린뉴딜은 몇 주 만에 급조한 티가 확연히 드러난다. 비대면+스마트그린 산업을 육성하고, 전기차 개발에 자금을 쏟는 것이 전환의 골자다. 이 그린뉴딜에 농업정책은 스마트농업과 농촌 5G 통신망 설치뿐이고, 교육정책도 교실 5G 통신망을 설치하는 것뿐이다. 한국판 뉴딜 비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발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둘째, 기업 지원에 방점이 찍힌 것도 문제다. 셋째, 수소가 친환경이라는 상상도 헛되다. 넷째, 언택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터무니없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 같이 갈 수 있을까? 다섯 번째, 구체적인 로드맵 및 방향성의 부재에 대해서 남겨둔다. 그 외, 정부의 주무부처가 기준에 진행해온 정책과 모순된다는 점, 농업이 홀대받고, 자동차가 총아로 등장한 점, 재난을 틈타 자본을 강화하는 재난 자본주의의 속성에 대한 우려, 생물다양성, 생태부분이 공란인 점 등 비판하기에 짚이는 곳은 많다. (장윤석(노마),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③ 코로나와 그린뉴딜」, 생태적지혜연구소 미디어, 2020.09.02.)

2. 연구목적, 연구의의 – 땅과 집을 보는 시선, 토지·주거문제의 담론 전환

땅과 집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주거문제·토지 문제를 다루는 담론은 갖은 오류를 저질러 왔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제도권 대학 내의 분과학문, 혹은 주류 학계가 저지른 고립 혹은 분리의 오류가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과학은 ‘자연’을 외부화하고 ‘사회’를 독립적으로 사유해 오는 오류를 저질렀다. 이는 근대 경제학의 만행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기후 등 의 자연적 영향을 분석 혹은 연구에서 제외해 온 전력이 있다. 이렇게 될 때 기후 문제와 주거문제는 분리된다.

다음으로 ‘부동산학자’라는 이들이 으레 그러듯이 집과 땅을 철저한 수요-공급의 관점에서만 파악해서 모든 것을 돈과 물질로 환원하는 경제주의·물질주의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럴 때 정책수립자와 연구자들이 으레 그러듯 (계산되지 못한) 사람의 심리적 측면이 배제되게 된다. 문화, 삶, 정신, 심리적 측면의 복잡성이 주거문제를 둘러싸고 있는데, 화폐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것만을 지표로 삼아 문제 모색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에 일면적인 한계가 있다.¹³⁾ 지금까지는 부동산 문제를 불평등의 문제로만 치환하여 불로소득 추산과 불평등 통계에만 집중해왔다. 무척 유의미하고 필수적인 작업이었으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수요-공급과 소유여부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박탈감, 소외감과 같은 사회 심리적 영역과 공동체의 해체 등을 놓쳐 왔다.

이런 오류들은 편향된 담론장의 형성으로 이어져 문제를 총체적으로 사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에 부동산·토지 문제를 대하는 근본적인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느낀다. 문제의 심각함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 이를 총체적으로 설명해낼 이론적 접근은 늘 낡았거나 빈약하다. 청년주거문제의 심각함을 단지 통계적 수치로 드러내 만 한다면, 대안을 내놓기 위한 접근법을 모색하는데 ‘임대주택의 공급’ 말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상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이론의 공부와 활용은 긴요하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혹은 어떤 담론의 확장이 있어야 하는가. 어떤 대안의 제안이 있어야 하는가.

1) 기후위기와 주거문제의 교차성 모색

앞으로 닥쳐올 위험의 속성을 인지할 때, 기후 문제와 주거문제는 동떨어져 사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기의 교차성을 감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적 위기를, 주거문제와 기후 문제를 분절해서 사유했던 기존의 관행을 넘어야 한다. 더하여 기후위기 시대

13) 칼 폴라니가 말하듯이, “문화, 삶, 정신, 심리 어떤 존재 전반의 변환에서 오로지 화폐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편협한 계산방식이라고밖에 이름 붙일 수 없다.”

위험사회 속에서 ‘주거권’이 생존권임을 보이고,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관찰한다.

2) ‘토지정의’, ‘기후정의’ 담론의 제언

“집이 없으니 집을 지어라”는 명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식의 악행에 가깝다. 주택공급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진작에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공급의 문제라기보다 먼저 분배의 문제이며 그보다 정의의 문제다. ‘토지정의’ 담론을 소환하고 ‘기후정의’ 담론으로의 연결과 확장을 시도해본다.

3) 탑 다운에서 바텀 업으로 – ‘커먼즈’와 풀뿌리 관계망

주거문제를 객관적 거리를 둔 연구자가 관찰할 때 정태적인 사실들만 알아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관찰, 연구와 동시에 활동, 형성을 하려 한다. 그렇기에 풀뿌리 운동을 보려고 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경제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탑-다운(Top-Down)의 수직적·중앙 집중적 전환에 초점을 두곤 했다. 이는 전환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존의 문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급격한 전환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란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관찰하되, 이 근대적 관계에 균열을 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과 그 움직임들을 주목한다. 즉, 커먼즈-커머닝(Commoning)¹⁴⁾으로 이루어지는 바텀-업(Bottom-up)의 시도에 눈길을 보낸다.

4) 경제주의적 오류의 수정

그간 배제되었던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며 ‘경제주의적’, ‘물질주의적’ 접근을 파훼하는 길을 찾아본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오류를 교정할 좋은 실마리가 된다. 지오멘탈리티를 통해 현상의 근저에 놓인 기제 -이데올로기, 패러다임, 프레임-에 대한 논의로 담론을 확장한다. 다음으로는 ‘균형 잡힌 지오멘탈리티’를 논의의 한 가운데 위치시킴으로써 올바른 지오멘탈리티에 관한 윤리적 요청으로 제안을 이어가 본다.

14) 커먼즈의 관점에서 재화의 속성은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따라 넘나드는 것이다. 땅도 그러하다. 처음부터 사유지나 국유지였던 것은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종종 다른 모든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과 기억을 잃고 낙담하곤 한다. 커먼즈 담론은 이를 해소해 볼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다. 반드시 땅을 가져야만 우리가 땅을 향유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커먼즈는 말한다. 더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함께 향유할까 고민하고 실행할 관계를 맺고 집합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균열 내기’다.

3. 연구방법론

전환 담론을 제언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의 연구 전반에서 나타나는 기조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1:1, A->B의 관계만을 다루는 기준의 고립되고 단순한 연구방법론은 사태의 총체성을 해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숲을 보려 한다.

1) 문헌 조사 – 세미나

기후정의, 토지공개념, 커먼즈, 지오멘탈리티 이론의 공부와 문헌 조사를 통해 낯선 담론의 적용을 시도했다. 연구소에서는 본 연구의 과정으로 이 네 가지 주제 각각 한 번씩 연구소 세미나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참석한 이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듣고 토대 삼아 연구의 문제의식을 확장할 수 있었다. 세미나에서 나온 화두와 질문들로 만남을 위한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었다.

2) 질적 조사 – 주제 별 만남

이 연구는 위에서 확인한 중요성, 필요성, 빈자리에 전환의 담론을 끌어낼 아이디어를 소개하려는 ‘제언’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각지에서 활동하는 학자·연구자·활동가들을 만나 문답을 통해 수행한다. 앞선 탐구과정을 통해 생성된 문제의식과 질문들을 나누고 풀어줄 이들을 소개한다. △김혜미(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남기업(토지+ 자유연구소장) △안새롬(솔방울 커머너) △박순열(도시재생연구소 소장)

다음 3장부터 6장은 본격적으로 급진적이라 불리는 아이디어로 담론 전환을 모색 한다. △기후정의 △토지공개념 △커먼즈-커머닝 △지오멘탈리티를 각각의 연구원이 맡아 다루었고, 각 장은 1절 선행연구검토, 2절 만남, 3절 제언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3장에서 나경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밝히면서, '기후정의'의 관점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석한다. 그리고 기후운동과 주거권 운동의 연대를 제안한다. 4장에서 시원은 토지공개념을 통해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유화된 토지임과 토지의 공공성을 회복할 방안을 소개한다. 더불어 토지정의와 기후정의의 연결과 '헨리 조지의 녹색화'에 대한 확장을 제안한다. 5장에서 하연은 '커먼즈-커머닝' 이론을 통해 부동산 문제가 집값을 넘어 사람들의 피드백 작용과 관련 있음을 밝힌다. 더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함께 향유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토지를 모두의 품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실행할 관계를 맺고 집합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균열내기'의 커먼즈-커머닝이다. 6장에서 윤석은 '지오멘탈리티'라는 문화지리학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이론적 함의와 토지·주거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핀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오멘탈리티가 어떤지, 그 역사적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 앞에 닥친 미중유의 위기에 어떤 지오멘탈리티가 올바른지 윤리적 요청을 이어나간다. 7장은 연구의 결론과 코로나 시대의 공동연구에 대한 짧은 소감이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원 네 명의 색깔이 잘 묻어났으면 했다. 여러 가지의 이론 소개, 담론 제안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을 모아 어떤 조화를 이루었으면 했다. 사태의 심각성과 복잡성은 우리에게 넓은 시야를 요구한다. 연구 과정에 있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면도 있다. 기후위기와 주거문제를 더불어 생각하는 것도 그렇다. 우리의 연구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토지·주거문제의 전환 담론을 모색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 위기를, 주거 문제와 기후 문제를 분절해서 사유했던 기준의 관행을 넘어가 보려 한다.

III. 기후정의

이나경

1. 청년주거문제와 기후정의

1) 주거취약계층으로서 청년세대

수도권에 밀집된 고용의 기회는 청년기의 많은 인구를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하는 원인이다(정민우·이나영, 2011). 생애 과정의 규범성(oirmativity)은 청년에게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결혼을 통한 정서적 자립, 그리고 물리적 조건으로서 ‘내 집 마련’을 통한 공간적 자립을 요청한다. 그러나 청년은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고, 자립하기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이때 ‘살만한’ 공간을 장만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는 매우 제한적이며, 열악하다. 주거빈곤율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1인 가구 최저 14m²)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 비율-은 청년층에서 계속 늘고 있다. 주거 빈곤은 주택법이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지하·옥탑·비닐하우스·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것을 포함한 개념이다. 서울의 만 20~34세 1인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0%, 2010년 36.3%, 2015년 37.2%로 증가했다(통계청, 2018). 아래는 대표적인 청년의 주거 형태다.

첫 번째는 반지하, 불법 원룸, 고시원처럼 주거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곳에 사는 경우다. 대학가에서는 △방 쪼개기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옥탑방)을 쉽게 볼 수 있다. 증축이나 용도변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려면 주차장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건축물은 화재와 소음에 취약하다. 대다수의 세입자가 불법건축물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거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고시원은 수도권에 밀집된 하위 주거 형태로, 이주노동자, 비수도권 출신 대학생 등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놓인 이들이 수렴되는 공간이다. 고시원의 80%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노동 유연화와 청년 실업, 부동산 격차를 축으로 한 주거 불평등의 심화, 지역 격차 등의 조건에서, 고시원은 1인 가구 청년세대가 진입하기 용이한 주거 선택지다(정민우·이나영, 2011).

두 번째로, ‘셰어하우스’도 꾸준히 인기를 얻는 청년세대의 주거 형태다. 1인 가구의 고독과 고립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 셰어하우스는 임대차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다. 수익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 불법 방 쪼개기, 증축·개축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대다수 세입자는 ‘임대차 보증금 지원제도’, ‘보증금 보험제 도’ 등 정책 대상에 끼지도 못한다(최지희, 2019).

고독에 대한 문제의식과 달리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할은 부재하다. 세어하우스는 충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지에 속한다. 돈은 없고 수도권에 살 수밖에 없는 세입자는 이름뿐인 ‘셰어’ 하우스에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주거 정책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청년을 수혜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중심의 정책 설계를 꼽을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정상 생애주기이자 규범이며, 물리적 제약을 가하는 ‘제도’다. 정부의 결혼제도를 전제로 짜인 청년주거정책에서는 1인 가구, 비혼, 퀴어 커플, 다양한 가족형태가 제도에서 배제당한다. 청약통장을 이용한 임대주택 가점 제도 역시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정상가족’ 중심의 정책이다. 2014년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 보호법은 결혼제도 바깥으로서의 삶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었지만 입법되지 못했다(박범기, 2019). 다양한 제도마련뿐 아니라,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주택, 공동체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

2) 한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

왜 이토록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살기 어려울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전면화 되면서, 교육, 주거, 보건 등의 공공재는 인간 주체가 응당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닌,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써 간주되기 시작했다(구승우, 2016). 수도권 위주의 개발에 따라 일자리, 교육, 문화의 불균등함은 수도권 지역의 주거의 희소성을 증폭시키고 ‘부동산 자본’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다른 재화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실제 거주 목적 수요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및 투기 수요가 혼재되어 있다(한겨레, 2020).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소유와 재테크의 이중적 개념이 강하게 자리잡았다. 복지를 개개인(정확히는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내몰았던 한국 사회에서 집은 노후 대비 수단이자 저축과 자산증식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방안이었다. 부동산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더욱 희미해졌다.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 집을 가진 사람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고,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지금 사지 못하면 영영 원하는 주거 여건의 집을 사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개인이 이 부채를 감당하도록 떠넘기는 것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다(김윤상, 2019). 무주택자들은 시장에서 들어갈 집을 찾아야 하는데, 임대료 인상 등으로 민간 시장에서 쫓겨 다닐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하나 압박감에 시달린다. 주거 불안은 해결지 않고 계속된다(오마이뉴스, 2020).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하다. 오르는 집값, 잘 팔리는 아파트

는 따로 있다. 부동산 양극화 심화로 서울과 지역의 자산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부동산은 신분을 만들었고,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재진입할 확률은 희박하다. 집값은 토지 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토지 가격은 지역의 ‘경제적’ 발전 정도에 달려있다. 지역 발전이 일자리 창출로 측정된다면, 일자리가 많은 곳(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적은 곳은 떨어지게 된다(경향비즈, 2020). 또 다른 양극화의 원인은 ‘뉴노멀’이 된 저금리 시대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마련되면서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렸다(경향신문, 2020.8). 전 세계적으로 소득은 줄고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 상황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떠도는 채권과 금융자금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데, 이때 대규모 부동산 버블은 될 만한 곳(=인구 밀집 부유한 대도시)에 생기는 것이다. 가계가 직접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투자가 주식(동학개미운동)과 부동산에만 몰려있고 그 결과 자산 양극화는 심해진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누군가가 둑을 보는 반해, 집 없는 청년들은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로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어 부모 세대에게 의존이 불가능한 청년세대에게 자립의 기반은 주어지지 않거나, 열악한 형태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온 청년들의 비좁고, 습하고, 냉난방이 부족한 주거환경은 너무나 흔하다. 게다가 ‘젊은 시절 고생’은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은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은 곧 자연재해에 취약함을 뜻한다. 일례로, 주거 복지는 에너지 복지 문제로 연결되는데, 노후한 주택일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져 냉난방비는 더 많이 나오고, 겨울철에는 온갖 단열재에 돈을 들여야 한다. 그리하여 가난할수록 에너지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는 역설이 발생한다(시사인, 2015). 기후재난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코로나-19 상황도 주거 취약 계층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고시원 거주자의 경우, 채광이 나쁘고 환기되지 않는 주거환경 때문에 평소에도 기관지염, 피부염 등 관련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하다. 당연하게 전염병에도 취약하다.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집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되지만, ‘집에 머물라’는 의미는 사는 곳에 따라 제각각이다(서울신문, 2020).

3) 기후정의와 주거

‘21세기 인권침해의 주범은 기후변화’(조효재, 2015)라는 지적처럼, 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폭염, 한파 뿐 아니라 폭우, 태풍, 홍수, 대형화재로 주거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존권 침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옥스팜(Oxfam)이 지난해 발표한 ‘강제이주(Forced from Home)’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연간 2,000만 명이 집을 잃는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저소득 국가의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된다. 핵심은,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피해는 차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다배

출 산업과 기업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돌아간다. 기후정의는 바로 이 지점, 기후위기를 초래한 국가나 사람이 기후변화의 피해에 영향을 적게 받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가시화한다(홍덕화, 2019).

기후정의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 피해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역사적 책임과 동등한 참여에 기초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것에서 출발했다(홍덕화, 2020). 기후위기가 ‘인류 공동의 책임’이 아니라 가해국과 피해국, 가해 계급과 피해 계급이 뚜렷이 나뉘는 문제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불의’를 교정할 것을 요구하는 풀뿌리 환경정의운동, 원주민 환경운동과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t) 그룹은 선진국의 기후 부채 요구, 송유관건설반대운동, 이누이트 인권침해 청원 등 국제적인 기후정의운동을 이끌어왔다. 기후정의운동의 핵심 구호는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변화를!” 그리고 “이윤보다 민중과 지구를”이다. 기후정의는 꾸준히 기후위기로 사라지는 삶의 터전을 이야기해왔다. 집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다. 그런데 기후위기 앞에서 태풍, 허리케인, 해일, 장마에 휙쓸려 집은 무너지고, 잠겼다. 폭염에는 뜨겁게 달아올르고 겨울에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전염병이 퍼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집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공간이 여실히 드러났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안전한 주거환경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기후정의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도 고려한다. 기존 의사결정 과정은 전문가 주의를 바탕으로 기득권중심으로 대응정책이 결정되면서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되어 왔다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기후위기에 취약한 당사자들에게도 목소리를 낼 힘을 주어야 한다. 이를 ‘절차적 기후정의’라고 하는데, 분배적 기후불의를 해소하기 위해 누가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지 물으며 동등한 참여를 요구한다(Fritze and Wiseman, 2009; 홍덕화, 2020 재인용)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민주적 참여가를 요구하는 ‘정의로운 전환’ 담론도 절차적 정의에 해당한다.

4) 한국의 기후정의 논의

국내의 기후정의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며, 주로 선진국과 후진국, 현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책임과 피해의 불균등한 배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김민정, 2015). 최근 기후운동 영역에서 확산되는 기후정의 담론은 그린뉴딜(Green New Deal)과 함께 성장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 탈자본주의, 에너지전환의 공공성, 좌초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중심이 된다.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과 환경의 상생 대안으로서 논의되어왔다. 공적 투자와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적극적인 고용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을 과정으로서 요구한다(홍덕화, 2020) 최근에는 이 ‘정의’가 온건한 의미로 퇴색한 논의도 보인다. 고용 연계, 직업 재교육, 재훈련, 실업수당 제공 등의 보상 수준의 복지정책이 대표적인 예시다. 하지만 절차적 정의의 의미를 다시 확인

했을 때, 정의로운 전환은 고용, 보상과 규제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와 공동체가 전환의 계획과 실행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며 지속가능한 정치 경제체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김상현, 2020).

5) 기후운동과 주거권 운동의 연대

(1) 기후정의 담론에서 주거 논의의 필요성

기후운동 진영에서 기후정의를 논의할 때 주로 노동운동과 연대를 모색하며 담론이 발전해왔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주거·빈곤을 언급해야 한다. 첫 번째 이유는 기후정의가 기후위기의 원인과 대응에 있어서 계급분석을 끌어온다면, 부동산 계급을 언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김민정(2020)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특정 기후변화에 노출되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위치를 결정하는 건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불평등이다. 한국은 소득불평등 뿐만 아니라 ‘세습되는 불평등’ 즉, 자산불평등이 존재한다. 이 점을 짚지 않으면 현상 너머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소하는 기후정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 불평등 정책은 사회구조적인 불평등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계급관계 자체를 재구성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주요한 재분배 정책은 소득 재분배에만 초점을 둘 뿐 그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재산 재분배를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의 뿌리를 건드리는데는 실패할 수 있다(레이워스, 2017)는 비판도 꾸준했다. 근대적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해야 한다.¹⁵⁾

두 번째 이유는 기후정의가 남반구에서 시작되었으며, 남반구 민중들이 요구한 것은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가 지구를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토지를 사유화하고 임대하거나 임차할 수 없으며, 현재의 발전모델을 생명, 상보성, 호혜성,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자원사용을 우선적 원칙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¹⁶⁾ 주거를 기후정의 시작에서 보았을 때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다. 주거불평등이 기후정의를 보완해주고, 기후정의가 주거불평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주듯이 상호보완적 관계다.

(2) 뉴욕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풀뿌리 사회운동의 연대

기후운동과 주거권 운동의 연대 가능성은 뉴욕의 그린뉴딜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목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후정의단체 썬라이즈 무브먼트(Sunrise movement)는 “Housing is human right”라는 구호를 들었다. The Just Transition Research Collaborative (JTRC)의 정의로운 전환 보고서에서 법안 통

15) 근대적 소유권에 대한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토지공개념과 커먼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16) 이안 앵거스가 엮은 『기후정의』의 6부 ‘남반구의 외침’에는 환경파괴에 저항하는 남반구 정치지도자와 사회운동단체의 성명서 등을 여러 편 소개하고 있다. 원주민 지역공동체를 지키고 생명의 권리를 강조하며, 착취적 자본주의 체제와 군비 경쟁 등을 반대한다.

과 과정을 정리했는데, 이를 번역, 요약했다.

뉴욕시 그린뉴딜은 같은 목표를 가진 활동가 연합과 집단적 행동의 힘을 잘 보여주는 예시다. 주거권 운동, 노동조합, 환경주의자가 연대하며 주거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를 결합했다. 어떻게 ‘뉴욕시 그린뉴딜’이 통과되었을까? 뉴욕은 국제 권력의 중심이자 세계 금융의 중심이다. 뉴욕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 로비다. 1970년대에 제조업이 뉴욕을 떠나면서, 부동산 로비 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를 확장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역정치를 압박하고 있다. 뉴욕의 온실가스 배출량 70%는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데, 그 중 중대형 빌딩이 1/3을 차지한다. 그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요구하는 기후운동은 건축부문에 전환을 집중해야 했고, 불평등 의제를 갖고 싸워오던 주거권 운동 진영과의 연대가 가능했다. 주거권 운동 진영에서는 주(州) 차원의 임대료 규제 투쟁을 하고 있었다. 환경운동단체는 주거권 운동가와 협력하여 2050년까지 기준 대비 80~90%의 대기 오염 감축, 좋은 임금 조합 일자리 창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 아래 모였다.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경제적 정의 실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사회변화를 위한 뉴욕 공동체(York Communities for Change, NYCC)’는 유색인 저소득층 세입자로 구성된 주거정의 단체로, 기후변화와 불평등 문제가 세입자와 기후운동 양쪽 진영에 필수적인 담론임을 입증하며, 그린뉴딜을 향한 풀뿌리 운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OC)같은 전국적 수준의 정치인이 합류하면서 기준에 ‘노후 건물 법안(the Dirty Buildings Bill)’을 ‘뉴욕 시를 위한 그린뉴딜 법안(the Green New Deal For New York City)’으로 바꾸고 언론의 집중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안은 당시 빌 데 블라시오 뉴욕 시장과 코스타 콘스탄티누스 환경위원회 의장의 결정적인 지원을 받아 시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미 전역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뉴욕 부동산 역사상 가장 큰 혼란(Sun, 2019)”이라고 불렸다.

2019년 4월, 뉴욕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80% 줄이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선언했다. 구체적 실행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 동원을 위한 법(Climate Mobilization Act, 약칭 기후동원법 또는 기후활성화법)’을 제정했다. 핵심 규제 법안은 중대형 빌딩에 적용된다. 2024년부터 온실가스 초과량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중대형 빌딩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 의무화를 명시한다. 또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된 장기 플랜 ‘OneNYC 2050’의 8개 목표에는 모든 지역사회가 주거 부담이 적은 주택을 이용해야 한다는 ‘번성하는 지역사회’를 명시한다. 저소득층일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삶의 질 등 의 피해를 겪을 확률이 높으니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불평등과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수준까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야 기후변화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온전히 대처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이정찬, 2019). 그러나 여전히 임대료 규제나 공공주택같은 실행법은 없었는데, 사회주의 민주당 의원인 베니 샌더스와 AOC 의원이 2019년 11월, ‘공공주거를 위한 그린뉴딜 (Green New Deal for Public Housing Act)¹⁷⁾을 발표했다. 낡은 공공 주택를 개조하는 데에 10년동안 180억달러를 투자하는 법안이다. 또한 공공주택 건설 규제를 푸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AOC는 공공주택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이 번영하는 삶과 번영하는 커뮤니티의 토대’라고 주장한다. 그전까지 행정적으로는 공공주택 유지보수는 예산마련이 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린뉴딜을 결합하면서 노후화된 주택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건축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예산투입이 설득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두 가지다. 첫 번째, 그린뉴딜의 주요 정책이 부동산 규제와 공공주택에 초점을 맞춘는 사실이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¹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거는 안전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은 당연하게도 기후정의 시각의 그린뉴딜 정책의 중심이어야 한다.

두 번째, 풀뿌리 주거권 운동의 힘이다. 뉴욕시 그린뉴딜 법안에서 주거권 운동단체가 결정적 역할을 해냈고, AOC의 그린뉴딜 공공주택 법안 또한 임대료 규제 운동단체가 적극적으로 결합했던 풀뿌리 주거권 운동의 성과이지 영웅적인 정치엘리트의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다. 그린뉴딜은 새로운 먹거리,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최전선 약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기후정의 담론이 최근에 활발해졌으나, 주거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외국 사례를 주로 소개할 뿐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지 미진한 부분이 많다. 걸림돌은 무엇이 있는가. 요구할 주체들은 어디 있는가. 2장의 김혜미와의 대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17) 이 법안의 전문은 베니 샌더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sanders.senate.gov/download/gnd-housing-text>

18) AOC는 최전선 공동체(frontline communities)라고 정의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수온 상승, 폭염 및 한파, 사회기반시설과 생태계의 해손, 건강 악화 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발생이 국가 간, 지역 간, 계층 간에 불평등하게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 연령, 직업, 이동성, 사회적 고립, 거주 환경 등이 주요한 매개변수로 작동된다. 국가는 이와 같이 기후변화의 피해에 따른 취약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의 피해가 불평등하게 미치는 ‘취약 집단(vulnerable groups)’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만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2. [만남 – 김혜미] 기후위기, 새로운 사회복지

- 청년녹색당 공동위원장
-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간사

김혜미님을 처음 알게 된 건 2019년 시민정책포럼에서 주최한 ‘그린뉴딜, 도시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포럼의 토론이었다. 당시 그린뉴딜 공부를 시작하면서, 주요 발제도 인상적이었지만, 토론 순서에서 정책이 빈곤층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며, 주거취약계층이 그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된다는 김혜미님의 비판이 크게 와닿았다. 어쩌면 주거와 기후정의를 연결하려는 시도,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그 토론문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김혜미님은 2020년 초부터 청년녹색당 공동위원장으로 맡고 있으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의 간사로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비판하는 빈곤노인운동을 하고 있다. 연구자이자 정당정치인, 활동가인 김혜미님의 시선이 더 궁금해졌다.

이나경(이하 나경): 기후위기와 인권을 접하려는 시도도 많지 않은데,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없잖아요. 기존의 사회복지에서 다루는 주거빈곤이랑 엮는 사례도 많지 않고, 혜미님이 많이 고민하고 말하는데, 활동하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혜미(이하 혜미): 우리나라는 주택법이라고 해석하고 번역하는 내용이 외국에서는 다 ‘housing’이라고 되어있어요. ‘house’가 아니예요. ‘Housing’이라고 하면 ‘주거’라고 해석하고 ‘주거권’이라고 말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는 다 ‘housing’이라고 말하는 권리와 개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house’에 머물러 있는 게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주거복지의 개념이 지금까지는 ‘주택’법이었던 거죠. 최저 주거기준을 세우지만 몇 m^2 , 채광은 어떻게 들어와야 하고, 매우 추상적이거나 숫자에 얹매여있는 정도로 정의해왔던 거죠. 외국은 세세한 사례가 많아요. 미국은 최저 주거기준이 매우 세세하거든요. 변기가 어떻게 되고, 최저 주거기준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가장 체계화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4m^2$ 로 들어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영국은 $8m^2$ 예요. 작지만 그거는 그냥 방의 면적이고, 화장실이 따로 분명히 있어야 하고, 부엌이 있어야 하고, 거실같은 공간이 있어야하고 마당이 있어야하거나 외적인 걸 따로 계산하고 방만 8제곱미터인거지. 우리나라는 그걸 다 포함해서 $14m^2$ 거든요. 우리나라가 평수로 보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오멘탈리티, 땅의 개념이라든지, 집이라는 공간을 진짜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으로 보는 게 너무 확실하죠. 우리보다 복지가 잘 되어있는 국가는 ‘삶의 공간’으로 보는 거죠. 외국은 추울 땐 따뜻한 곳에 있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리욕구를 충분히 자신의 공간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에서 주거, 거주의 개념으로 확대되는 게 필요하고 연쇄적인 효과가 주거가 빈곤과

인권과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번역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담론을 깨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장윤석(이하 윤석): 큰 투쟁이 필요하겠네요. 프리하우징(free-housing) 운동이 한국에서 행복주택으로 번역된다고 하더라고요.

혜미: 영어를 잘하진 못 하지만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왜 주택으로 번역하냐는 질문 하나도 굉장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housing이 주택이 될까. 논쟁 자체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강의를 준비하면서 역사를 훑어봤는데 차지법이 발생된 게 조선시대였어요.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에 산업화 되면서, 한양으로 올라온 거예요. 시골에서는 다 자기 집이 있지만 도시엔 내 집도 땅도 없잖아요. 집을 빌리기 시작하고 계약 기간은 일 년이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거의 한 세기 만에 백 년 만에 4년이 된 거예요. 네 배가 된 거죠. 네 배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고, 문제가 많았고 전주여인숙사태 같은 사태가 매년 있었고. 70년 걸리고, 30년 걸려서 총 백 년이 걸린 거죠. 그걸 보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땅이 빼앗긴 거잖아요. 국토를 뺏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거라 되게 뿌리 깊을 수 있고, (해소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어르신들 만나서 기후위기 얘기해도, “전쟁 때보다 낫지.”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하시거든요.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겪은 사람과, IMF를 겪은 사람과,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사람들이 지금 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후위기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히려 너무 조급하게 가면 빨리 나가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진짜 너무 오래된 거예요. 우리 너무 빨리 실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경: 누구에게요?

혜미: 그냥 모든 사람에게. 나한테도 그렇고. 왜 바뀌지 않지? 조급함이 생기잖아요. 빨리 바뀌어야 할 문제고 내 생각은 너무 당연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빈곤 노인 운동이 저에게 도움이 돼요. 감각들을 깨워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면서 얘기할 때 이분들은 여전히 나에게 기운을 주고 싶으면 삼겹살을 사준다고 하고, 나는 비건 지향으로 살고 싶지만 그럴 때 ‘할아버지 저 비건이에요’라고 할 수 없는. 나에 대한 완전한 선의이기 때문에. (웃음) 그런 일을 한번씩 생기면 그런 생각을 하죠. 진짜 많은 설득이 필요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세대에게 ‘친절한 말걸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떻게 소통할 건지?

나경: 혜미님이 “기후위기에 계급적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기억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주거취약계층이라는 단어와 계급을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혜미: 계층이라는 말의 정의가 법마다 다 달라요. 사회적 기업 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정의해요. 그리고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이라고 정의해요. 생산력과 구매력이 있는가. 여기에 계급적 문제도 있죠. 기준에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걸 사람들 상식선으로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법률에서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가 찾아보는 게 흥미로워요. 저 말할 때 말장난 많이 해요. 이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크고, 법적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빈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법에서 내린 정의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윤석: 계급론과 계층론은 사회학에서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는데, 기후계급을 강조하는 건 피해받는 사람들의 집합이 있고, 집합적 주체를 만들 가능성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이해관계로 얹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세대의 계급성과 지금 여기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계급성을 같은 범주로 연결해볼 가능성을 찾는 것이고 저기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의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국가 안에서 더 취약한 계급성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의 계급이 연대할 가능성을 만들어질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후 정의를 얘기하면 계급이 크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제 정의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혜미: 어떻게 계급으로 묶어낼 수 있는가 고민이 필요하고, 묶어내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의 모든 현상을 언어로 만들어낼 순 없지만, 적어도 노동자계급이라는 말이 나왔던 건 자본가, 사용자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고, 그에 비해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나경: 사회복지체계가 빈곤층의 실제 삶을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하셨었는데,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혜미: 제가 지적하는 문제 중 하나가, 복지정책이든, 주거복지정책이든, 매번 새로운 정권에서는 신제품 만들 듯이 매번 새로운 정책만 만들어내요. 이전 정책의 정합성을 따지지 않아요. 기본주택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이 OECD 1위잖아요. 49%. 우리 중에 두 명이 빈곤노인이 되는 거예요. 네 명 중에 두 명.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1인 가구, 여성 가구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도입한 건데 오히려 제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는 제도예요. 사실 생계급여를 올리면 되는 문제였죠. 왜냐면 갑자기 빈곤노인이 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원래 빈곤했던 청년이 빈곤 노인이 되잖아요. 그런 고려 없이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인 빈곤 문제 해결할게. 기초연금 시작.’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보지 않는 거죠. 이런 체계가 주거정책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주택 만들고 국민임금주택 만들고, 뉴스테이 만들고. 이름만 다양해지고 제도는 복잡해지고 증명할 건 더 많아지고. 사실상 증명할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에게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나경: 부동산 문제가 세대 불평등 문제로 많이 얘기되긴 하지만, 노인빈곤을 생각하면 절대 세대론이 아니라 세습으로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혜미: 실제로 통계를 봐도, 50, 60대 남성층이 비적정주거에 제일 많이 살아요. 고시원, 쪽방, 여인숙 이런 데. 그럼 여성들은 어디에 사는가?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비적정주거에 사는 비율은 확실히 중년 남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거 빈곤은 어찌됐건 중년 남성들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와있다거나, 일자리가 서울밖에 없으니까. 이게 먹고사는 문제랑 관련이 없을 수 없는데, 직업이 다양하지 못한 거예요. 산업화 이후로 뉴딜정책처럼, 건설업체,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밖에 돈을 벌 방법이 없었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어디가서 대장장이나 공예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산업화 이후에 직업이 너무 단출해진 거죠. 사람을 도시로 내몰고, 도시는 사람만 많아지고 제일 가난해지고. 서울이 제일 부자지만 제일 가난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비적정주거에 사는 사람이 정말 많고, 쪽방이 대부분 광역시에 있어요. 지역 내려가면 다 빈집이고, 넓고 마당도 있고 텃밭도 가꿀 수 있는데.

나경: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죠. 갈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살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니까.

혜미: 또 예술가 마을 해놓으면 젠트리피케이션 생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어디가 잘 되면 빼앗는. 그런 게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직업이 너무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만이에요.

나경: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태계 파괴의 모순을 주거 간담회에서 언급해주셨는데, 지구 한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그 사이가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혜미: 그래서 저는 주거랑 기후운동이 빨리 만나야 한다고 맨날 생각해요. 지난번에 주거권 활동가하고 얘기했는데, 전부터 '0000'이 없어진 자리에 공원이 들어오냐, 임대주택이 들어오냐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과거에 골프장이 있던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환경단체가 등장한 거예요. 이러한 주장들이 지금 타협점을 찾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녹지에 대한 얘기를 잘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녹지는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환경에서 오는 재난을 축소할 수 있는 베풀목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습도, 온도 조절하고 해일이 왔을 때 회복탄력성도 있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모르는거죠. 지금 당장 집이 없는데. 제가 얘기를 했던 건, '거기 원래 그린벨트였고, 인간이 땅을 빼앗은 거다. 그런 건 고려해야 하지 않나. 인간이 살자고 야생동물 땅을 빼앗는 건 서로 힘든 존재들을 쳐취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래서 우리 만나야 한다. 서로 탓하지만 말고.' 지금 상태엣 녹지에 대한 보편적

인 생각은 경관이 좋다는 정도죠. 최저주거기준에 '근린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린공원 개념이에요. 사회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녹지에 대한 인식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인간 외 다른 존재들의 보금자리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인간 외 존재와 공생할 수 있어야 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얘길 하면 조금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코로나 19가 왜 생긴 것 같냐. 우리가 야생동물의 자리를 빼앗는 삶의 방식, 공장식 축산 문제가 연루가 되어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처음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경 : 주거의 공간이 주택에만 한정되어있군요.

혜미: 주택이 일정 부분 맞기도 해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택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빨리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짓는 집은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지. 한편에선 용적률을 높이자는 주장들도 나와요. 높게 짓자고 하는 거예요. 주택공급률이 서울에서는 96%밖에 안된다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4%가 아예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용적률을 높이면 새 어떡해?' 걱정하는 건 한가한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 생태문제가 아니더라도 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임대주택을 늘려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수도권 인구를 다시 서울로 옮겨오는 식으로 진행되면 도시문제가 더 심화 될 거라는 고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미: 주거운동에서도 고민하시죠. 저도 여기서 헛갈려요. 당장 서울역에 코로나가 오고 태풍이 오면 맨몸으로 맞서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에? 그래서 제가 직업의 다양성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역 가는 방법 우리는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들리지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지역에 집 한 채 주고 보낸다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쳐버릴 것 같다고 했잖아요. 신도시, 컴팩트 시티, 서울 외에도 예컨대 세종으로 정부청사가 이전하면 도시가 형성될 거다. 김경수 도지사가 주장하는 '권역별 메가시티'. 그것 때문에 제가 한동안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그런 상상력밖에 없는 거예요. 산업화해야 하니까.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죠.

나경: 그 고민이 너무 커요. 지방소멸의 반대는 서울과 닮아지는 것인가?

혜미: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조차도 완전 틀리다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제 지인들도 대안적인 삶을 살기위해 농사짓고 살지만, 자기 입에 풀칠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스마트팜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본주의와 기술만능주의가 친구가 되면서 정말 파국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어떻게 끊어낼까? 복작복작 뭐 해놓으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나가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아

는데 모르는 척할 수 없잖아요. 우아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상상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경: 앞선 현실에서, 그린뉴딜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혜미: 환경 얘기하는 사람들끼리만 더 이상 얘기해서는 안 되고, 주거, 경제 얘기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린뉴딜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단어에 대해서 모두가 거부감은 없잖아요. 물론 급진적인 생태주의자 분들은 단어가 싫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뉴딜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린, 뉴딜이 붙었을 때 분칠이라는 애길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형성한다고 봤을 때 그린뉴딜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생태주의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의, 소수의 소수지만 그린과 뉴딜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더 많은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고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경: 한국판 그린뉴딜이 ‘회색뉴딜’, ‘구린뉴딜’이라고 불릴 만큼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는데, 이후에 마음이 바뀐 게 있으세요?

혜미: 많죠. 그러나 정부에서 그렇게 던졌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린뉴딜에 관심을 갖고 변하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해요. 광주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린뉴딜 관련해서 강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어쨌든 이 사람들도 얘기를 들으니까 기후위기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광주도 뭘 해야 하는데, 그린뉴딜은 환경, 기후 이런 것 같은데 그쪽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해요.

윤석: 뼈아프네요.

혜미: 저는 복지국가운동을 하고 있고, 저는 복지국가의 대안적인 국가모델을 못 찾고 있어요. 어떤 복지국가냐가 다를 것 같고, 국가가 짧은 순간에 성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만연한 자본주의와 기술만능주의와 능력주의 안에서 우리가 틈을 찾아내는 거는 어쩌면 조금 비겁해지는 방법일 수도 있겠단 생각을 해요. 그린뉴딜을 정통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항상 옳죠. 저는 늘 귀담아듣고, 그렇게 얘기해주시는 분도 필요하지만, 사실 내가 만나는 당사자들의 삶을 그분들이 일분, 한 시간이라도 알까?

나경: 활동가로서는 다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석: 기후와 주거를 말하는 사람이 한 테이블에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혜미: 다른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로 모였던 건 기업들이었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모였다면, ‘그린뉴딜’ 아래에는 적어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 그게 기업일 수도 있고,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을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린뉴딜을 하는 분들이 이 판을 오랫동안 준비했잖아요. 물론 자본에 우리가 막히는 건 분명히 있지만, 저는 녹색성장과는 분명히 다른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탈성장 국면으로 나아가는 지향을 갖되 현실감각을 어디까지 가져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윤석: 복잡하네요. 쉽게 버릴 수 있는 단어는 아니네요. 정부안으로 많이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혜미: 그걸 어떻게 둘이킬 건지 대안이 있을까? 사회계약이라는 말로 변형할 순 있겠죠. 녹색사회계약이나 생태사회계약으로. 이런 말을 좀 더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린뉴딜만 비판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회계약, 새로운 국가가 필요하고. 저는 국가와 정부, 정치인이 필요하고 정당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도가 모든 걸 만들 순 없지만 변화를 만들 틈이 있고, 법이 모든 걸 대변할 순 없지만,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 요건이잖아요. 국가의 역할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시민을 대표할 사람이 필요해요. 모든 시민이 똑같이 힘을 쓸는 세상도 이상한 세상일 거예요. 모든 시민이 나서서 정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직접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데. (웃음) 그것도 너무 피곤한 사회일 거예요. 정당이 있어야 가장 약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 제가 봤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는 한국 그린뉴딜에 아무런 희망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국가가 자국민만 규정하니까. 석탄화력발전소로 헌법소원을 내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헌법에는 '국민'을 규정하고, 베트남 사람은 국민이 아니니까요.

혜미: 국가의 범위를 키우고 역할을 키우고, 시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저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데, 국가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state'의 개념이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가 국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안 쓰는. 국민 영어로 번역할 수 없을걸요.

윤석: 반대로 이번에 청년기후긴급행동에서 LEDS 대국민 토론회 난입했을 때, '국민'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전문가는 국민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잖아요.

소하연(이하 하연): 다음은 복지국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케인즈의 복지국가 모형이 완전고용을 바탕으로 전제하고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가 와서 자본주의의 풍요로움 안에서 가능했다는 글을 읽었어요. 복지의 전제가 자본주의의 풍요가 일정부분 도달했을 때 이루어지는데, 이제 더 이상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시기가 왔고, 생태위기를 맞이했잖아요. 이런 시기에 생태적 사회복지라는 게 있을까요?

혜미: 복지와 생태주의가 충돌하는 게 많죠. 사회복지는 일단 인프라를 무조건 지어야 하고. 이런 것부터 이미 어긋나기 시작하고 굉장히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20년에 와서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왜 유효하냐고 물었을 때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복지국가를 쌓아온 나라들이 생태에도 훨씬 더 예민하게 측을 세운다는 거예요. 독일도 그렇고. 저는 적어도 복지국가를 말하면서 생태문제를 말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도 생태 안에 살고 있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인간만 얘기하는 건 거짓말 같아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말하기 시작했으면 생태문제를 당연히 먼저 말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있어야 복지국가도 존재할 수 있는거잖아요. 이미 지속가능한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국가가 무슨 소용이에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생태복지국가> 책도 있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시원(이하 시원): 저희 부모님이 사회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환경문제 얘기 할 때, 열심히 사회 고쳐봤자 지구가 망하면 아무 소용없는데 뭐하고 있는거냐고 그랬거든요. (웃음) “엄마 아빠는 사회만 고치면 되겠지만, 우리는 지구도 고쳐야 하는데. 어른들이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그 말이 생각나요.

혜미: 맨날 저도 많이 싸워요. 자연이 있고 사회가 있지, 사회 있고 자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아직도 해요. 맨날 하고. 어떻게 나를 설명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지점이니까. “넌 왜 녹색당에 들어갔어?”라고 물었을 때 설명해야 하니까. “난 생태주의 안 하는 복지국가는 뻬이라고 생각해. 있을 수 없어.”

윤석: 요즘 ‘빈자의 환경주의’라는 말에 꽂혀 있는데,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롭 넉슨, 에코리브로, 2020)라는 책 보셨나요? 느린 폭력으로 사라져가는, 천천히 갈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에게 환경주의는 무엇인가.

혜미: 이제 설득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그 작업을 하지 않아요. 시민 간담회를 해도, 지금 아무리 지자체장은 들으면 이해하고, 동의하겠지만, 그 지자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동의하겠나. 정말 중요한 것은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말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간사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 얘기다. 아까 주거운동과 기후운동이 만나야 하는 것처럼, 기후 운동이랑 빈곤 노인들이 만나야 하고. 노인들한테도 책임감을 주는 거죠. 당신들이 선배 시민이었고, 경제성장 일궈준 것 감사하다. 우리는 지금 경제 위기에 더해서 기후위기라는 더 큰 위기를 맞았다. 이걸 같이 극복해야 하지 않겠냐 설득해야 하고. 어르신들은.. 올겨울이 따뜻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름보다 겨울이 더 힘들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추운 게 힘드니까. 근데 겨울이 따뜻한 거예요. 올겨울이 따뜻해서 얼마나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유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따뜻할 수 있는 집에 살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쯤 생각

해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이때쯤이면 파카를 꺼내서 입어야 할 때인데, 지금 왜 덥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경: 맞아요. 당사자를 불러와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최근에 기후위기의 증인들 프로젝트도 인상 깊고. 저는 그린뉴딜 강연할 때, 늘 마음에 남는 게 “그린 뉴딜은 있는데 당사자가 없다. 노동자들이 안 오고, 세입자들이 안 오고, 풀뿌리 운동이 돼야 하는데, 풀뿌리 시민들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연결점이 너무 약하다는 그 말이 너무 공감해요. 삶하고, 담론이 진행되는 곳이 유리되어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걸 생각해봐도.

혜미: 뿔뿔이죠 풀뿌리가 아니라. 초대하지 않아요. 노동자들이 올 수 없는 시간도 아니고. 차가 없으면 올 수 없는 공간이고.

나경: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이유, 계기는 무엇이고 녹색당에서 활동하는 계기가 궁금합니다. 보편적인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와 다르다고 느껴지기도 해서요.

혜미: 그렇죠.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면 기관에 취직하고, 사회복지사를 하거나. 저는 지방대를 나왔고, 간혹 제 지인들도 저를 이해를 잘하지 못하고, “그래 우리 혜미 좋은 일하지” 이렇게. 하다보니 이렇게 훌러와서 저는 제가 자연스러운데, 주변에서는 너무 신기하죠. 갑자기 출마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피선거권 얻자마자 출마한 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 변방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힘이 돼요. 그냥 약간 기후위기를 팔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이 만나는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요. 사회복지사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실 사회복지사도 당사자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가 터지고 사회복지사는 대면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인데, 비대면으로 갑자기 바꿔야하니까 사회적 재난을 맞는 거죠. 그리고 만약 내가 어디서 걸려서 내 당사자가 걸리면 트라우마가 되는거예요.

나경: 최근에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많았잖아요.

혜미: 사회복지사들은 트라우마가 생기고, 수해복구도 다 가서 하거든요. 자원 지원 연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하죠.

나경: 기후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혜미님은 기후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혜미: 잘 모르겠어요. 기후도 잘 모르고, 정의도 모르고, 기후 정의는 더 어렵네요. 이게 뭘까 생각은 계속 하지만, 이건 진짜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가해와 피해의 폐미니즘』(권김현영 외, 2018) 책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생태주의와 폐미니즘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기후위기의 피해자가 너무 명확하다고 토론회에서 얘기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하거든요. 정말 명확한가. 그런데 이번에 강준모 선생님이 탄소발자국으

로 쪽방촌에 사시는 사람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탄소배출을 안 한다는 사실을 계산하셨더라구요¹⁹⁾.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했어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본인도 고민이 많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학자들을 주목하게 할 수 있을까. 강준모 선생님 그분이 쪽방에서 일 년째 살고 계셔요.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이랑 되게 친하고. 저도 사실, 드디어 쉐어하우스로 이사했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했어요. 쉐어하우스가 대안적인 주거 모델이 될 수 있는가. 공유공간을 충분히 공유하고 독립공간을 유지하면서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삼 일만에 처음 대화해봤거든요. 분리수거 어떻게 하냐고. (웃음)

윤석: 전에도 모여 살고 빌려 살고 나눠 사는 것이 주거라는 관념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셨죠.

혜미: 더 지을 수 없다면, 우리는 모여 살고 빌려서 살아야 하고,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나는 평생 내 집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같이 살면 내 집을 가질 수 없는 건, 특히 서울에서. 확실하다. 진짜 주거가 1가구 1주택 담론을 넘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이 사회를 건너고, 그렇게 하면, 정말 주택이 아니라 주거와 거주의 개념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입자와 임대인 임차인 간의 프렌드쉽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집이 많은 것 인정해, 하지만 나는 너네 집을 빌려 살 수 있을까, 나는 집이 없으니까. 이런 게 돼야 하죠. 우리는 항상 갑을 관계이니까. 빌려서 산다는 것, 나눠서 산다는 것의 개념을 갑을관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 거죠. 나는 그게 자본주의를 깨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요. 있는 사람 거 빼어서 없는 사람 주자, 이것도 좋지만, 있는 거 나눠서 없는 사람 주자. 그게 권리일 수 있다. 다섯 채 가진 사람에게 집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았잖아요. 모두가 이 사회의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시원: 동네에서 이번에 공유냉장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집에 남는 음식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말고,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게 하자. 사람들이 자꾸 이거 가난하지 않아도 가져가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가져가라. 이건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공유가 목적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남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해 놔서 가져다 놓는 거예요. 동네 대학생들은 쌀독에서 쌀 퍼가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나니까, 나도 받는 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망을 형성하는 게 좋아요.

혜미: 나도 많아져야지가 아니라, 많이 가졌으니까 나한테 좀 줘라, 이렇게 말할 수

19) 강준모(2020)의 '기후격차와 사회복지의 역할: 동자동 쪽방촌 사례연구'는 동자동 쪽방촌의 탄소발자국을 계산하고 폭염(재난)을 어떻게 체감하는지 묻고 사회복지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연구에 따르면 서울 거주 1인 가구와 동자동 쪽방촌 거주자의 탄소발자국은 각각 12.53톤과 3.84톤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는 이동의 빈곤과 에너지 빈곤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서울시 여름철/겨울철 쪽방주민 보호대책이 물품 나눔이나 이벤트성 복지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있는 사람. 저는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대요. 주제가 미분양 된 집에 가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걸 2년 했대요. 들어가서 자고, 밥 해먹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신혼부부 를 데려가서 요리도 해 먹고 그랬대요.

나경: 저는 그게 영국이나 이런 단독주택이 있는 국가에서 가능할 줄 알았는데, 한국 아파트에서 그게 가능하구나.

윤석: 유럽에서는 빈집점거운동이 많죠. 네덜란드는 24시간만 버티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고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요. 빈집점거운동을 스콰팅 (Squatting)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거주권을 획득한 스콰트(Squat)들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전쟁'이란 말도 있어요.²⁰⁾

나경: 오늘 주거 개념의 재구성부터, 기후위기와 주거운동의 단절, 그린뉴딜의 희망, 담론에서 배제된 사람들, 현장의 감각, 나눠 쓰고 모여 사는 삶의 권리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눴네요. 계속해서 대화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20)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없다. 스콰팅은 1970년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고, 도시빈민 주거운동으로 자리잡았다. 스콰팅은 철거를 막고, 낙후된 도심지역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3. 제언 - 주거불평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자

1장에서는 ‘내 집 마련’은커녕 주거취약계층으로 내몰린 청년들, 그 원인이 되는 한국 부동산 계급 사회를 간략히 짚었다. 그리고 주거불평등을 기후불의로 다뤄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2장에서는, ‘Housing’, 주거 개념의 확장, 그리고 환경운동과 주거권운동의 단절과 연결 가능성은 희망적으로 짚었다. 기후재난으로 삶이 바뀌면서도 동시에 무심한, 느리게 바뀌어가는 현장의 감각도 들여다보았다. 3장에서는 기후정의가 규범을 넘어 현실 정치에서 실현되길 제안한다. 과학자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다양한 수치를 보여준다. 모두 인류의 잘 못이기에 인류가 사라져야 한다는 종말론적 시나리오가 나오기 쉽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더 늦기 전에 대안적 모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²¹⁾

1) 책임과 피해를 함께 해결하기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계층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전환은 불평등을 심화한다고 지적한다(홍덕화, 2020).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원인체공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차별적 피해는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 시 벌금을 부과하는 뉴욕시의 규제 정책처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산업, 그리고 중대형 빌딩에 처벌을 가하고 책임을 묻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주거, 더 넓게는 토지와 관련된 불평등을 교정하는 방안은 토지공개념 파트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토지공개념에서 다루는 ‘천연물 기본소득’도 기후정의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해당한다.

국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지원제도 등에 대해 이미 많은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한상운 외, 2019). 그러나 기존 폭염, 재난 취약계층 정책에서는 주거불평등 구조 자체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취약계층 보호정책도 더 깊은 수준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고, 용어부터 부동산과 주택 대신 ‘주거’로 바꾸기를 요구한다. 한국 부동산 구조의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청년임대주택은 임시적인 요법일 뿐 청년주거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우리 사회 전반을 바꾸는 소유권의 전환도 다소 과해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토지가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공공재로 보장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상품화되는 구조를 교정할 것을 요구한다.

2) 전환 과정에서 시민 주체의 참여

기후정의는 단지 주거취약계층이 기후위기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을

21) “종말론적 시나리오에서 진실의 요체는 이것이다. 손을 쓰지 않는다면,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이 제기하는 도전은 더 늦기 전에 사람과 지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안적 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김현우 외 (역) (2012). 「기후정의」, 이매진. 원저: Ian Angus (2009). The Global Fight for Climate Justice)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기부양 전략으로서 녹색전환을 제시하는 녹색 케인스주의적 접근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내세우지만 정치사회적 세력관계의 재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진 않는다(홍덕화, 2020). 그러나 사회적 구조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정치사회적 세력관계에 노동자, 원주민이 기후위기 대응 주체가 되듯이, 세입자, 주거취약계층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정의 네트워크(climate Justice Now! Network, CJN)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²²⁾ “기후위기의 해결책은 산업 국가와 거대 산업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될 해결책은 환경을 보호해온 원주민, 여성, 소농과 가종농, 어부, 숲에 의존하는 공동체, 젊은이, 남반구와 북반구의 소외되고 피해 받는 공동체에서 나올 것이다”

주거 빈곤층 또한 기후재난의 피해대상 혹은 재난 지원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주체가 되어야 한다. 2장의 김혜미와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제도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지 않는 주거정책은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토론회와 포럼 페널로 취약계층 당사자를 초청하고 적어도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에 행사를 주최하는 등 사소한 노력도 풀뿌리 전환의 일부다. 정책의 당사자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듣고, 그들을 전환 주체로 불러와야 한다. 전환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되지 않는 것,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보장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전환 과정의 민주적 참여는 선언의 언어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뉴욕의 주거권 운동 사례가 보여주듯이, 의회 정치에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3) 쾌적한 주거와 생태 보존이라는 딜레마

당위성과 별개로, 우리의 현실에서는 몇 가지 결림돌들이 있다. 노동과 환경이 흔히 갈등관계라고 여겨지듯 주거환경도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도시의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 이때 산이나 공터가 개발되고, 개발과정에서도 화석연료를 소비하여 환경파괴에 부딪힌다. 비도심 지역에 ‘삶의 질을 높이는’ 도로를 만들고 편의시설을 짓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삶의 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여겼던 지표들이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주거가 물리적인 ‘주택’의 동의어였다면, 녹지, 지역 사회, 공공의 공간도 주거의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 1장에서는 단지 주거불평등과 주거취약계층을 집의 크기나 에너지효율의 열악함으로 규정했지만, 사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2장 대답에서 문제제기하듯, 쾌적한 주거는 배타적 공간인 ‘집’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주거는 주택을 넘어서야 하고, 재난을 버텨낼 회복탄력성을 갖는 녹지처럼 다양한 요소가 주거를 구성한다. 재난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직접

22) 2008년 12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국제기후변화협상을 비판한 성명서 일부로, 「기후정의」(2012)에서 발췌했다.

적 재난 노출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보험, 소득, 지식,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회복탄력성의 격차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주거는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불러온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환경과 공존해야만 안전한 주거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삶의 질’에 대한 재고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고소득 국가들이 보여준 놀라운 경제성장은 대부분 저렴한 화석 연료를 얻으면서 비롯되었고(레이워스, 2017) 서울의 발전 역시 마찬가지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화석연료의 막강한 에너지로부터 비롯된 부유한 물질적 번영을 누리려면 지구 3개가 필요하다.(이미 한국은 초과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지구는 하나뿐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지역이 서울과 같은 부유한 인프라를 가질 수는 없다. 이미 우리는 3개의 지구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와 환경 보존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안전망을 갖추면서도 자연의 한계 안에서 작동하는 경제를 상상하자. 기후정의에서 이 논의는 부족한 편인데, ‘도넛 경제’, ‘도시 커먼즈’ 담론에서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4) 마치며

이 연구는 최근 한국의 기후운동에서 주거불평등에 관한 언급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0년은 눈에 보이지 않던 기후위기가 코로나, 긴 장마 등 다양한 모습으로 가시화된 해였다. 기후재난 앞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폭발해야 할 시점이다. 일례로, 지난해 5월 출범한 ‘라이더유니온’은 기자회견에서 배달 노동자의 폭염, 폭우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빙하 위의 북극곰과 아스팔트 위의 노동자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는 표현을 썼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거 시설에 사는 저소득층도 언급했다. 주거권 운동 진영에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국제협약에서 규범적 의미의 기후정의와 주거 보장을 다루고는 있지만 강제적인 정책도, 그것을 요구하는 풀뿌리 운동도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기후위기와 주거를 같이 논의해야만 한다는 제안 자체다. 우리는 기후정의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불평등 해소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불평등 없는 경제적 정의 실현이 기후위기의 원인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주거는 인권이라는 가치 아래에서 안전한 집의 중요성, 재난이 찾아왔을 때 상호의존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 빈집의 공유화 등 전환의 담론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토지공개념과 커먼즈 등의 논의에서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와 토지 담론의 대안적 요구는 커먼즈와 토지공개념에서 오랜 시간 넓고 깊게 축적해왔다.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땅을 보는 관점이 어떠하지 이해하기 위해 탈자본주의적 소유개념을 들여다봐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를 폭로하고 기후정의를 외치며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는 시도들이 이어지길, 기후정의가 토지정의까지 뻗어나가길 기대한다.

IV. 토지공개념

이시원

1. 헨리조지의 녹색화

1) 들어가며

(1) 지금, 헨리조지를 보는 이유

공생연구소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와 주거문제의 교차점과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며 새로운 담론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헨리 조지가 던진 “왜 사회는 눈부시게 진보함에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질문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그가 지적한 토지문제의 근본원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이 되고 토지의 사적소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점점 극심해져 왔다. 이를 해결할 대안 담론을 모색하기 위해 헨리조지의 이론을 통해 부동산-주거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보려 한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불황 문제에 더해진 극심한 불평등과 환경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1-2) 토지공개념 다시보기는 선행이론 탐구로 헨리조지의 핵심이론인 분배이론과 불황이론을 중심으로 <진보와 빈곤>에서 이야기하는 토지공개념을 살펴본다. 토지공개념 이론은 토지의 사적 소유가 왜 토지 불로소득과 투기를 발생시키고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지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헨리조지의 이론을 통해 지금의 부동산 공화국과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1-3) 현대의 토지공개념 이론 검토에서는 헨리조지의 사상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 조지스트들의 이론과 제안이 지금의 기후불평등과 토지불평등을 해소할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현실성과 환경친화성을 중심기준으로 두고 선택, 검토한다. 첫 번째는 전강수의 제안이다. 전강수는 ‘진보와 빈곤’의 내용을 중심으로 헨리조지의 경제 이론을 재조명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방안으로서 토지공공임대제를 제안한다. 토지공공임대제는 토지불평등과 불로소득환수, 투기 방지에는 효과적으로 사료되나 기후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토지불평등이 해결된 이후에 남는 소득격차와 서울중심주의, 문화격차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김윤상의 논의를 살펴본다. 김윤상은 지공주의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특권 없는 세상”으로 해석하며 특권이익을 지대로 보고, 지대환수를 통한 공평한 사회를 제안한다. 또한 평등한 자유와 토지원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토지원리를 천연자원과 환경으로 확대 적용한다. 그를 통해 기후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남기업의 제안은 앞에서 본 김윤상의 토지원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남기업은 천연물을 재원으로 삼아 환수한 지대를 국민 모두에게 배분하는 “천연물 기본

소득”을 제안한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과도한 환경파괴와 한국의 격렬한 조세저항을 극복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사료된다. 이 제안이 토지정의와 기후정의를 확장-연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선행이론탐구와 대담을 통해 살펴본다.

(2) 용어 정의

토지공개념의 이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래에서 사용될 용어의 의미를 짚는다.

토지: 인간이 만들지 않은 모든 자연적 요소.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 자연에 의해 무상으로 주어진 것은 자본으로 분류될 수 없다.

-지대: 토지의 요소 소득²³⁾

-노동: 부를 생산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인력은 자본이 될 수 없다.

-임금: 노동의 요소 소득. 인간의 모든 노력에 대한 대가.

-자본: 토지나 노동. 이 두 가지 본원적 생산요소의 결합에 의해 생산된 것만이 자본.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한 부.

-이자: 자본에 대한 요소 소득

-부: 교환가치를 갖는 모든 물자를 지칭한다.

2) 토지공개념 다시 보기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핵심은 다음과 같다.

“부의 집중이 계속 확대되는 원인은 토지의 사적 소유에 있으며 토지의 사적 소유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지속적인 진보에 필요한 평등과 자유를 파괴하게 된다. 해결은 토지 및 천연자원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흔히 ‘토지단일세’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것은 토지와 천연자원의 가치를 조세로 걷고 그 대신 다른 조세를 철폐하자는 내용이다. 자유시장사회에서의 경제적 대가는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자신의 생산적 노력을 통해 사회에 공급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토지가 생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든지 간에 그것이 토지 소유자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토지는 자본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없다.” (George, 1988)

헨리 조지가 가장 역점을 둔 경제 분석은 분배 이론이었다고 한다. 그가 진보 속에서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했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는 진보 속의 빈곤도, 불황도, 모두 토지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물

23) 요소소득은 생산요소에 대하여 보수로 받는 임금, 지대, 이자 따위의 소득을 말한다.

질적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대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지대를 차지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부유해지지만 대중은 상대적으로 빈곤해진다는 것이다.

(1) 분배 이론

생산물은 생산과정에 생산요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임금, 지대, 이자로 분배되기 때문에 다음의 항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text{생산량} = \text{임금} + \text{이자} + \text{지대}$$

$$\text{생산량} - \text{지대} = \text{임금} + \text{이자}$$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지대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면 임금과 이자의 합계는 생산량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게 된다. 관건은 물질적 진보에 의해 생산량이 증가할 때 지대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리카도가 농지 지대 결정이론으로만 활용했던 차액지대론의 적용범위를 광공업용지와 상업용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로 확대했다. 경제 전체의 소득분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모든 토지에서 노동과 자본을 동일하게 투입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액과 한계지 생산액의 차이의 의해 결정된다. 한계지란 사용 토지 가운데 가장 열등한 토지로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지대가 발생하지 않기에, 그 생산액은 이자와 임금으로만 분배된다. 그 이상의 토지에서는 생산액 가운데 한계지 생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대로 분배되고, 나머지는 이자와 임금으로 분배된다(전강수, 2012).

ㄱ) 인구증가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

헨리조지는 집적의 이익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들면 분업이 용이해지고 기술 개선의 성과가 파급되며 거래비용이 감소되어, 그 지역의 토지생산성이 올라간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집적의 이익이 위치가 좋고 생산성이 높은 우등 토지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면 지대의 상대적 크기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인구가 증가할 때 생산액에서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임금 + 이자’의 상대적 크기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산액보다 지대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이 경우 대중은 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지게 된다. 결국, 물질적 진보와 함께 인구가 증가하면 지대는 생산액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그 결과 빈곤은 심화된다.

ㄴ) 기대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

물질적 진보에 의해 기대효과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기대란 미래의 토지가치에

대한 것이다. 모든 진보하는 지역에서는 지대가 꾸준히 상승하고 사람들은 이를 지켜보며 미래의 토지 가치가 확실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런 기대로 인해 토지를 이용목적이 아니라 더 높을 가격을 받을 목적, 즉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려 한다. 이들은 그것을 최선의 용도로 투입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적당한 시기에 팔아 높은 가격을 실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면 곳곳에서 토지가 유휴화되고 그 결과 한계지는 생산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위치보다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생산액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계지가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 지대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임금+이자’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상대적 빈곤뿐만 아니라 절대적 빈곤이 발생하는 것이다.

(2) 불황 이론

헨리 조지는 진보 속의 빈곤과 주기적 불황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으로서 토지 독점을 지목했다. 토지 독점은 어떤 토지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소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상태, 즉 배타적 소유-토지의 사적 소유를 의미한다. 토지 사유제 하에서 모든 부의 근원이자 모든 노동의 터전인 토지가 독점되어 소유자 외에는 토지 그 자체와 그 혜택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다. 때문에 부가 증가하는데도 빈곤이 심화되고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주기적으로 불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기대’를 불황의 기본 원인으로 파악했다.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토지 투기를 유발하고 생산을 압박하여 불황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미래에도 토지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사회에 확산되면 토지 투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토지 가치는 정상적인 상승 속도를 초과하여 상승하기 시작한다. 헨리 조지는 이를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이라고 묘사했다.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심해져서 노동과 자본이 통상의 대가를 얻지 못할 정도가 되면 토지와의 관련성이 높은 부문에서부터 생산 중단이 일어난다. 생산 중단이 수요 중단을 초래하고 그것이 다시 생산중단을 초래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나서 중지되지 않고 계속되면, 전체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게 된다. 투기가 일어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듯이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다. 지가가 투기적으로 상승할 때 토지와 관련이 깊은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과열이 발생한다. 건설 부문과 금융부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과도한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고 지가 상승이 없었다면 개발가치가 없었을 지역까지 마구 개발하는 것이다.

(3) 헨리 조지의 정책 처방 : 토지단일세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 이론은 토지와 자본 간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조세를 부과하면 개인의 노력 없이 증가된 토지 가치를 사회의 공통적인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토지의 사적 소유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도 살릴 수

있다. 반면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단순 보유하면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토지를 보다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조지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토지를 공동소유로 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평등지권)을 보장함으로써 토지로부터의 혜택을 균등하게 향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방법은 조세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토지가치세제라고 불리는데, 형식상 토지소유권은 기존 소유자의 수중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대의 대부분을 조세로 징수하고 그 수입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이다. 토지 가치세 외의 방법엔 토지 자체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 또 토지를 공유로 한 상태에서 사용권을 민간에 넘기는 대신 사용료를 제대로 징수해서 그 수입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토지공공임대제가 있다. 헨리 조지는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자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든 국가의 토지가치총액은 정부의 공공경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세입 충분성’ 명제를 내세웠다. 그에 기반하여 “토지 가치 이외의 대상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 헨리 조지가 주도했던 사회운동이 단일세 운동으로, 당시에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단일세주의자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에서 유래한다(전강수. 2012).

3) 현대의 토지공개념 이론 검토

앞에서 분배이론과 불황이론을 중심으로 <진보와 빙곤>에 담긴 토지공개념이론을 살펴보았다. 헨리 조지의 이론은 토지불평등의 핵심 원인이 토지사유화에 있다는 것을 짚어냈고 그 지적이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점에서 큰 합의를 가진다. 그러나 당면한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서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을 탐구하며, 그의 이론과 제안을 주거-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헨리조지의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땅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지 않은 모든 자연적 요소.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George, 1988)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지점은 토지공개념의 환경친화성의 바탕이 된다. 토지공개념의 환경친화성이 기후정의와 토지정의를 확장 연결하는 기재가 되어 주리라 생각하였다. 전강수와 김윤상, 남기업 세 조지스트들의 이론과 제안을 살펴보며 현대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서의 토지공개념을 살펴보려 한다.

(1) 전강수의 제안 - 토지공공임대제

전강수는 헨리조지의 이론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이고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헨리조지는 토지 그 자체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방법과 토지공공임대제의 의미를 과소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과 아시아의 싱가포르처럼 정부가 토지 매입을 통해 국공유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관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나라들도 있다. 조세

징수를 넘어선 지출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토지 가치세 수입 사용의 혜택을 똑같이 누리게 하려면 그 세수 총액을 인구수로 나누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의 후계자들은 거기에 사회적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평등지권 보장의 유력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전강수 2012: 170).

전강수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운동도 결국 사회적 배당금과 연관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토지+자유연구소에서는 이 논의를 확장해 토지 보유세를 걷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강수는 현실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부동산정책 과제의 추진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토지 보유세 강화, 토지공공임대제 도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시장침체기의 단기 정책 운용이 그 핵심 주제 4가지이다. 이 중 전강수가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하다며 핵심적으로 주장한 “토지공공임대제”에 대해서만 추가로 검토 한다.

ㄱ) 토지공공임대제

토지공공임대제는 정부가 국공유지를 확보한 후 계속 소유하면서民間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두되 임대료는 정부에서 걷는 것이다. 그렇기에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의 자유와 임대기간 중 토지 사용권 처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가치대로 걷으면 토지에서 불로 소득이 발생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게 된다.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토지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기 어렵다.

해외에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나라 전체에 토지 공공임대제를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등은 국지적으로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해왔다. 영국의 전원도시와 호주의 캔버라, 미국 뉴욕의 배터리파크 시티처럼 토지공공임대제의 원리를 도시건설에 적용하여 성공시킨 사례도 있고, 미국의 토지 단일세 마을처럼 공동체적으로 이 원리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전강수, 2012).

ㄴ) 전강수 제안의 한계

헨리 조지의 이론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지 섬세히 고민해야 한다는 전강수의 제안에 따라 토지공공임대제에 대해 검토했다. 전강수의 제안인 토지공공임대제는 토지불평등과 불로소득환수, 투기 방지에는 효과적으로 사료되나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를 막을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토지불평등이 해결된 이후에 남는 소득격차와 서울중심주의, 문화격차 등의 문제 해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전강수의 토지공개념에서 이야기하는 ‘토지’는 땅과 부

동산에 갇혀 있고 토지 불로소득을 해결한 뒤에 남아있는 여러 사회격차들까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공공임대제는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넘어서 기후위기에 당면한 상황에서 토지정의와 기후정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땅’에 국한된 한계를 넘어서야 토지공개념의 환경친화성을 더 부각할 수 있다. 토지를 ‘자연’으로 넓혀 사유하고, 기후정의까지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김윤상의 토지 원리와 문화 격차, 소득 격차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특권 없는 세상”에 대한 제안을 살펴보려 한다.

(2) 김윤상의 제안: 토지원리 확장과 특권 없는 세상

김윤상은 대표적인 조지스트 중 한명으로 토지 사유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 등 특권적인 사회제도와 관행을 비판해 온 학자이다. 김윤상(2004: 42)은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는 토지원리를 확립한 뒤 천연자원과 환경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는 토지정의와 기후정의를 확장 연결할 대안책 모색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지공주의에 기반한 토지원리는 토지가 인간의 생산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 모든 자연, 천연자원과 환경 등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그가 확립한 토지원리에서 ‘토지’를 ‘자연’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아진다.

- 가. 모든 국민은 자연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나. 사회적 필요성이 있으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단독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단독사용을 인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ㄱ) 자연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 ㄴ) 단독사용에서 생기는 특별한 이익을 환수하여 같이 나눈다.
 - ㄷ) 단독사용을 인정하는 사회적 취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김윤상은 토지 이외의 천연자원 즉 광물, 석유, 천연동식물, 오존층 등은 특정인이 이를 사용하면 같은 시대의 다른 사람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일단 사용해버리면 그 존재량이 줄어 버리기 때문에 후손도 배제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렇기에 특정인이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면 고갈피해액이나 자원대체비용 환수가 가능해진다. 환경 또한 특정인의 사용이 타인과 후손들을 배제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환경은 회복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기에 오염 피해액 내지 환경회복비용으로 환수 가능하다. 환경파괴가 심각해지며 공동의 환경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오염하는 자에게 환경세 등의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인식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김윤상은 토지원리를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창출한 공동의 자원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뒤에서 다룰 커먼즈 담론과 확장 연결될 수 있는 지점으로 보인다.

앞에서 전강수의 제안이 토지불평등 외에 소득격차와 서울중심주의, 문화격차 등

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없음을 비판한 바 있다. 김윤상이 주장한 “특권 없는 사회” 논의에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김윤상은 시야를 넓혀, 토지소유권처럼 ‘지대’를 넣는 갖가지 특권에 주목하며 “특권 없는 사회”를 설계하였다. 소득의 원인에는 노력, 운, 특권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 중 특권은 “자신의 노력과 운에 비해 남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인을 말한다. 누군가 특권을 가지면 다른 누군가는 배제 또는 차별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김윤상: 2019) 그는 토지소유권, 탄소배출권, 남성특권, 인종특권, 학별특권, 정규직 특권 등 사회의 다양한 특권을 분석해냈다. 특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생기는 부당한 불평등을 막기 위해 특권 이익을 환수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 함을 주장한다. 토지 특권이익 뿐만 아니라 기타 특권 이익에 대한 지분이 모두에게 있다. 그렇기에 헨리조지의 사상은 기본소득의 정당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토지공개념을 확대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특권이익을 지대로 상정하고 환수함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함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공주의에서 노력의 결과는 노력한 자에게 귀속되고 특권이익은 환수된다. 김윤상이 그리는 특권 없는 지공주의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며 시장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세상인 동시에 이념갈등이 해소되는 세상인 것이다(2019: 45).

(3) 남기업의 천연물 기본소득

앞에서 김윤상의 ‘토지원리’ 확대와 ‘특권 없는 세상’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를 통해 토지소유권과 탄소배출권의 지대를 환수할 이론적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환수한 ‘지대-특권이익’은 어떻게 분배 또는 사용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을 남기업의 토지 보유세와 기본소득 연계모델, 그리고 이가 확장된 “천연물 기본소득” 제안에서 찾아보려 한다.

토지+ 자유연구소 소장인 남기업은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토지 보유세와 기본소득을 연계하였다. 토지보유세로 거둔 모든 세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자는 것이다. 남기업(2004)은 토지를 인간이 만들지 않은 모든 자연적 요소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생산요소인 토지의 소유권은 사유로 두고 토지에서 나온 요소소득인 지대는 공유로 두는 헨리조지의 대안적 경제체계가 가장 환경 친화적이라고 주장했다. 헨리조지의 대안적 경제체계는 물과 공기 같은 자연자원의 오남용을 억제할 수 있고 한정된 자연자원들이 고갈되거나 오염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앞의 주장은 “천연물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으로 이어진다. 그는 천연물의 극단적 사유화가 현 코로나19사태의 주범이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천연물을 소수가 독점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극단적으로 사유화하는 방식이었고 이것이 사회경제적 주요였으며 환경파괴의 근원이었다(남기업: 2020)”는 것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고 그만큼 모두가 누려야 할 자연환경을 사유화하

는 것이다. 김윤상은 토지공개념이 자본주의에 합당하고 시장 친화적이라고 주장함과 달리 남기업은 ‘자본주의 없는 시장’을 이야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앞의 주장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 두 학자의 공통된 논의를 통해 다른 이와 후세대를 배제하는 토지독점과 환경파괴, 탄소배출로부터 지대와 책임비용을 환수할 이론적 토대가 확보되었다.

남기업(2020)은 지금의 난개발과 탄소배출, 기후위기의 원인이 천연물의 극단적 사유화이므로 이에 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천연물로부터 얻은 세금(토지세, 탄소세 등)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자는 “천연물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이 제안이 토지정의와 기후정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가장 적합해 보인다. 또한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 판단된다.

4) 단으며

앞에서 헨리조지의 토지공개념 이론을 탐구하며 ‘토지의 사유화’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임을 밝혔다. 토지의 사적소유는 사회의 불평등과 난개발, 자연파괴와 기후위기를 만들어냈다. 배타적 토지 사유화의 피해는 사회의 약자에게 가중되어 돌아간다. ‘토지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토지공개념이 이루려 한 ‘토지정의’ 만으로는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토지불평등과 기후불평등은 결국 국 공통 원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토지정의와 기후정의 또한 확장 연결 되어야 한다. 대안을 찾기 위해 현대의 조지스트 3명의 이론을 탐구해보았다. 김윤상의 ‘토지원리확대와 특권 없는 사회’ 제안은 전강수의 토지공공임대제와 기준 토지공개념 논의의 ‘토지정의’ 폭을 확장해 ‘기후정의’와의 연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로 살펴본 남기업의 “천연물 기본소득” 제안이 탄소배출권과 토지소유권을 규제하고 조세저항을 없앨 토대를 마련하므로 기후정의와 토지정의를 함께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없는 시장’은 어떻게 가능할지, 토지공개념 담론을 끌어가는 주체는 누구로 상상되고 있는지, 비슷한 결을 지니고 있는 커먼즈와 토지공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등의 질문이 남았다. 2장 남기업 소장과의 대담을 통해 질문의 답과 “천연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자.

2. [만남 - 남기업] 토지공개념과 천연물 기본소득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시원: 안녕하세요. 저는 공생연구소의 이시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토지정의'와 '기후정의'를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며 "헨리조지의 녹색화"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선생님이 쓴 글 중, 기후 위기 상황의 근본 원인을 천연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사유화라고 밝히며,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천연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헨리조지의 녹색화"와 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이 천연물기본소득으로 확장된 과정과 천연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기업(이하 남): 헨리조지의 토지공개념이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이 지체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는 분배를 제대로 할수록 성장과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거죠. 2010년대 이후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죠. 우리 조지스트가 그쪽으로 눈뜬 건 얼마 안 됐어요. 해외 조지스트들도 토지공개념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얘기는 해왔는데, 정책으로 고민하는 단계까지는 못 갔죠. 기후위기를 당면하고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면서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걸 토지공개념하고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천연물 기본소득"이 나오게 된 거죠.

시원: 왜 '천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나요?

남: 우린 토지하면 땅만 생각하는 데 개념상으로 다 토지거든요. 경제학적 개념으로는 토지하고 자연자원,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 모두를 토지라고 해요. 그런데 토지하면 이미 떠오르는 이미지가 굳어져있기 때문에 천연물이라고 썼습니다. 천연물하면 토지만 떠오르진 않죠.

시원: 토지공개념을 천연물 기본소득으로 확장하거나 지대, 사유화된 이익을 공공재로 전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기후위기와 연결하신 것이 인상 깊었어요. 환경을 고갈, 파괴시킨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여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 기후 위기 상황에서 그 기업들의 환경파괴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탄소세 등의 논의를 진행할 때도 설득력을 부여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사람들의 조세저항은 확실히 줄어들 텐데 기업들한텐 더 큰 저항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단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저항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남: 저한테 기본소득은 저항을 넘는 수단으로 다가와요. 조지스트들이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토지세를 올려야한다는 주장을 해왔어요. 토지세를 올리는 대신 소득세, 부가세 등 생산 활동에 부담을 주는 세금을 깎아주자고 했죠. 소득세를 내는 대신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세를 많이 내는 거죠. 근데 토지

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소득을 적게 버는 사람이 있으니 1대1 관계가 되지는 않아요. 결국 다수가 원해서 더 강력한 지지 그룹과 정치로 해결해야 해요. 기본소득을 하면 ‘아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지지자가 형성되니 조세저항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수단적인 생각으로 접근한 거예요. 땅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별로 올라가지 않는데 조선일보가 희한한 예를 찾아서 기사 내고 확대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집이나 땅을 가진 가구가 1350만 세대고 850만 세대는 땅을 안 가지고 있어요. 1350만 세대는 토지세가 올라가는 걸 안 좋아하니 정치적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하고 붙인 거예요. 탄소세나 자원고갈세 같은 것도 당연히 회사 법인들은 싫어하겠죠. 그런데 환수액을 배당으로 나눠주니 다른 쪽에 강력한 지지그룹이 형성 되는 거죠.

토지세, 탄소세, 자원 고갈세 등이 시행되면 법인들은 자원을 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대응할 거예요. 전 소비만 환경친화적으로 해서는 지금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생산 자체를 자연자원을 덜 쓰고 재활용 가능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품단가가 올라가게 돼요. 사실 상품단가가 올라가야 소비자들도 상품을 재활용하고 과잉소비를 줄이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상품단가가 올라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 저소득층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불평등한 세상에서 환경정의를 말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텐 환경정의고 뭐고 배고픈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불평등이 완화돼야 사람들이 환경이라는 가치를 생각할 수 있게 돼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차단하면 지금보다 평등해지죠. 그럼 생태적 전환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거예요. 생산도 오염과 자원사용을 덜 하게 하고 소비도 상품단가를 올려 재활용하고 저소비 하도록 양쪽을 다 공략하는 거죠. 그렇게 경제적 유인 구조를 바꿔야 해요.

윤석: 지금의 코로나상황에서 볼 때 기본소득과 토지자유연구소가 연계해서 정책 고리를 만들어왔던 게 앞을 내다본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칼럼을 읽으면서 토지세와 탄소세가 다른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대를 근대적 소유체제에서 나오는 배타적 소유의 부정의한 부산물로 보면요. 지대를 교정했을 때 누군가 공공의 커먼즈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소유하며 교란시킨 시장과 극심화된 불평등, 토지와 연결된 자연과 대기까지 회복시킬 수 있단 거죠. 그런 교정세로서 인식할 때 토지세와 탄소세 연계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헨리조지 이론에 베이스를 뒀을 때 토지세와 탄소세를 하나로 묶고, 토지정의에 기후정의를 올릴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이 생길 것 같아요.

시원: 이번에 공생연구소에서는 기후정의와 토지공개념, 커먼즈와 지오멘탈리티 이

렇게 네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커먼즈 논의와 토지공개념 논의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커먼즈와 토지공개념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 토지공개념을 영어로 찾아보다 당황했어요. 우리말로는 지공주의(地公主義)가 토지공개념인데 영어로는 그냥 조지주의(Georgism) 아니면 커먼즈(Commons)더라고요.

남: 기본소득운동 하는 사람들은 커먼즈보다는 ‘공유부common wealth’라는 말을 써요. 천연물은 ‘자연적 공유부’, 데이터 같은 건 ‘인공적 공유부’로 구분해요. 전 인공적 공유부는 복지의 재원으로 하고, 자연적 공유부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만약 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주려고 하면 또 복지를 위한 재원이 있어야 하죠. 그건 인공적 공유부를 재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천연물 같은 자연적 공유부 같은 경우엔 모든 사람이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단 게 너무 분명해요. 시원씨도 나도, 오늘 태어난 아기도 모두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죠.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땐 권리로서의 의미가 강한 것을 찾아야 해요. 내가 누렸어야 하는데 못 누린 것, 원래 내 건데 빼앗겼던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인공적 공유부는 n분의 1의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기본소득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개별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식’도 인공적 공유부라고 하는데 인류가 누대로 쌓아온 지식을 시원씨는 이용하고 남기업은 이용 못하게 했다고 하면 누군가를 배제한 게 되죠. 그럼 배제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시원씨는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보고 능력을 배양하는 일에 썼고, 나는 그걸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안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인공적 공유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기엔 조금 억지가 있어요. 그런데 복지의 재원으로는 쓸 수 있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부모로부터 그런 능력을 물려받은 것, 지식을 이용해 소득을 많이 낼 수 있는 환경, 이런 운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운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환수해서 복지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정당한 것 같아요. 운을 중립화하기 위해 소득을 환수해서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데 활용하는 거죠.

시원: 전 커먼즈 논의에서 단순히 공동자원, 공공재만이 아니라 그를 공동자원화 해가는 ‘공유실천가-커머너’와, ‘공유실천-커머닝’ 모두를 ‘커먼즈’로 보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과정과 주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풍부해요. 커먼즈와 토지공개념을 비교해 볼 때 근본적인 결은 같은데 토지공개념은 더 정책적인 논의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토지정의를 실현해 나갈 때 그 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로 상상되고 있는 것인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남: 커먼즈에선 주체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하나 보네요? 저는 이론과 정책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있어서 누구와 같이 할 것인가, 이런 운동론적인 방법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죄지스트 그룹 안에 ‘희년 함께’라는 그룹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토지사유제가 팽배한 지금의 사회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나가는 거죠. 지금의 제도 안에서 토지의 공공성을 부분적으로라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또 공동체 토지신탁, CLT라고 하는 그룹의 전은 호씨가 열심히 지역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지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지제도는 국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경의선 공유지 운동 등도 의미 있는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지만 그런 결음으로는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이는 거죠. 어쩌면 기질인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일거에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거예요. 토지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귀납적 사례들이 많아요. 하나의 원인으로 몰아지는 것이 바로 토지 불로소득의 문제예요. 이걸 집중해서 없애야 수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시원: 토지공개념 관해 공부하며 전강수님의 ‘토지의 경제학’ 책을 읽고 고민이 되어 강의를 찾아듣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토지불로소득과 토지불공평을 해결한다고 해도 소득격차나 지역 간의 문화격차, 소유한 재산의 차이 등의 문제는 남아있을 것 같은데 토지 불로소득을 해결하는 걸로 충분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전강수님은 토지불평등이 사람들을 한 맷하게 하니 최소한 이걸 해소하는 작업이지, 그 이후의 일까진 자본주의 안에서 해결되기 어렵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기후위기와 급박한 사회 문제들에 당면한 지금, 토지공개념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남: 시원씨가 얘기했듯이 불로소득을 환수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토지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전강수 교수님은 토지 정의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또 새로운 영역에서 애를 써야 한다는 식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토지정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문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그것도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수도권에 인프라가 집중되는 것도 수도권 사람들의 토지 독점, 땅 값을 올리려는 이기주의에 기반하죠. 만약 토지공개념이 실현되었을 때 수도권에 인프라를 집중시키면 수도권 땅 소유자들이 돈을 더 내야 하니 지방도 골고루 잘 살아야지, 왜 여기에만 집중 시키냐고 할 가능성성이 높아요.

시원: 확실히 여러 지점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확장하는 작업이 중요하겠네요.

앞에서 천연물 기본소득에 대해 제안하셨는데 그처럼 천연물을 공공재로 보고 토지세나 탄소세, 자원고갈세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남: 기본소득 하는 분들 중에 탄소세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님이 스위스의 탄소세를 사례로 해서 탄소세를 주장하고 있어요. 스위스 탄소세는 굉장히 유명하고 점점 더 많이 걷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소득으로 지금하니 사람들이 더 확대하자고 하나 봐요. 경기도 공론조사 결과, 토지세보다 탄소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어요. 기업이 더 많은 탄소세를 내게 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위기도 예방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겠죠. 토지세는 보유하고 있는 땅에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내야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협의의 의미-토지(땅)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는 나라는 없어요. 광의로 보면 자연자원도 토지이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알레스카를 사례로 볼 수 있죠. 알레스카는 주민 전체가 석유판매기금으로 매년 100만원~40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누리고 있어요. 토지세를 걷으면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되겠죠. 토지세를 적게 거두면 토지 투기가 덜 일어나고 많이 걷으면 안 일어날 거예요. 한번 맛보면 후퇴하기 어려울 겁니다.

북유럽의 나라들이나 복지제도가 굉장히 완숙기에 접어든 나라들은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을 거예요. 복지국가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런 4대 보험을 다 낼 수 있는 노동자, 완전고용을 전제로 해서 설계됐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며 완전고용이라는 것이 어려워지고, 사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 들죠. 복지국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발전하면 과거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재교육시켜서 재취업 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복지의 수준이 낮아서 이제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단계에 있죠. 다른 복지국가를 보면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등을 많이 걷어서 복지의 재원으로 사용했어요. 2010년대만 해도 '서구는 GDP당 세금 걷는 비율이 훨씬 높다. 우리도 더 걷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한참을 더 가야하는데 무엇을 재원으로 해야할까. 이 때, 천연물에서 재원을 걷어 기본소득으로 가보자는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생태적 전환이 중요한 화두로 올라왔고 기본소득도 논의의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토지가 좋다는 게 많이 알려졌어요. 기본소득과 매개해서 천연물을 공유화하는 방향으로 복지를 강화해나가 보자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면 서구와는 완전히 다른 복지국가 모델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시원: 전강수님과 김윤상님은 토지공개념의 실현을 자본주의 하에서 얘기하시는데 선생님 칼럼에서는 '자본주의 없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새로웠어요. 그에 대해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 자본주의는 토지를 극단적으로 사유화하는 방식이죠. 전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할 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시장경제를 긍정하는 거죠. 시장경제는 자연 발생적인 건데 그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남는 걸 서로 교환하고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것, 자기 일에 시간을 적게 투입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일이거나 탐욕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홀로 모든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분업과 협업을 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경제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토지부터 시작해서 독점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자본주의 없는 시장경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제 과제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극복이에요.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토지 사유제 폐지고 그와 생태환경을 연결하고 싶어요.

시원: 네, 연구와 관련된 질문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정의와 평등**에는 어떤 장면들이 있나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이나 상이 다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토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폭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이루고자하는 사회의 모습이 다르다고 느끼기도 했고요. 선생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남: 정의로운 사회,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림이 있죠. 시원씨하고 비슷해요. 성경의 **희년**에서 찾죠. 김상봉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회복이라는 것. **관계 회복**.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회복,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주체적이고 주인이 돼야 하거든요. 자유롭고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으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 천연물이 그 재원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만남이 충만한 사회**, 그것이 제가 꿈꾸는 사회죠. 자연과 인간의 만남도 그렇게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서가 말하는 희년도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7년에 1년씩 자연도 쉬게 하고, 7번 쉬면 그 다음해에 또 쉬게 합니다. 3500년 전에 자연을 착취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오늘날 생태환경적 관점으로 보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경계를 회복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런 사회가 내가 지향하는 사회죠. 그를 위해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3. 제언 - 토지공개념의 확장과 천연물기본소득에 대하여

1장 선행이론탐구에선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맥락과 현대 조지스트들의 제안을 토아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기후불평등과 토지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토지(=천연물)의 사유화임을 알 수 있었다. 토지정의와 기후정의를 확장 연결할 대안책을 찾기 위해 전강수, 김윤상, 남기업, 세 조지스트의 제안을 보았다. 그 결과 자연자원, 환경으로 확장된 김윤상의 토지원리에 기반한 남기업의 “천연물 기본소득”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2장에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과의 대담을 통해 기후정의와 토지정의를 확장 연결할 대안정책으로서의 “천연물 기본소득”에 대해 논하였다.

3장에서는 “천연물 기본소득”이 시사하는 바와 토지공개념의 한계점을 짚는다. 인간 내의 ‘불평등과 특권’에 대한 고려를 넘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회복하는 “인간 종 특권”에 대한 사유를 제안한다. 이를 적용해, 기후위기 시대에서 토지정의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토지세와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는 “천연물 기본소득”의 효과와 의의

2장의 남기업 소장에서 “천연물 기본소득”이 기후정의와 토지정의를 실현할 대안정책으로 적합하고,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정책임에 대해 논했다. 천연물을 재원으로 지대를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국민의 85.9%가 납부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순수혜 세대가 되기 때문이다 (남기업, 2020). 이를 통해 강력한 지지그룹을 형성할 정치적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본소득이 조세저항을 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천연물은 모두가 동등하게 누렸어야 하는데 빼앗겨온 권리이므로, 권리로서의 주장에 정당성이 부여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도 합당하다.

김윤상은 지공주의가 토지문제를 넘어 특권 전반으로 시야를 넓히면 특권 이익을 의미하는 ‘지대rent’를 공유하자는 사상이 된다고 말했다. 지대를 “특권이익, 즉 다른 존재를 배제시키고 타인의 뜻을 가로채서 얻는 이익”으로 확장해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김윤상의 지대 정의를 가져오면 토지로부터 나오는 요소소득-이익을 환수하는 것과 환경파괴, 자원사용에 대한 책임비용을 부과하는 것 모두를 지대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토지세-탄소세 연동 모델이 가능해지고 이는 기후불평등과 토지불평등을 해결할 교정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정의와 토지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책인 것이다. 1장의 선행이론 탐구 과정에서 김윤상과 남기업이 ‘자원고갈세’와 ‘환경오염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당장 실행할 만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속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탄소세와 토지세를 “천연물 기본소득”的 재원으로 가져가고자 한다.

탄소세와 토지세를 재원으로 “천연물 기본소득”을 실현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선 토지투기가 사라져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결할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기업들이 환경파괴와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상품단가가 올라가 무분별한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과 자연자원사용이 줄어들어 기후위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의 유휴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농지나 녹지가 개발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더 이상 그로부터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과소유를 막고 불평등이 해소되며 더 나은 조건의 집이 분배될 것이다. 이를 통해 소유권을 넘어선 주거환경의 평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생존이 급해 환경적 가치를 실천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여유가 생기며 새로운 상상과 행동이 가능해진다. 삶에서 집과 부동산의 비중이 낮아지며 다른 선택지로의 문턱이 낮아진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속에서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재난을 견딜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도시 인프라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선 도시 커먼즈, 도시사회학적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이 대안책이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남기업 소장이 2장의 대담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과 매개해서 천연물의 지대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복지를 강화하면 서구와 완전히 다른 복지국가 모델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2) 토지공개념의 확장; ‘인간 종 특권’의 사유

토지세와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는 “천연물 기본소득”이 효과적인 대안정책임을 짚어 보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실현가능성을 봤을 때는 적합한 대안정책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추가로 보완, 확장 되어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 남기업소장과의 대담 중 “회복,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회복, 수평적인 만남이 충만한 사회를 꿈꾸죠. 자연과 인간의 만남도 그렇게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는 문장, 그리고 ‘주체’에 대한 논의를 곱씹으면서 토지공개념이 더욱 확장되어야 할 지점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환경은 미래세대에서 빌려온 것’이라는 경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체제는 제시되지 못해왔다.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자연환경의 공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대안적 경제체제에서 자원의 고갈이나 오염은 미래세대의 사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배제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부여된다.”(김윤상: 2002)

위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토지공개념 이론과 지대환수의 설득기제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과 현 세대의 미래 세대 배제로서 인간중심적 사유로 펼쳐져 왔다. 토지정의가 인간 집단 내부의 불평등,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수억의 생물종 대 인간종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에겐 인간으로 인해 멸종 되어가는 수백만의 생물종과 균형을 잃은 지구생태계에 대한 책임을 사유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후손의 것을 빌려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것을 뺏어 쓰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앞에서 김윤상의 논리를 빌려와 지대를 “다른 존재를 배제시키고 타인의 뜻을 가로채서 얻는 이익”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배제되는 존재에 인간 외의 생물종을 포함해 사유하고 자연을 동등한 주체로서 사고해보자. ‘특권 없는 사회’에서 ‘특권 없는 세상’으로의 확장을 통해 “인간 종 특권”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연과 다른 종을 동등한 주체로 사유하여 “인간 종 특권”의 특권이익을 환수해 생태계를 복원과 정의로운 전환에 소요되는 전환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 토지 세와 탄소세를 재원으로 한 천연물 기본소득을 분배할 때 우리가 파괴, 착취한 자연의 뜻을 고려하여 회복비용이나 전환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계산과 연구가 필요하다. 만약 이 지대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해 순수 혜 세대가 다수 나오고 자연회복비용과 전환비용으로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면 기후 정의와 토지정의를 실현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만큼 효과적인 대안책으로 기능하지 못할지라도 ‘자연’을 동등한 ‘주체’로 논의하며 환경파괴와 타 생물종 배제에 대한 특권이익을 분배하는 새로운 상상 자체에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제안에서 논의되지 않은 커머닝, 안전한 공간과 녹지, 지역 커뮤니티의 실효성, 생태적 지오멘탈리티 등에 대한 고려는 뒷장에서 추가로 펼쳐질 것이다.

V. 커먼즈-커머닝

소하연

1. 커먼즈로 집합적 주체를 창출하기

1) 들어가며

우거진 나무들을 밀어버려 드러난 불그스름한 속에 파란 비닐 막을 덮어놓을 때마다, 다가지고 파헤쳐진 붉은 속이 쓰리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곳에 이내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거기에 사는 알 수도 없이 많은 삶의 자리를 빼앗는 것에 분개해 한다. 그러나 나 자신도 수많은 삶을 밟고 서 있다. 나 역시 수없이 산을 파헤치고 나무를 뿌리 뽑으며 산다. 우리는 상호작용하는 관계 안에서, 어떻든 그 위에, 이 땅에 밭을 붙이고 살아간다.

기후위기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도, 거기에서 모든 것이 뚝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서 어떻든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뿐 아니라 지구에 사는 다른 생명과 함께 살 수 있는 방식일까?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닐까. 지구라는 그물의 일부인 우리가 자연 안,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 머리를 모으고 웅성웅성 고민을 나누고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커먼즈를 말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수히 많은 주체가 무수히 많은 방식의 관계를 맺어가며 함께 고민에 대한 답에 가까워지는 일일 것이다. ‘산다는 것’과 무척 가까이에 ‘거주하는 것’, ‘주거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야 할까?

2) 커먼즈란 무엇인가

common은 ‘공통적인’, ‘공통적인 것’을 말한다. 주로 공동-, 공통-, 공유-에 -재, -자원, -장, -체, -경제, -도시 등이 붙어 쓰인다.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것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에 따라 커먼즈들은 차이를 드러낸다(커먼즈번역네트워크 외 2인, 2018).

3) 커먼즈의 문제의식

공동의 것이어야 할 많은 것들이 분할되고 사유화되어 상품이 되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국유와 사유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관계들에 대한 무수한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커먼즈는 전환 담론으로서 이야기될 수 있다(안새롬, 2020).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해 어쩌면 제대로 실마리를 잡았다는 희망이 생긴다.

공동체의 기본적인 필요나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공동으로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이 존재해왔다. 앞에서 언급했듯, 커먼즈는 공동으로 누리고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 자꾸만 자본의 영역으로 흡수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되었던 국가주의 모델은 국가/시장 이분법 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하고 심지어 국가의 이름으로 커먼즈를 탈취하고 상품화해왔기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4) 커먼즈 이론들

커먼즈는 다양한 층위에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각각의 커먼즈가 어떤 차이를 가졌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없다면 그 개념에서 혼란이 생기기 쉽다. 안새롬(2020)은 커먼즈의 작동방식에 따라 커먼즈 이론들을 나누는 기술적 커먼즈론을 살펴보고, 이것이 시스템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는지에 따라 수정적 커먼즈론과 변혁적 커먼즈론으로 나눈다. 그리고 이를 국가와 시장과 맺고 있는 관계로 다시 한 번 구분한다. 권범철(2020)의 연구는 커먼즈를 '자원 관리 제도로서의 커먼즈'와 '사회적 전환의 관점으로서의 커먼즈'로 나누어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을 틀어보기 위해 적당했다. 그러나 작동방식과 시스템의 변화, 국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커먼즈를 구분하는 안새롬(2020)의 연구는 커먼즈를 한층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토지를 커먼즈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하여 이러한 구분을 따라가 보려 한다. 또한, 기호, 정보, 아이디어, 이미지, 정동, 사회적 관계, 돌봄 노동 등 비물질적인 커먼즈에 집중하는 변혁적 커먼즈는 안새롬(2020)의 대기 커먼즈 연구에서처럼 '커먼즈의 부패'를 다룰 때 쓸 수 있을 듯하지만, 토지 커먼즈에 무게를 두기 위해 깊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기로 한다.

(1) 기술적 커먼즈론

ㄱ) 비극론

국가나 시장이 개입하지 않으면 커먼즈가 비극에 이를 것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대표적인 학자는 개릿 하딘이다. 감소성이 있고 더 많이 이용할수록 편익이 커진다면 과도이용과 무임승차로 커먼즈가 황폐해질 것이라고 본다(안새롬, 2020). 공동체의 규범, 의사결정, 인간성, 의무감, 자발성, 실천, 커먼즈와 공동체의 관계를 모

두 배제하고 있다. ‘국가의 강제’와 ‘사유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제3세계에서 자연의 국유화와 시장화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주었다(정영신, 2016).

ㄴ) 드라마론

드라마론은 하딘이 커먼즈를 ‘실패한 자원 관리 패러다임’으로 보지만 사실 역사 속 커먼즈는 ‘모두가 주인인 시스템’에 가깝고, 비극론은 커먼즈를 주인 없는 땅으로 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한다(권범철, 2020). 이들은 커먼즈를 배제성이 없고 감소성을 지는 자원으로 정의하고 개방제, 사유제, 공동체 소유제, 국유제 등 다양한 소유제도 아래에서 여러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단순히 비극이나 희극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 여부는 공동체의 제도에 달렸다고 본다(정영신, 2016). 대표적인 학자로는 보니 맥케이, 제임스 애치슨, 엘리너 오스트롬이 있다. 오스트롬은 오래된 커먼즈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커먼즈 관리 제도의 원리를 8가지²⁴⁾로 정리하여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책을 찾는다. 정영신(2016)은 이 작업이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공동체에 의한 ‘자치적 자원관리’의 가능성을 논증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들은 공동체 내부의 토착 지식, 공동체 문화, 규범, 규칙 등 커먼즈의 내적 동학에 집중한다. 정영신(2016)은 이용자들 사이에서의 협력 부재뿐만 아니라 자원체계와 공동체 자체의 파괴, 권력자들에 의한 강탈, 국가 주도의 개발주의 정책 등 외부 변화가 많고 또 중요함에도 그것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최현(2016)은 커먼즈를 자원의 물리적 속성으로 규정하고 이미 ‘주어진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탈커먼즈화 되고 커먼즈화 되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게다가 하딘이 말하려던 것은 드라마론 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밸서스주의적 고민을 은유한 것이었다(정영신, 2016). 이는 오스트롬과 그 동료에게 고민을 던진다. 드라마론은 커먼즈에 크기와는 무관하게 그것을 관통하는 작동방식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아주 큰 규모의 이를테면 대기나 면역과 같은 전 지구적인 커먼즈일 때 그 관리 방식에 대한 것이 속제로 남는다(안새롬, 2020).

우리나라의 공유재에 대한 논의는 이 둘 중 한 가지로 이루어진다. (1) 공유재에 대한 효율적 관리는 재정 운영 효율성 증가이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정책적 실패이며, 공유지를 국가가 소유하거나 사유재산으로 설정해야 함. (2) 불명확한 재산권 제도와 비효율적 거버넌스 구조가 문제의 원인이므로 적절한 관리 규칙과 거버넌스 체계를 모색해야 함(정영신, 2016).

ㄷ) 커먼즈 이중 운동론

커먼즈의 내적 동학을 밝히기보다 커먼즈화, 탈커먼즈화의 이중 운동을 복합적으

24) ① (사용자와 자원의)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② 사용규칙과 제공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③ 집합적 선택장치, ④ 감시 활동, ⑤ 점증적 제재 조치, ⑥ 갈등 해결 장치, ⑦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⑧ 중층적 사업단위(nested enterprise)

로 드러내는 데에 집중한다. 자본 시스템, 국가 시스템, 다른 커먼즈 시스템, 생태계 등 국가와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힘 관계 속에서 커먼즈를 바라보고자 한다(안새롬, 2020). 커먼즈는 국가와 시장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의 긴장 관계 속에 있다. 드라마론이 자유주의 커먼즈론의 기반이라면 이중운동론은 사민주의, 공화주의, 자율주의 커먼즈론에서 채택한다. 데 안젤레스, 페데리치, 카프라와 마테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커먼즈를 유지하고 관리하려는 실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세심히 짚어내지 못하나, 커먼즈 내부 역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까지 포착할 수 있다(안새롬, 2020).

(2) 수정적 커먼즈론

ㄱ) 자유주의 커먼즈

이들 커먼즈는 국가와 시장과 병렬 관계로 함께 놓일 수 있는 제3의 길이다. 공동체의 자치적인 관리 제도에 중점을 둔다. 오스트롬이 대표적이다. 소규모 공동체로 관리가 어려운 커먼즈를 다중심적인 연합제도로 해결하고자 했다. 자유주의 커먼즈론은 커먼즈가 맷는 외부 관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방식인지, 이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방식인지는 알 수 없다.

ㄴ) 공화주의 커먼즈

커먼즈는 국가 시장과는 다른 차원의 영역이다. 커먼즈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 자유로운 발전에 기능하는 ‘사회 전체의 공통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차원이 커먼즈로 인정될 경우, 그 법적 소유권이 어디에 있든 일반 성원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소유권’이 아닌 ‘사회적 기능’ 차원에서 구별돼야 한다. 법적 소유권 위에 커먼즈에 대한 기본권을 설정한다. 우고 마테이, 우자와 히로후미 등으로 대표된다.

ㄷ) 사민주의 커먼즈

국가, 시장, 커먼즈를 나누지만, 협력체계를 구상한다. 미셸 바우웬스, 바실리스 코스타키스 등은 ‘시민사회의 P2P(=인터넷 기반 파일 공유의 의미보다는 시민 주도의 자율적인 사회적인 사회적 생산과 상호 연결) 확대’, ‘국가의 파트너 국가로의 변모’, ‘시장의 윤리적 경제로의 변모’라는 전략을 그린다. 여기서 시장경제와는 구분되는 커먼즈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호혜적, 연대적 경제를 꾸린다. P2P가 시장 독점 지대 축소, 생산자들 간 협력, 국/자유를 뛰어넘는 커먼즈 영역 재건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자율주의 커먼즈와 달리 자본에 흡수될 것을 경계하는 대신 일부를 이루며 새로운 협력을 만든다. 파트너 국가는 시장에 종속되지 않고 국가, 시장, 커먼즈를 조정하고 커먼즈 활성화를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5) 국내의 커먼즈 운동들

(1) 솔방울 커먼즈²⁵⁾

커먼즈는 능동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으로 생산, 유지되고 번영하는 공간과 사물, 지식, 부 등을 통칭한다. 땅에 밭을 불이고 있는 감각은 분리되어 있는 개별보다 더 큰 존재와 만나는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상징적인 작업이다. 지금 이 사회의 땅은 숫자로 환원될 때에야 가치가 증명되지만, 솔방울 커머너들은 돈으로 환원되는 땅 그 너머의 디딜 수 있는 땅을 사유하고자 한다. ‘솔방울하다’라는 이들의 개념은 (1)공동이 만들어낸 것들의 가치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것, (2)소수가 이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대끼고 공유하기 위해 치대는 것, (3)위아래 없이 공동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들은 조선 세도가, 식산 은행, 미국 정부를 거쳐 대기업 (한진그룹)의 땅이 되었지만, 개발 실패로 인사동과 경복궁을 마주 보고 뎅그러니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 만 평 넘는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문제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솔방울 커먼즈는 이러한 땅의 문제가 정부의 매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땅을 소수의 부 축적이 아닌 공동의 것으로 회복하는 것에 대한 질문²⁶⁾들을 던지고 있다.

땅에 절대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솔방울러들은 공원을 만드는 것은 공공 가치를 추구하고 공공의 부를 만드는 것임에도 어쨌거나 공원을 확보하는 여러 방안²⁷⁾이 절대적 소유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야기한다. 절대적 소유권이란, 수익을 취할 용익권과 처분할 처분권 모두를 갖는 것이다. 처분권을 가짐으로써 토지는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작동되게 되고, 토지는 자본이 될 수 있게 된다. 토지가 자본 중심 도구로 이용되면 그다음은 뻔하다. 자본 축적과 투기로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새로운 공원 조성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에 반해 상대적 소유권은 수익을 취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여러 권리가 소유권과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토지는 ‘교환가치’가 아니

25) 솔방울 커먼즈가 생태적지혜연구소에 실은 글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솔방울커먼즈 시리즈] ①도시의 땅을 딛고 사유하기, 그리고 커먼즈를 만들어가기”. 생태적 지혜연구소

“[솔방울커먼즈 시리즈] ②소유 절대주의 도시를 넘어서: 송현동 숲공원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 생태적 지혜연구소

- “[솔방울커먼즈 시리즈] ③도시계획과정에서 참여와 커먼즈: 송현주민 되기”. 생태적 지혜연구소
참고) 솔방울 커먼즈 홈페이지 <https://pineconecommons.wixsite.com/pinecone>

26) 땅의 역사가 소수의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얼룩져 있다면, 공동의 것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둘려받을 때, 소수가 행한 투기의 결과를 보상해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공동이 땅을 사용하는 것이 또다시 투기의 역사를 보증하는 ‘숲세권’과 ‘문세권’으로 활용되는 것은 괜찮을까? 공유지로서 땅을 만드는 것이 삶을 위협하는 반-생태적인 개발로부터 벗어나 생태적인 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땅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삶이 진실로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27) 1) 정부가 토지 매입 2) 민관 협력_ 녹지의 40%에 대한 개발권, 수익권을 민간 자본이 갖고 나머지를 공원화함. 도로, 철도 지하화한 후 지상 부지를 공원화. 터널 착공, 역세권 개발에 대한 민관 협약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식. ex) 경의선 숲길 공원 3)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체 소유권을 형성(=공동체 자산화)

라 ‘사용가치’, 즉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무언가를 하려면, 공원을 만들려 해도 우선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세상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칼럼에서 솔방울 커먼즈는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하향식 방식을 짚어낸다. 도시계획 과정에는 시민 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나, 아주 절차적이고 형식적일 뿐이다. 이 논의에서는 1인당 도시 숲 면적, 외국사례를 비교하고 공원의 사회적 효용을 강조하지만, 자원 분배의 불평등이나 그것이 발생하는 힘의 관계, 구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송현동 부지는 단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불균등하게 얹혀 있는 힘들이 부딪히면서 생성된 공간’인 것이다. 솔방울 커먼즈는 단순히 지자체가 짜놓은 공론장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장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시도한다. ‘송현동 부지를 공동의 것으로 간주하고 끊임없이 참견하여 공동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재와 공공재의 이분법적 소유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 대신, 다양한 충위의 행위자들이 공동의 부를 만들어가는 커머닝 과정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공론장의 시민 대신 커머너 되기이다.²⁸⁾

(2) 경의선 공유지

경의선 부지는 경의선 철길 구간(용산~가좌 6.3km)이 지하로 개발되면서 비어있게 된 지상 부분의 공간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시설공단)과 서울시는 2010년 12월 협약을 맺고 공터로 남은 이 부지를 역세권은 상업지구로, 나머지는 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²⁹⁾ 시설공단은 2012년 이랜드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인허가 절차, 사업상 평가 등의 과정이 지지부진해지며 긴 시간 비어있는 땅으로 남겨졌다(박인권, 김진언, 신지연: 2019). 마포구 시민 단체들은 이 공간에 대한 활용을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였고, 사회적 경제에서 착안한 시민 장터인 ‘늘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시설공단과 마포구청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업이 인허가되기 전까지 시민들이 이 땅을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사용을 허가하였다. 공터는 지역 청년과 예술가 등이 모이는 시민시장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임시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늘장은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으로 단체명을 바꾸고 경의선 공유지를 점거하여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던 그 땅을 기업이 수주권을 얻었다는 이유로 개발을 해야 하니 나가라고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서울대저널, 2019). 청계천 재개발로 설 곳을 잃은 상인, 아파트 재개발에 따른 강제철거로 집기와 유리가 다 부서지고 깨지며 내쫓긴 아현동 상인, 행당

28) 솔방울커먼즈는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를 ‘솔방울 워크’라 정하고 송현동 57번지 갤러리에 상징적인 송현동 주민센터를 꾸려 기존 행정체계의 주민센터와는 다른 전시, 수다마당, 축제를 펼쳐 와글와글 주민들과 모였다.

29) 이 협약으로 공덕역부터 홍대입구역 부근이 개발되는 중이고, 2016년 부지 중 60%를 경의선숲길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경의선공유지는 이 경의선숲길공원에서 공원의 약 1/3보다 조금 더 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동에서 세입자로 살다가 재개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거 난민 청년 등 토지, 주거 문제로 빌붙일 곳을 잃은 이들과 새로운 사회적 실험을 시도하려는 청년 주거권 활동가,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한겨레21, 2019)(경향신문, 2019). 2016년에는 시민이 주체인 서울의 26번째 자치구(서울은 25개의 자치구가 있다)로 선언하였다. 2017년에는 ‘협치 서울 토론회’에서 국공유지 활용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적인 활용 방법을 제시하였고, 2018년에는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토론을 통하여 ‘경의선공유지 대안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설공단은 이를 무시해왔고, 2019년 10월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송을 걸었다. 시민 행동 측은 2020년 4월 점유를 마치기로 결정하였지만 국유지 방치에 관한 책임을 묻고, 다시 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걸어나갈 것임을 밝혔다.³⁰⁾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은 땅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고, 토지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그 가치를 지불하고 소유하는 자가 권리를 갖는다는 이분법적 토지 개념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또한,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 땅을 소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시도였다(서울대저널, 2019). 박인권, 김진언, 신지연(2019)은 경의선 공유지를 ‘부동산 개발을 통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이해에 대항하여 기존의 철도부지를 무단 점유하여 공동자원으로 만들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 산물’이라고 본다.

(3) 빙고³¹⁾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도시의 공유기반 활동들과 커먼즈” 연구자료집에 실린 빙고에 대한 소개이다.

빙고는 비인가 협동조합 완전한 자립재정 금융 공동체집단으로 여기서 회원들은 자본주의적 금융 구조와 센트리피케이션에 맞서는 싸움으로 자신들의 예금을 빙고 은행에 저축한다. 최소 세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빙고 소속 공동체는 공동체 활동 수행 공간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으로 빙고 기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은 정기 총회를 통해 집합적으로 내려진다. 애초 빙고는 적정 가격의 주택을 만들고자 했던 주거 부문 소규모 청년 활동가 집단으로 출발했으며 현재는 450명의 개인 회원들이 30개의 서로 다른 공동체 집단을 결성하고 서울 안과 시 외곽에 있는 15곳의 공간을 관리하고 있다.

(4) 비벌

30) “경의선 공유지를 떠나며: 우리, 다시 세상을 커머닝하자”, 문화연대 홈페이지. 2020년 4월 29일 수정, 2020년 10월14일 접속,

31) 참고) 빙고 홈페이지_ <https://bingobank.org/utilize/142>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도시의 공유기반 활동들과 커먼즈” 연구자료집에 실린 비빌에 대한 소개이다.

비빌은 업사이클링 시민 사업으로 2010년 도시 활동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도서관 운영, 수공업 제작 공간, 사회적 경제 단체를 위한 공동작업 공간, 공유 주방 등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활동을 유치함으로써 비어 있는 공공 토지 부지(과거의 서울 석유 비축기지)를 재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했다. 법적 토지 소유권을 가진 기관인 서울시와 오랜 협상을 거친 후에 현재 비빌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활동은 기지 내 다른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석유 비축기지가 문화예술 공원으로 전환되어 2017년 전 시민에게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비빌은 시작 당시 완전한 커먼즈였다. 하지만 비빌은 현재 시에서 대여한 토지 및 공원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한 시민 주도의 커먼즈가 아닌 공공-공동체 거버넌스의 요소들을 구현하고 있다.

* 공유로 상상해보기³²⁾

6) 나가며

이 선행연구는 토지를 커먼즈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쥐여주기만 할 뿐이다. 커먼즈로서의 토지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숙제로 남겨둔다.

토지 사유화는 자본주의의 짹이 트는 동시에 이루어진 인클로저 운동부터 이어져 왔다. 이 울타리 치기는 생산의 어떤 것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게 하였고, 노동자 착취와 자연 착취로 이어졌다. 땅이 돈벌이 수단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구성원들의 진정한 필요에 의해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해왔던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어떻게 함께 써야 할까’, ‘모두의 것인 땅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나’ 그 자체에 대한 고민도 논의도 없었다. 땅이 소수의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속해있는 터전이 될 때 이 기후위기와 생태문제의 근본 뿌리와 맞닿아 있는 자본주의에 새로운 빈틈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지점에서 커먼즈를 가져와 고

32) 토지를 커먼즈로서 바라보려는 시도와는 조금 다른 결이지만, 주거 문제를 커먼즈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다른 사례들을 추가로 찾아보았다.

- 협력적 주거 공동체
http://www.yes24.com/24/UsedShop/Goods/16882639?scode=048_007
<http://www.junglim.org/archives/1340>
- 건축신문#특별호 – 어떤 이슈: 함께 사는 도시를 위한 제안들
<http://www.junglim.org/archives/3885>
- 99%를 위한 주거
<http://www.junglim.org/archives/293>

민할 수 있다.

평등하게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인 주체를 창출하는 것이 커먼즈이다. 사유와 국유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땅을 가진 자와 땅을 가지지 못한 자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땅을 가지지 않아도 향유할 수 있는 그 이외의 다른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커먼즈이다. 애초부터 어떤 재화도 사유나 국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것을 둘러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커먼즈가 될 수도, 사적 재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커먼즈다.

커먼즈가 상품의 형태를 떠지 않고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나고 관계를 창출하여 서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롭고 다른 방식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커먼즈를 통해 중앙으로 집중되고 규제되는 커다란 규모의 ‘이상적 모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대안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녹지나 공터, 공원, 광장, 도시 텃밭, 공유 주택과 공유 공간 등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지 않은 방치 되어 있는 땅이나 사유화가 되지 않은 땅의 범위에서만 커먼즈가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박인권 외 2인(2019)은 ‘커다랗고 가치가 별로 없는 땅’이 ‘공동체가 관리해야만 하는 땅’이 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빈 땅에 대한 집합적 주체를 창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빈 땅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어느 형태의 관계로 맺고 있는-즉 누군가가 소유하거나 국가가 국유지로서 보유하는 등의-땅들의 관계들을 뒤집어서 커먼즈의 관계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생겼다.

박인권 외 2인(2019)에 따르면 도시는 전통적 커먼즈와는 달리 사회관계가 포화하여 있고, 자본주의 이윤 추구 활동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 특히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매우 유동적이기에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공통의 재화와 그것을 둘러싼 집합적 주체(공통인), 그리고 공통재화를 함께 생산하고 유지하는 활동(공통하기)가 어우러진 사회체계(권법철, 2020)’인 커먼즈로 이런 도시라는 공간에서 땅을 사유하는 것이 가능할지,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졌다.

2장에서는 숲과나눔 재단에서는 대기와 녹지 커먼즈를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했고, 경의선공유지와 솔방울커먼즈 활동을 통해 도시 커먼즈를 고민하고 있는 안새롬과의 대담을 통해 커먼즈에 대한 논의를 더 들어보고자 한다.

2. [만남 – 안새롬] 커먼즈와 커머닝

- 솔방울 커머너
- 환경과교육연구소 연구원

하연: 토지 공개념과 토지 커먼즈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차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롬: 토지 공개념의 공(公)자가 공공할 때 공자에요. 커먼즈에서는 똑같이 공이라 는 말을 쓸 때 함께 공(共)자를 쓰거든요? 공(公)이랑 공(共)이랑 한자가 달라요. 토지 공개념 할 때의 공은 public의 공(公)자이고, 커먼즈의 공은 common(共)의 공자에요. 경의선공유지는 초기에 공(公)유지라는 의미에서 ‘퍼블릭 랜드’(public land)를 사용했다가 나중에 그 공간의 성격상 공(共)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커먼즈(commons)로 바꿨어요. 국유지할 때 ‘public’을 써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공사구분을 한다 했을 때 그때 공자가 공공의 공(公)자다, 커먼즈하시는 분들은 공과 사 사이에 있는 공동체를 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구분도 사실은 너무 단절적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입장도 많아요. 왜냐면 국유지나 국가라는 것, 정부의 것, 아니면 ‘public’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떨어져서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하기보다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토지 공개념과 토지 커먼즈가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쓰는 용어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계보를 갖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커먼즈에서는 함께 사용하는 토지를 많이 말했다면, 토지 공개념은 국가가 사유재산을 수용하든 규제를 하든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토지 공개념은 공과 사를 구분한 다음, 이 두 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공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등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토지 커먼즈에서는 공 대(對) 사 구도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땅을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국가도 들어가고 기업이나 자본도 같이 얘기를 해야겠지, 완전히 다른 논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전제가 토지 공개념은 분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헨리 조지가 ‘public’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common property’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공동의 소유권. 소유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토지 공개념 논의의 전체 배경은 땅은 한정되어 있고 이 한정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배의 정의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인지요. 그 분배가 약자한테 많이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특정인이 다 가져가서 이익을 다 독점하는 건 부당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윤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하고, 약자들에게 그 토지를 어느 정도 잘 분배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커먼즈에서도 분배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

만 분배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일단은 분배받을 사람으로 인정은 되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있죠. 토지를 같이 사용하는데, 이미 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됐어. 이런 문제도 다 커먼즈 문제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안가가 있는데, 국가가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미 분배 문제는 벗어난 거예요. 자본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냐, 이런 문제가 대신 나오지요. 커먼즈를 되게 넓게 생각하면은 동식물이나 비인간 존재까지 확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미래까지 다 커먼즈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토지 공개념에서 거의 제기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해요.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분배냐 인정이냐>라는 책을 냈거든요. ‘분배의 정의’, ‘인정의 정의’ 이런 논의에요. 실제로 환경정의 논의 보면, 이전에는 분배의 정의만 많이 이야기했다가, 정의들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승인적 정의’인데, 그게 아까 ‘인정의 정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의의 대상이냐, 아니면 우리가 함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이 되느냐, 누가 인정을 하느냐-는 것이 더 근본적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인정은 된다 하더라도, 분배를 할 거긴 한데, 그 과정에 참여는 할 수 있나, 누가 참여해서 누가 분배하는데-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참여적 정의’ 같은 것도 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토지 공개념은 사실상 어떤 분배된 결과에 초점이 있기도 하고, 현시대, 사회적 정의, 분배 정의에 초점이 많지요. 그리고 구도도 국가냐, 사냐. 이런 것에 많이 초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커먼즈를 공부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웃음). 커먼즈가 할 수 있는 질문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또 하나는 커먼즈는 소유와 얹매이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되게 커요. 그런데 토지 공개념은 소유권을 거의 전제하고 나서 그 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제도를 다시 개편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주로 제기된다고 생각해요. 커먼즈에서는 소유에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소유권이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있느냐, 우리가 공동으로 누려야 될 게 있느냐, 어떻게 누릴 거냐. 이런 거. 공기 같은 거. 물 같은 거. 소유권이 딱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 할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토지로 가면 좀 더 비슷한 양상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커먼즈는 좀 다른 양상이지 않나. 그것이 제가 생각해본 것이에요.

하연: 토지 공개념은 근대적 소유관계, 근대에 들어서 생긴 소유권에 그 위에 있다고 하면 커먼즈는 그것을 벗어나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롬: 근대의 몇 가지 전제나, 근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논리들이 있잖아요, 인간 중심의 개인이 누구냐, 인간이 주체고, 분배 문제에 초점이 있고, 사회 정의가 중요하고, 그 당시 사회구조 속에서 그런 개념들이 만들어진 게 당연하기는 한데.

하연: 마땅히 공동의 것이어야 할 것이 자본의 영역으로 흡수되거나, 혹은 국가주의 모델 안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탈취되며 어떠한 문제가 생겼나요? 그 구체적 예시

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새롬: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예 같아요. 한국자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대량으로 팜유로 생산한다고 했을 때는 대량 경작이 토지를 완전히 다른 토지로 바꾸어놓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단지 토지를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느냐 했을 때는 아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다 바꾸어 놓고,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지역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다 바꾸어 놓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팜유 산업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팜유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했을 때 다른 길을 꿈꾸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빼앗겼다거나 무언가 변했다고 했을 때는 수많은 잠재성까지 같이 앗아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당장 직면한 수많은 선택지를 어느 정도 다 배제하는 결과인 거죠. 그런 게 대체로 커먼즈가 완전히 변형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나 국가가 흡수하기 전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이 늘 이상화될 필요는 없지만, 국가가 개발하거나 자본이 완전히 커먼즈를 변형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형상들이 위낙 거대하고 힘이 세니까.

제가 이 질문보고 생각했던 건, 물 산업이에요. 특히 물은 다국적 기업이 많잖아요. 물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거고, 우리가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장과 모든 농축산업에 다 필요한 것이 물지요. 물의 지류를 변형시키는 게 얼마나 큰 결과를 야기하는지가 정말 많은 연구에 나타나 있어요. 네슬레, 코카콜라, 생수 산업... 기업들은 돈을 내고 물 사용료를 냈다고 이야기하며 쓰는데 그게 야기하는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지요. 지류 변화는 당연히 농부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먹을 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떠나서도 ‘우리 물을 돈을 주고 사도 되느냐’, ‘돈을 주고 가져갈 권리가 너네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제기가 되어요.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던 사례라면 우리나라에서 웰빙 식품 같은 것 많이 먹잖아요. 아보카도, 남미의 곡류 같은 게 유명했나 봐요. 그 중 하나가 퀴노아예요. 고기가 아닌 식물이고, 채식하고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영양소 높은 음식을 먹는 경향도 있지요. 그런데 퀴노아가 주식이었던 남미 고산지역을 연구하시는 숲과 나눔 연구원 서지현 박사님이 해주셨던 말이, 거기 주민들에게 원래 퀴노아는 그냥 밥이래요. 그런데 퀴노아 열풍이 분 거에요. 마치 땅이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팔리기 위한 땅으로 변한 것처럼, 퀴노아도 원래는 먹는 것이고 살면서 늘 같이 있었던 건데 퀴노아 밭은 이제 수출하고 팔기 위한 밭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랐고, 일상적으로 먹던 사람들은 퀴노아를 못 먹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저는 다 커먼즈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어딜 가서 완전히 다 변형시키는 문제일 때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새에, 퀴노아를 소비하는 순간부터 자본이 작동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배제되고 그 피해를 크게 받고, 어떤 피해를 받느냐,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들이지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런 거지요. 이 질문에서, ‘마땅히 공동의 것이어야 할 것’,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생각해요. 시대적 마다 당연히 다른 것이고, 당연히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공동체한테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커먼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문제적이고, 논쟁적이고. 일단 커먼즈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커먼즈가 탈취되어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질문 자체가 애매하기는 해요. 누구의 입장에서 커먼즈냐, 이거 자체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환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땅한 것은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도 대기나 공기나 물 같은 건 공동의 것이어야지’하는 주장도 나오고, 주거나 노동을 커먼즈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시고요.

나경: 오오, 노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새롬: ‘돌봄이 커먼즈다’, 이야기하면 조금 쉽지 않나요. 우리가 그동안 되게 사적인 것이라 생각하던 것. 노동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걸 커먼즈로 생각을 해보려면 노동 시스템이 누구에게 복무하느냐 누구한테 이익을 가져다주는가를 이야기해야겠지요. 대신에 누구의 무엇을 자꾸 고갈시키느냐 했을 때는, 노동하는 남자와 여자의 자녀 교육 문제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노동의 영역, 돌봄의 영역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긴 한 것 같아요. 커먼즈를 사물로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시스템을 공유하고 그 시스템들끼리 이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도 많이 논의되었던 게, 물, 산림, 토지. 교육이나 교통 같은 건 ‘우자와’라는 일본사람이 시스템 자체를 공동의 것으로 만들려는 논의를 많이 했었고, 시스템이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피터 라인보우가 쓴 책 <마그나카르타 선언>을 보면 ‘마그나카르타’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마그나카르타의 짹꿍 문서가 있는데 그게 ‘삼림현장’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삼림현장은 산림을 커먼즈라고 선언하는 문서에요. 라인보우에 따르면 산림이라는 건 그냥 ‘야 산이다’가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에스토버스라는 용어가 있대요. 산에서 나는 잡물들, 산나물이든, 쭉정이라든가 그냥 정말 살림살이에 필요한 아주 사소한 것들을 막 산에서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안 했겠지요. 근처에 살고 있는 가장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그 산이었던 것이지요. 이 산에서 사람들이 뭔가 산나물을 채취하고 자기 생계를 유지해가는 걸 관습적으로 다들 허용하는 거였고, 그것을 명문화했던 것이 산림현장이에요. 산림현장과 마그나카르타가 짹꿍이라고 했잖아요, 마그나카르타는 근대의 소유권을 옹호하는 그런 문서였다고 해요. 얘(마그나카르타)는 살아남고, 얘(산림현장)는 거의 폐기되었다는 것이 라인보우의 요지에요. 그것도 되게 의미심

장하기는 한데, 여튼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다가 산림이라는 게 만약에 사유화됐을 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동안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게 길이 막히는 거죠. 국가가 산림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도 또 막혀요. 인간은 산림을 해하는 존재라고 여겨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자연 보호 구역, 산림 보호 구역들을 설정할 때마다 그동안 원주민들이 살아온 방식을 인정되지 않고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내몰리는 거죠. 산림을 보호하겠다는 데, 그냥 개발 문제랑 또 다른 문제잖아요. 원주민을 내쫓는 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커먼즈가 적과 적이 대립하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어렵죠.

조선 시대 개국 선언에는 산림 천하 여민 공리지 산과 림과 하천과 하늘 모두가 백성 것이라는 왕토 사상이 있대요. 왕의 것이지만 국민이 마음껏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껏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국 초기에 아예 선포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이 허용되는 게 당연하고, 국가의 규칙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 사유화가 시작돼요. 사회 제도도 혼란스럽고 규범도 약화되면서 산이 원래 왕 것이고 왕이 국민들이 모두 접근하도록 허용해줬다는 기조가 다 허물어져요.

하연: 봉건제 후기 같은 것이네요.

새롬: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 산림을 엄청나게 사고팔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야기한 효과에요. 그동안 사람들이 소나무에 접근하면서 얻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전의 에스토바스처럼 잔가지를 갖다가 뱤감으로 쓰거나 아니면 자기 집 수리할 때 쓰거나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경계가 쳐졌으니. 저항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인데 인클로저같은 경우에는 봉기가 일어나거나 저항이 있거나 큰 싸움이 있거나 아니면 도피 같은 여러 가지 극렬한 저항이 있었는데, 그때는 송계라는 계모임을 만들어요. 인클로저 과정에서 나오게 된 사람들의 자구책 같은 것이지요. 이것을 한없이 좋게 보기만 되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같이 자급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만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좋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고, 이런 맥락을 다 제거하고 공동체가 해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불편한 거죠. 국가도 자본도 아닌 제 3의 길이 있다고 하면 좋은 일이지만 국가도 버렸고 자본이라는 거대한 가격장벽에도 진입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주의를 이상화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경: 갈 수밖에 없이 내몰리게 된 맥락들을 함께 읽어서 가야겠네요.

새롬: 돌봄을 커먼즈로 만들자고 하는 논의도 공동육아를 하자는 논의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돌봄 커먼즈를 공동육아로 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돌봄 육아를 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공-사 구분을 허물고 그 돌봄 체계를 다 같이 꾸려야 된다면 당연히

국가도 들어가야 하고, 지자체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학교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공동의 모임도 계속 존재해야겠죠. 같이 얘기를 해야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나경: 저는 셰어하우스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좋은데, 사실 셰어하우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집값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인프라를 자기 스스로 마련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를 받는 구조가 많은데, 그게 기준의 고시원이랑 다를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새롬: 그래서 커먼즈 내부만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셰어 하우스도 그렇고 공동육아도 그렇고 그 자체가 존속해야 한다는 논의로 흘러간다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잘 협력을 해가지고 공동의 구조를 어떻게 잘 유지 하느냐가 관심이 되어버리면 거기까지 오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다 소거되는 거죠. 공동 주거 양식이 지속가능한 것도 중요한데, 더 많은 사람이 더 열악한 공동 주거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당연히 전체 도시나 부동산 시스템을 봐야 하고, 그것 자체를 어떻게 커먼즈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하연: 생태적지혜연구소에 실린 칼럼에서 ‘절대적 소유권’과 ‘상대적 소유권’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새롬님이 분리하신 것인지 혹은 어딘가에서 차용하신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새롬: 절대적 소유권과 상대적 소유권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소유를 다른 맥락에서 재구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적 지혜연구소 쓴 글에 인용을 달아놓은 윤여일 선생님 글, 카프라랑 마테이가 쓴 ‘최후의 전환’, 마조리 켈리의 ‘왜 그들은 회사의 주인이 되었나’는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책이에요. 아, 이병천 선생님 논문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분은 재산권 얘기를 커먼즈로 이야기하시거든요. 대체로 소유라는 게 어느 정도 권리를 인정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사람들은 절대적 소유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안 지켜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땅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간단한 예로, 내가 지금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한 백 층짜리 건물 올린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나경: 내 땅이라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새롬: 아무거나 할 수는 없어요. 내 땅에서 수익을 내는 게 다 내 거야. 근데 사실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참조할 개념이라면 총유 개념을 추천하고 싶기는 했어요. 총유라는 개념만 보면 그렇게 급진적인 건 아니거든요. 일본에도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셋이 땅을 하나 총유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각자 1/3씩 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현행법상 우리가 공유한다고 했을 때, 1/3씩 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팔아도 두 명이 저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3의 지분이 있으니까 지분을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유를 하면, 이건 그냥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을 이용할 때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지 지분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어요. 일단 지분 자체도 나한테 할당되어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아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커먼즈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총유 개념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커먼즈 개념과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게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개념을 좀 더 현대적으로 잘 발전시키면 그래도 땅이 지금만큼 사고팔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많이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연: 커먼즈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터전이라는 본원적인 땅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까요? 혹은 땅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더 넓은 범위에서, 커먼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태적 위기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혹시 고민해 오신 것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나경: 최후의 전환에 나왔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만약 공동의 것이라고 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되는 ‘공화주의 커먼즈’와 같은 개념인가요?

새롬: 어떤 커먼즈를 만들 것인지는 결국 ‘이게 우리 거야’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거기에 접근을 허용하는지, 아니면 접근을 허용하지는 않는데 여기를 우리가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꿀 때 그 권리만 제한받는 것인지는 커먼즈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땅은 누구나 접근하기보다는 돌려가면서 쓰거나, 접근 같은 걸 제한하고 우리가 쓴 다음에 변형되지 않게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너무 배타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게 잘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먼즈라고 해서 모든 접근이 다 허용되는 토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아주 단적인 예는 테이크 아웃 드로잉 카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모이고 좋아했던 카페였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여기를 무언가로 바꾼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카페가 문 닫을 처지가 되자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점거를 했어요. 분명히 상업공간이었고, 누구나 막 와가지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 공간이 아니고, 접근할 권리가 제한되어있었잖아요. 세를 내고 있는 점주와 건물을 소유하는 소유자도 있었지요. 거기서 요구한 것은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제한하라는 요구였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소유자라고 해서 그 땅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다는. 어떤 권리를 제한하고 어떤 권리 는 개방하느냐는 건 사실 땅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가진 집도 커먼즈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우리 집에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거나 다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유 재산이 어떻게 커먼즈가 될 수 있느냐가 얘기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개인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하지 않도록 이 땅을 사용하고 다음 사람, 다른 공동체에게 넘기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죠. 물리적으로 어떤 땅은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특성의 땅은 어떤 식으로 커먼즈가 되어야 하는가 한다면 어려운 게 당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야지요. ‘사회주의냐, 빨갱이냐,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논의에 적절한 비판과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커먼즈의 규칙을 동일하게 설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공공성,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특성상 당연히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땅을 향유해야하고, 소유를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회복 불가능한 수준을 사용하거나 이 땅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타 존재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한국 맥락에서 아파트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야겠네요(웃음). 되게 급진적인 이야기밖에 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커먼즈라면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축출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어떤 귀감으로 작동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 개발을 가지고 생태 논의랑은 연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냥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기후위기나 생태위기와 연결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논의도 가능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쓸 권리가 있느냐.’ 정말 그 문제까지 가면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통계를 직접 본 건 아니고 맨날 듣는 얘기는- 우리가 소득이 높아질수록 아주 평균적으로는 상품 소비량이 늘어요. 내가 공간이 커지면 공간을 사용하는 상품과 에너지, 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 자체가 사실 기후위기의 거의 핵심이잖아요.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넓은 공간을 쓰면서 그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묻는다면 아주 급진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하연: 그래서 생태적 법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오나 봐요.

새롬: 그걸 법으로 막을 것이냐, 아니면 문화로 만들 것이냐 운동을 해서 균열을 낼 것이냐,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는데 법학자들은 그렇게 하려 하죠.

나경: 법이 우리가 합의한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문화랑 떼놓을 수 없는 거고, 또 법이라는 근거가 있었을 때 권리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롬: 명문화된 법과 커먼즈의 역동적인 작동 방식이 꼭 조화롭게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커먼즈 법이 생긴다고 해서 커먼즈가 잘 작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 질문이 ‘커먼즈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터전이라는 본원적인 땅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거인가’ 인데요, 그러면 진짜 너무 많은 것을 건드려야 해요. 사실 축산업도 여기 건드려져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땅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 거의 핵심인데.

하연: 그냥 삶 자체인 것 같아요. 커먼즈가.

새롬: 땅을 커먼즈로 만든다는 게 단순히 ‘공동소유하자’, ‘같이 쓰자’라는 이야기로
가지만 않는다면 사실 이야기할 건 너무나 많아요.

하연: 그냥 좀 길게 봐야할 것 같아요. 계속 가져가야 할 질문.

새롬: 상대적 소유권이든, 생성적 소유권이든, 더 나은 소유권이든 소유권의 변동이
든 이것들이 한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땅의 면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연결되어있는 다른 삶, 다른 사람, 다른 존재, 아니면 지금 아직 없는 미래
의 사람, 아니면 과거의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사실 소유권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게, ‘이 땅에 대한 문서를 가지
고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까지 가질
수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 권리란 누가
제한하느냐, 이 문제가 걸쳐있는데, 지구법을 말하는 사람은 법이 제한할 수 있다
고 보는 거고. 그런데 또 거기서 문제는 그 법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에요. 지구법을 통해서 현 세대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아니라
지구의 생태계와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법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어느 정도 명문
화될 수 있을까, 그건 좀 지켜보아야겠어요.

하연: 커먼즈는 녹지, 공터, 공원, 광장, 도시 텃밭, 공유 주택, 공유 공간 등 소유권
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지 않거나 사유화되지 않은 범위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빈 땅뿐만 아니라 이미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고 있는 땅들의 관계들을
뒤집어서 커먼즈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가능
할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미 기준의 관계로 꽉꽉 차있는 도시에서는 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고민해온 것이 있으신가요?

새롬: 이미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이야기. 이미
있는 이 상점을 어떻게 커먼즈로 만들 것이냐. 공항을 커먼즈로 만드는 이야기도
있어요. 공항이 왜 그동안 우리 관심 밖에 있었고, 단순 이동 정거장처럼 여겨졌
는지, 기후위기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생각해볼 만 한 것
같아요. 도시나 공항, 상점, 거리 이렇게 빽빽하게 쌓여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맺
고 있는 관계를 전복시키는 게 사실은 핵심이고, 왜 우리는 그 공간을 그렇게밖
에 사유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항은 그냥
이동 정거장이 아니라 탄소배출의 거점이자 그것을 재현해주는 하나의 공간이고
그 공간을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그 공항으로 가는 모
든 길이 싹 다 밀렸지요. 인천의 배다리 마을도 공항으로 가는 길 놓다가 분쟁

지역이 되었어요. 제주도에도 지금 공항 만든다고 공항 반대 운동 하잖아요. 그 공항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정말 단순히 이동 때문인가, 한다면 아닌 거죠. 진짜 이동을 위한 공항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에요. 그럼 공항이라는 공간이 무엇하고 관계 맺고 있을까요. 비행기 티켓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지불만 하면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어디든지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또 공항도 여기저기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공항 주변 도시가 완전히 재편되고, 공항 옆에는 꼭 국제도시가 생겨서 개발이 돼요. 공항은 단지 이동 경거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더 빠르게 연결되면서 소비나 생산 속도가 훨씬 빨라졌지만, 비행기 에너지 효율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주는 건 절대 아니지요. 더 열심히 국외여행을 가고, 주변에 국제 신도시가 생기며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공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는 동식물들의 서식지나 삶 같은 건 다 밀려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아까 말했듯 되게 빡빡해서 견드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뀔 여지가 많고 주장할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개네들이 무엇하고 관계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커먼즈 연구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도시도 그런 관계들을 봐야죠.

하연: 송현동에 대한 고민을 품었던 솔방울 커먼즈 위크가 어떻게 진행되어 고민을 어떻게 갈무리하였는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갈 예정인지 조금 전해 들을 수 있을까요?

새롬: 사람들은 송현동도 공원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기후위기 때문에 녹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원에 대한 접근권을 연장해야 하고 1인당 녹지 면적이 너무 낮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공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 떠나가는지 그리고 살아가는지를 다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녹지가 무조건 늘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훨씬 더 향상되는 삶의 질을 가지게 될까? 녹지가 도시 한복판에 생긴다는 게 한마디로 소위 생태도시를 만드는 거냐? 하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젠틀리피케이션 많이 들어봤지요, 우리나라에 번역하는 사람들은 ‘동지 내몰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에코 젠틀리피케이션은 그렇게 생태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들이 내몰리는 것이에요. 특이하지요. (공원을) 넓히거나 도시를 바꾸고 대중교통을 확장하고 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몰리는 거예요. 서울숲이 제일 자명한 예라고 생각해요. 서울에 거대한 숲이 생기면 숲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그 숲이 있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 정책들이 저는 도시 설계게임처럼 보여요. 격자무늬로 된 도시에 녹지 하나 설치하고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해서 보기 좋으면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처

의 지대가 역세권 숲세권으로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환경론자들은 사람들이 숲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그만큼 높은 것인니까 숲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대가 높아지면, 누군가는 거기에서 실제로 살 수 없고, 누군가는 내몰리고, 누군가는 차익을 받아 그런 식으로 부동산이 굴러가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부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지요.

기업가 도시라는 ‘entrepreneurship’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도시가 마치 기업인 것처럼 스스로를 마케팅을 하고, 스스로를 브랜딩해서 자기의 가치를 증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지요. 도시의 가치를 증식시켜서 소위 세계 시장에서 잘 먹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세계화되고 신자유주의화 된 시스템 속에서 도시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도시가 하나의 기업이 되고, 그래서 그 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이런 것보다는 도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책정받을 수 있는가가 우선돼요. 그 개념에 그린이 덧붙여진 개념이 기업가 도시의 그런 버전이지요. 도시를 더 녹색화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윤을 내기 위해 도시 마케팅을 하는 차원인 거지요. 그런 관점으로 도시 숲을 봄아 한다고 생각해요. 용산 숲이나, 송현동 숲이나, 경의선 숲이나 서울 숲이나 다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에코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도시를 스스로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숲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가 하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숲과 도시 숲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산에 있는 수종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금 있는 산림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도시에 숲을 새로 만들면 그때의 숲은 너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봄아 해요. 그렇지 않으면 허상 같은 것이죠. 기후위기에 대응하니까 숲을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나 부동산 시스템은 전혀 바꾸지 않고 숲을 만들어, 그럼 그 방식대로 계속 따라가고, 결국엔 주거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달라질 것이 없는 것 이지요.

나경: 공원을 만든다면 거기는 공유지일지 몰라도 기존의 부동산 체계를 엎고 기존의 사유재산을 없애지 않으면 그 주변의 지대가 오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 공간뿐만 아니라 연결된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사유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더라도 그 주변의 지대가 올라가지 않도록 시스템까지는 못 바꾸더라도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롬: 안 그래도 저희 솔방울 커먼즈도 고민이 되는 거에요, 이미 다른 문제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이 있느냐, 그것을 경북대 이계수 교수님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녹지 주변 지역을 같이 조성하는 것을 제안해주셨던 것 같아요. 녹지 면적을 줄이든 그 근처를 같이 조성해서.. 언뜻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는 땅을 그대로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안 사는 것이에요. 대신에 규제는 풀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이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안에 칡 덩쿨이랑 나무들 되게 많거든요. 이미 숲이 있는데, 매입을 한다는 건 개발 욕망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경로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이걸 매입하는 순간에 정부가 직면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 책임이나 역할, 당위성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땅을 샀으니까 공원이든 숲 조성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도시 개발문제랑 제일 닿아있지요. 도시는 왜 자꾸 개발되어야 하고, 더 훨씬 번듯한 건물이나 랜드마크를 끊임없이 가져야 하고. 그런 방식의 개발을 통해 맺어지는 우리들의 관계, 여러 존재들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전보다 덜 폭력적이고, 더 유연하고, 더 생동하는 관계인가. 대규모 사업을 하지 않고도, 땅을 그대로 두더라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되돌아보고 재구축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연: 어떤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새롬: 맞아요. 우리가 뭔가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한 해법을 내지 않아도 그냥 조금 느리게 살면 대부분 해결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빈 공간에 무언 갈 채워 넣어야 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하니까 막 걷어내고, 길도 예쁘게 만들어야 하고, 시청건물, 박물관을 이쪽으로 옮겨야하고...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의 저자 정훈목 선생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들었어요. 도시라는 게 그냥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생활에 필요한 걸 얻고 같이 마주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데인 줄 알았는데, 마치 아파트 단지처럼 이 도시의 가치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높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숲을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랜드마크를 만들고, 빌딩과 큰 브랜드 아파트를 유치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도시든 나라든 별반 다를 바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욕망이 잘 다뤄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경이라는 거예요. 예뻐야 하는 거죠.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숲이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송현동도 그렇고. 뭔가 그리닝하려고 하는, 소위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생산과 소비 규모를 다루지 않으면서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석유 수입량과 소비량을 하나도 안 줄이는데 일부 효율을 높이고 일부 아주 미세한 탄소 흡수 효과를 가진 공원을 만드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효과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 도시라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건지, 마케팅인 건지 사실 모르죠. 좀 더 지켜봐야겠지요.

하연: 새롬님은 어떻게 커먼즈를 다루게 되셨나요?

새롬: 누가 시켜서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뭐 해야 한다는 그런 리스트에 얹매이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커먼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커먼즈 공부를 하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지요. 리우 선언,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국제적인 보고서 중에 거의 환경 분야에서 고전처럼, 모든 환경 연구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우리 공동의 미래인데 our common future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 문제를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같이 맞이하는 미래, 우리가 같이 다뤄야 할, 마주해야 할 미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커먼즈를 공부하니까 our common future라고 하면서 미래를 커먼즈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배우는 게 많았어요.

3. 제언 - 기후위기 시대에 커먼즈·커머닝으로 소유권 다시보기

1장에서는 커먼즈가 품고 있는 문제의식과 다양한 커먼즈 이론들, 그리고 국내의 커먼즈 운동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안새롬 연구자와의 대담을 통해 커머너, 즉 커먼즈의 주체가 누구인지 질문을 던져보았다. 생태적 위기와 커먼즈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도 이야기하였다. 3장에서는 자연 착취의 근간이 되는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소유권에서의 변화를 고민한다.

1) 소유권 개념에 변화가 필요하다

근대의 소유권은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인간 중심적 사고와 기계론적 이성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으로부터 분리해내었고, 자연을 조정하고 지배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하였다. 자연은 인간이 관리해야 할 재산이 되고 자원이 되었다. 이는 자연 착취와 파괴로 이어졌다.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위기의 근간을 되짚어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 기계론적 사고가 있다. ‘현재의 논의’라는 무대에서 비인간 존재들에게는 주체라는 자리가 없다. 커먼즈가 던지는 질문들은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던 이들을 주체라는 조명 아래 무대로 이끌어 나온다. 2장의 안새롬과의 대담에서 다루었듯이, 우리는 땅과 주거의 문제를 다룰 때 주로 분배의 정의 측면에서만 접근해왔다. 분배의 정의는 한정된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약자에게도 분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다. 분배의 정의를 말할 때, 그 정의를 마땅히 보장받을 대상에 조차 속해있지 않은 존재들이 있어왔다. 혹은 그 대상이더라도, 정의에 대해 논할 논의의 장에 설 수 있는 동등한 주체로서 고려되지 않는 다른 존재들이 있어왔다. 누가 정의를 실현 받을 대상이 되고, 그런 정의를 논의하는 장의 주체로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가,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2) 소유권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렇다면 소유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2장의 안새롬과의 대담에서 짚었듯, 소유권의 핵심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소유권의 유일한 주체로 쉽게 끌어왔던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동물들, 식물들, 나와 다른 시간을 살아간, 그리고 살아갈 인간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가 그 핵심이어야 한다. 단순히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있고 그런 연결 아래 얼마 만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가운데로 끌어와야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적응’과 ‘저감’이 모두 필요하다. 그 중 문제의 근본을 바꾸는 ‘저감’으로써 커먼즈-커머닝은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 문화 근본의 변화이다.

3) 스튜어드십에서 인정적 정의로

정의의 주체로 인정조차 받지 못해왔던 이들을 조명하고, 연결과 관계를 소유권의 가운데로 끌어오는 커먼즈-커머닝은 이제껏 자연과 맺고 있던 관계를 전환하는 일이기도 하다. 환경 스튜어드십(environmental stewardship)은 인간을 지구의 관리인, 집사로서 위치시킨다. 반면 커먼즈는 다른 생태 구성원들과 좀 더 같은 선상에 함께 선다. 우리는 자연을 개발하거나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왔다. 똑같이 녹색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연 보호’라는 말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영향이 인간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생태계라는 서비스와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태계라는 연결망 속 같은 터전을 사는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존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4) 소유권 너머를 이야기하기

커먼즈-커머닝은 더 나아가 소유권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를 상상한다. 분배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에게 열려있던 땅이 개인에게 속한 땅이 되었을 때, 소유권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여 땅을 함께 향유하느냐하는 분배의 차원은 기회를 잊고, ‘얼마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는 자본의 차원으로 논의가 넘어간다. 그러나 커먼즈는 소유권 자체에 구속되기보다 우리가 공동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기에 담론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는 땅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터전이 아닌 자본으로 치환되는 것을 두고 보고만 있지 않는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마치며

커먼즈는 관계 맺기이다. 결과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맺는 관계, 그리고 관계를 통해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 방점이 있다. 관계 속에서 사유하니, 지구 생태계의 연결에 주의를 두게 된다. 또한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이전에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들을 주체로 끌어온다. 기후위기 시대로 대전환을 논하는 지금, 커먼즈-커머닝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전환에 필요한 것은 문화, 사회 전반의 분위기이고 그러한 문화와 사회 전반 분위기는 다름 아닌 상상과 이야기로부터 생긴다. 다른 상상들이 끊이지 않기를 바란다.

VI. 지오멘탈리티

장윤석

1. 지오멘탈리티, 땅과 집을 보는 마음틀

1) 들어가며

언제부터 ‘사는 곳’이 ‘사는 것’이 됐을까. 우리의 지오멘탈리티(Geo-metality; 토지관, 땅을 보는 마음틀)에는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땅과 집을 둘러싼 온갖 문제가 곳곳에서 보인다. 영끌이니 빗투니 부동산 투기는 과열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백약이 무효해 서민들의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도시에서는 옆옆으로 개발이 번져가는 스프롤³³⁾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며 신도시 개발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논하고 산을 깎는다. 공항과 발전소와 송전탑 등 토건 사업은 (기후위기와 코로나를 명분삼아) 계속되었고 환경 수용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나라 밖에서는 기업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땅을 사들여 플랜테이션을 하고, 기존에 살고 있던 선주민이나 비인간동물들은 그대로 내쫓겨난다. 여기에는 토지정의도 생태정의도 기후정의도 설 자리가 없다. 이 문제들은 역사상 최고 수치의 불평등, 미증유의 기후위기,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부정의와 깊게 연루되어 있다.

이러한 토지·주거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진보와 발전의 신화들을 모두 걷어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와 우리의 토지관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대인의 지오멘탈리티는 위험하다. 이는 근대 이전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식과 그들의 지오멘탈리티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땅 주인이 몇 번을 바꿔든 평생 작은 땅뙈기에서 생명을 길러낸 한 할머니의 이야기며, 목숨만큼 땅을 아끼고 살폈던 조선의 농부며, 손의 손까지 염두에 두고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이며, 베어지는 나무 앞에서(독살되는 대지 앞에서) 온몸으로 나무를 끌어안고 저항하던 침코 운동의 인도 여성 소농들까지, 멸종당했지만 참 꽃꽂한 윤리관 위에서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지오멘탈리티는 어떤가.

적어도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 하늘과 땅, 인간은 더불어 공존해왔고, 땅은 소수가 독점적으로 소유해 사고팔리는 ‘재화(혹은 자원)’와는 거리가 멀었다. 근대 자본주의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재산권·소유권은 땅을 소유할 수 있고, 산을 가질 수 있다니 생각을 널리 펴트렸다. 우리는 모두 어디선가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빗대자면 ‘빌려 쓰는 존재’에 불과한데,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땅을 소유할 수

33) 스프롤(Sprawl)이란 도시가 급격한 발전을 겪으면서 주변으로 불규칙하면서도 무질서하게 교외로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있다는 생각은 어디에 그 바탕이 있나. 토지에 내 것이라고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누구의 소행인가.

주거문제로 돌아와도 마찬가지다. 당장 서울역 앞만 가도 줄지어 있는 노숙인 분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집을 잦게 만들었나. 원인을 소급해 올라가다 보면 ‘내 땅 내 집 마음대로 한다’라는 극단적인 부동산관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기대를 걸었던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모조리 실패하는 것을 보면 정책이 사람의 마음 혹은 사회심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더 이상 사는 곳도 한낱 재화도 아니고 불안이자 욕망이며 가장 확실한 투기처이자 꿈이 되어있는 듯하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들은 그걸 몰랐다. 혹은 알아도 모른 척하거나.

부동산 문제를 수요-공급의 문제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로 축소해버릴 때 사회심리와 공동체의 해체, 구성원의 박탈감과 소외감 등지를 놓치게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부동산 문제를 대하는 근본적인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느낀다.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불평등의 문제로만 치환하여 불로소득 추산과 불평등 통계에만 집중하였지만, 이제는 문제의 기준과 지표를 집값이 아닌 심리적 측면, 지오멘탈리티에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 어떤가.

토지 문제, 주거문제를 풀어나갈 이론적 모색의 첫걸음으로 본 장에서는 지오멘탈리티의 개념을 소개한다. 이어서 그 이론적 합의와 계보, 연결될 수 있는 여타 지점들을 살핀다. 지오멘탈리티의 접근은 네 가지 시사점을 지니는데, 하나는 그간 배제되었던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며 ‘경제주의’적, ‘물질주의’적 접근을 파훼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오류를 교정할 좋은 실마리가 된다. 다음은 지오멘탈리티를 들여오며 현상의 근저에 놓인 기제-이데올로기, 패러다임, 프레임-에 대한 논의로 담론을 확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도처의 땅문제 집문제를 투기적, 토건적, 수탈적 지오멘탈리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균형잡힌, 올바른, 지속가능한 지오멘탈리티를 논의의 한 가운데 위치시킴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지오멘탈리티가 필요한가 모색할 수 있다.

2) 지오멘탈리티란, 개념의 정의

“‘지오멘탈리티’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자리하고 있는 ‘땅을 보는 마음틀’이다. ‘지리적 환경을 다루는 마음틀’이라 할 수 있다. 문화경관의 형태를 이루는 바탕이다. 땅을 보는 마음틀은 실제 땅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과 이어진다(윤홍기, 2019).”

지오멘탈리티(Geo-metality)는 사람들의 마음속(무의식 수준)에 오래도록 자리하고 있는 ‘땅을 보는 마음틀’을 이른다. 사람들의 무의식 수준에 오래도록 자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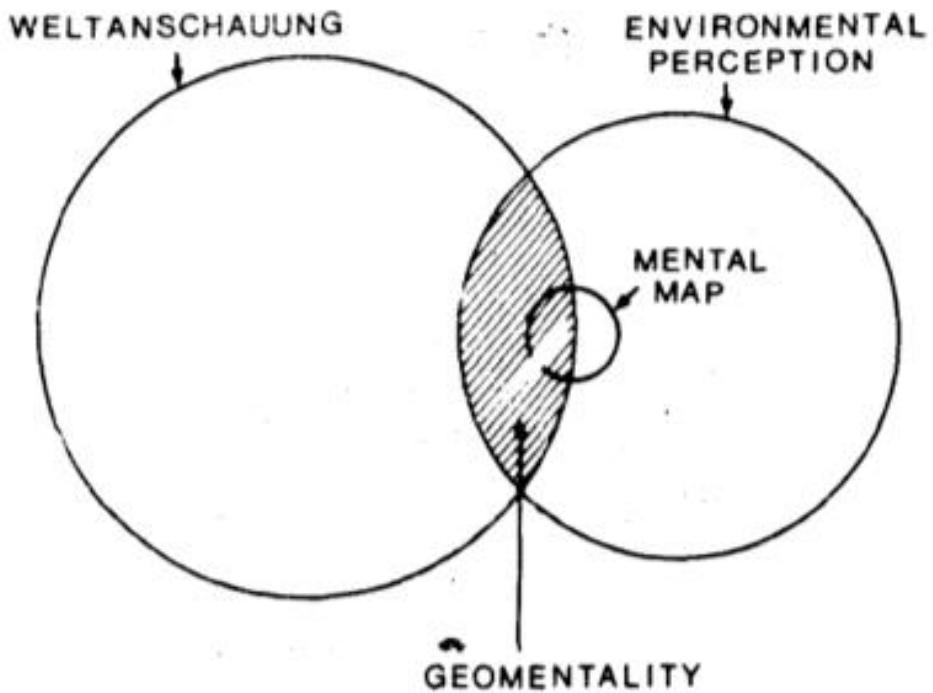
있는 토지관(觀)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개념은 문화지리학자 윤홍기 교수³⁴⁾에 의해 1980년대 경 처음 쓰여졌다. 그는 1987년 작성된 소논문 「韓國的(한국적) Geomentiality(지오멘탈리티)에 대하여」에서 지오멘탈리티의 학술적 정의를 처음으로 소개한다.

“Geomentiality는 geo, 즉 「땅」을 의미하는 말과 mentality, 즉 「정신상태」를 의미하는 말의 합성어로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상태(멘탈리티) 혹은 당연하게 인식되는 상태, 다시 말해 ‘개인과 공동체에 의해 정해지는 지리적 환경에 대한 멘탈리티’라 정의된다(윤홍기, 1987).” 지오멘탈리티는 「땅을 보는 마음 됨됨이」, 「땅에 대한 정신상태」, 「지리적 인식상태」 또는 「지리적 정신 구조」로도 쓸 수 있고, 「땅을 보는 마음틀」이라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윤홍기 교수는 용례를 개념상으로 둘 때는 「지오멘탈리티」라 쓰기에, 본 글도 이상의 맥락을 따른다.

윤홍기 교수는 지오멘탈리티의 전제조건으로, 지오멘탈리티는 인간의 멘탈리티 중 한 부분으로 땅에 대한 측면을 일컬으며, 특정 현상에서 보이는 개인이나 문화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행태유형, 그 뒤의 멘탈리티를 이른다고 설명한다.

지오멘탈리티는 문화지리학에서 처음 사용된 만큼, 지리학에서 쓰이는 세계관 (Weltanschauung), 환경지각(Enviromental Perception), Metal Map(거주지 선호의 지도화)과 비교될 수 있다. 윤홍기 교수는 ‘세계관’이 폭넓은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총괄적인 관(觀)이라는 점에서, 환경지각이 ‘인간의 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기성화 된 견해뿐만이 아니라 즉흥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는 사람들의 실제 행태와는 자주 무관하다’는 점에서, Mental Map은 거주지 선호를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오멘탈리티의 필요성을 이끈다. 이는 아래 표의 관계도에 상세히 드러난다.

34) 윤홍기 교수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에서 문화와 환경(자연)관계 또는 문화의 지리적 분포현상을 연구하는 문화지리학 교수로 있다.



<그림1>: 세상관, 환경인지, Mental Map과 지오멘탈리티의 관계(윤홍기, 1987)

지오멘탈리티는 어떤 문화지리 현상이 형성되는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내는 데 유용한 지리적인 현상을 다루고,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는 환경지각의 부분을 포함한다고 정리될 수 있다. “시대조류에 따라 변할 수 있되 쉽게 변하지는 않으며, 특정한 지오멘탈리티는 반드시 특정한 문화행태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고 어느 문화행태의 유형에는 일정한 지오멘탈리티가 그 밀바탕에 있는 것이라(윤홍기, 1987)”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리학의 개념으로 시작된 이 ‘지오멘탈리티’가 주거문제와 기후위기를 다루는 본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 것일까?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접근이 있을 듯하다.

첫 번째, 주거문제(혹은 도시문제)를 분석할 때 그 문화 현상의 기저에 놓인 지오멘탈리티에 주목하는 접근이 있을 듯하다. 어떤 문화지리 현상의 유형을 근본적으로 설명할 때, 행동의 결과를 보고 그 근본 동기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문화지리현상의 관찰 및 분석을 통해 그 지리현상을 이룩한 사람들(문화들)의 지오멘탈리티를 밝히는 식으로(윤홍기, 1982)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 지오멘탈리티의 변천사를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시기를 구분한 후, 그 변천과정에서 환경에 미친 영향

을 재고하며 지오멘탈리티를 비교할 수 있다. 세 번째, 토지 문제(그리고 주거 문제)의 바탕에 있는 지오멘탈리티로 그 문제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다. 네 번째, 이 분류를 바탕으로 각 문제에 영향을 주는 측면을 해결하는 지오멘탈리티의 가치지향성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이를 올바른, 지속가능한, 균형 잡힌 지오멘탈리티 부를 수 있다.

3) 지오멘탈리티와 이데올로기, 패러다임, 틀 – 서구중심주의, 상상계의 탈식민화

지오멘탈리티는 단순히 지리적·(자연조건으로의)환경적 영향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지오멘탈리티는 사회 안에 흐르는 패러다임,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혹은 주류 철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 어느 지역에서 그 자연적 조건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으로 구성된 지오멘탈리티가 다른 개입이나 역사적 격변, 혹은 수입된 멘탈리티의 패권에 의해 대체될 수 있고, 이미 그러고 있기도 하다. 이를 일종의 ‘전도된’ 혹은 ‘변형된’ 지오멘탈리티라 부를 수 있겠다. 이는 ‘지배적 세계관’, ‘서구중심주의’, ‘식민주의’논의와도 연결해 살펴볼 수 있다. 아래 윤홍기 교수가 든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 예를 보자.

“내가 사는 뉴질랜드 지오멘탈리티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뉴질랜드는 호주 옆 섬나라다. 북반구와 반대되는 곳에 있어 계절도 북반구와는 반대다. 그런데 뉴질랜드 사람들은 남반구에 살면서도 북반구 중심 지오멘탈리티에 적응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당연하다고 여긴다. 이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때 잘 나타난다. (중략) 북반구 겨울철 크리스마스 풍경과 풍속이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는 뉴질랜드 사람들의 마음틀에 자리 잡아, 남반구 사람들의 여름철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를 지배하는 것이다. 무의식에서 발현되는 지오멘탈리티의 힘을 느낀다.[북반구 마음틀로 보는 세상](윤홍기, 2019)”

무의식에서 발현되는 지오멘탈리티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일상의 모습에서도 묻어있다.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답시고 눈장식을 붙이는 광경은 어찌나 역설적인가. 이번에는 세계지도의 예를 보자.

“실제 아래위가 없는 우주에서 공같이 둑근 지구에 아래위가 있을 수 없다. (중략) 지도의 남북을 지도 아래와 위에 놓게 된 것은 오랫동안 습관처럼 고정된 탓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으레 관습에 따라 무의식으로 받아들이는 멘탈리티 때문이다. (더하여) “보통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올라가는 것으로, 남쪽으로 가는 것은 내려간다고 하는 개념도 북반구 지오멘탈리티의 산물이다. 뉴질랜드는 북반구 중심의 세계지도를 표준으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현재 남반구는 북반구 지오멘탈리티의 신식민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윤홍기:2019, 17p).”³⁵⁾

이 예는 서구중심주의가 지오멘탈리티에 깊게 스며든 사례로 볼 수 있다. 북반구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지도는 북이 위쪽으로 남이 아래쪽에 놓이게 된다. 이는 “지도는 땅이 아니다”는 철학자 알프레드 코립스키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지도’ 자체가 철저한 객관성의 자연물을 표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무의식 근저에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늘 자각해야 한다. 지오멘탈리티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을까.³⁶⁾

이는 우상향 직선을 진보로 상정하는 멘탈리티와 맞닿아 있다. “‘영원히 지속하는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은 진보가 앞으로, 또 위로 나아가는 운동이라는 메타포와 잘 맞아 떨어(Raworth. K, 2017)”진다.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은 『삶으로서의 은유』에서 ‘위로 가는 것, 앞으로 가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방향성의 메타포는 서구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짚어냈다.

조지프 슘페터 또한 숨어들어온 사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이야기해온 이 분석 이전 단계 인지 활동의 가장 밑바닥에서 등장한다. 분석 작업은 그 이전 단계의 인지 활동인 시야가 재료를 제공해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지만, 이런 시야란 거의 본성상 이데올로기적일 수밖에 없다.”³⁷⁾ 카를 만하임의 ‘세계관’,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어빙 고프만의 ‘틀(Frame)’ 모두 같은 결의 통찰을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그 자체로서 지대한 중요성을 지닌다. 레이워스의 말처럼,

“분석 이전 단계의 시야, 세계관, 패러다임, 틀. 이런 것들은 모두 서로 관련성이 깊은 개념들이다. 그런데 어떤 시야, 세계관, 패러다임, 틀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야만 마음 속에 뜻리를 틀 시야, 세계관, 패러다임, 틀을 바꾸거나 문제 제기할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Raworth. K, 2017).”

아마도 탈성장경제학자 세르주 라트슈와 철학자 코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가 ‘상상계의 탈식민화’를 주창한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성장과 개발이라는 일종의 우리의 상상계와 무의식을 깊게 잠식한 기제로부터 일종의 해방, 즉 ‘이데올로기

35) 위저드(Wizard)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된 지도를 꺼내 북반구로부터 남반구 지도학의 독립선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예시를 한국에 맞추어 본다면 서울에서 강원도를 갈 때 “내려간다”고 쓰는 것을 꺼내 볼 수 있겠다. 사실 강원도는 서울보다 높은 위도에 있다. 이는 한국에서 서울 중심의 지오멘탈리티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36) “표상화 작업에는 권력과 과학과 문화가 동원된다. (중략)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 지도는 북구의 관점에서 제작된 것이다. 남구의 관점에서라면 그 지도는 거꾸로 뒤집혀서 남극이 위에 가도록 만들어졌을 것이다. 대양의 남쪽에선 북극성이 아니라 남극성을 좌표로 삼아 ‘위로’ 향해 가기 때문이다. 그 지도는 북구의 항구에서 출발한 상선이 남구의 신대륙을 찾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구글 어스는 훨씬 더 균질화된 공간을 생산한다. 구글 어스는 우리의 위치를 대양이 아니라 대기권으로 옮겨 놓는다. 그것은 지구 위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창조한다. 이런 시점은 인간의 감각에 ‘지구의 관리인’으로서 조절자의 관점을 부지불식간에 각인시킨다.(채효정,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서평]자본의 ‘가치’는 자연의 ‘무가치화’를 통해 만들어진다, 워커스, 2020.10.13.)”

37) 조지프 슘페터(1954), 『경제분석의 역사』, (『도넛 경제학』에서 재인용)

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장과 개발이 일종의 믿음이라면, 그래서 한 국가 경제에서 ‘진보’를 비롯한 모든 기초 범주가 가지는 상상의 의미가 이 믿음을 넘어서 수 없다면 그 상상계가 바뀌어야 함을 의미 한다. 따라서 탈성장 사회에 도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의 상상계를 탈식민화하는 것을 뜻한다. 즉 세계의 변화가 우리에게 선고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세르주 라투슈, 2018).”

지오멘탈리티도 마찬가지다. 토지를 보는 관점, 더 깊이 들어가 마음 한편에서 작동하는 기제를 발견하고 명명함으로써 해방과 탈식민화 혹은 다른 가치관으로의 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애초에 다른 방식의 사회를 형성하거나 이룩할 수 있음을 지오멘탈리티는 시사한다.³⁸⁾

4) 균형 잡힌 지오멘탈리티와 지구 한계

“균형 잡힌 지오멘탈리티를 가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땅을 보는 마음들’은 비록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있다 해도 우리가 주위 환경과 더불어 살면서 땅을 이용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윤홍기, 2019).”

‘균형 잡힌 지오멘탈리티’란 무엇일까. 무엇이 되었던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문제를 풀어갈 주요한 개념인 것은 분명하다. 기후변화부터 해양산성화까지 ‘땅’이 아닌 영역에서의 생태위기조차 모두 육지를 기반으로 하는 인류 문명의 존속 방식으로부터 연원했다. 요한 록스트룀과 그 동료 과학자들의 아홉 가지 ‘지구위험한계(Planetary Boundary)’를 보면 토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후변화, 성충권 오존층의 파괴, 생물 다양성의 손실률,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해양 산성화, 담수 소비, 토지 이용의 변화, 질소·인에 의한 오염, 대기 오염 혹은 에어로졸 부하 모두 땅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³⁹⁾ 괜히 이전의 정치경제학자들이 토지를 ‘자연’의 대체어로 썼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이 9개 중 4개가 – 인·질소와 종 멸종률, 기후변화와 토지 이용 변화 – 가 지구 한계를 넘어 위험지대에 들어서 있는 상태다. 기후변화의 한계 지점은

38) 한편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다. 지식과 권력으로 이루어진 복합체가 사회 전반에 걸쳐 수행되고 있음을 자각할 때 대항 권력·대항 운동의 가능성성이 생기듯이, 지오멘탈리티에 깃든 이데올로기를 끄집어낼 때 다른 가능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39) “그간 너무나 많은 열대지역의 열대우림, 온대지역과 냉대지역의 숲을 파괴한 결과 현재는 본래 지구를 뒤덮고 있는 숲의 약 60퍼센트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중략) 지구의 복원력을 지키려면 세계 숲 지대의 적어도 75퍼센트를 보존해야 한다(록스트룀, 201£).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350ppm인데 작년에 415ppm을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되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7년 남짓이다. 홀로세가 가고 인류세(Anthropocene)가 도래했고, 지난 몇 세기 이래, 인류의 토지 이용의 변화는 급격한 단절이라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유례없이 빠르게 변해왔다. 마찬가지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숨 쉬고 물 마시는 것 말고는 다 바뀌어 버렸다.

그렇기에 이제는 지구 안에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지속가능한 궤도로 돌려놓는 것이 권장사항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조건이 되어버렸다. 지속가능성은 권장사항에서 선결조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균형 잡힌 지오멘탈리티’는 그렇기에 ‘지속가능한 지오멘탈리티’라 쓸 수도 있겠다.

땅을 이용하는 모든 방식과 마음가짐에 가이드라인과 한계가 지워져야 한다. ‘무지막지하고 제한 없는 방대하고 배타적인 근대적 소유’,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무한의’ 지오멘탈리티는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균형 잡힌 지오멘탈리티는 우리가 이 지구라는 터전에 빨붙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필요조건과 같다.

5) 근대 이전과 이후의 지오멘탈리티

언제부터 지오멘탈리티에 균형이 깨졌을까. 언제부터 인간과 토지(자연)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을까. 근대화 이전 한국에서는 ‘생태’라는 낱말이 없었다. 자연(自然)만 있었을 뿐이다. ‘Ecology(Oekologie)’는 에른스트 헤겔의 1866년 저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전까지는 생태라는 낱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생태 문제가 뚜렷하게 있지 않았다는 소리가 된다.

마찬가지로 근대 이전의 사회를 들여다볼 때 지오멘탈리티가 균형 잡혀 있었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전통 풍수지리관에서 이 면면이 잘 드러난다. 사회 혹은 공동체의 조직 원리 한가운데 지속가능한 지오멘탈리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장수군의 일례를 보자.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마을은 지역 모양이 행주형으로 둑둥 떠가는 배 모양이 란다. 때문에 마을에 집이 한 40호 정도가 넘으면 마을 운세가 기울어 마을이 가난해지고 40호 아래로 내려가면 마을 운세가 다시 돌아서 홍한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배 모양을 떤 마을이라서 배에 집을 너무 많이 짓으면 배가 가라앉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주어진 양의 농토와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임야를 가진 마을에서 최대한 개발가능한 규모가 40호라고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전설에는 한국의 시골에서 개발할 때 가지는 한계점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사하는 한국인의 지혜가 담겨 있다(윤홍기, 2019).”

지구조건 혹은 자연조건 혹은 토지의 한계는 이런 식으로 근대 이전의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 굳이 ‘생태’라는 낱말이 필요하지도 ‘생태적’일 필요도 없이 말이다.

이는 비단 우리의 선조들에게만 자리잡고 있던 멘탈리티는 아니다. 근대 이전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행위가 몇 세대 뒤의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살았던 방식은 분명 인상적인 지점이 있다.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민들은 순환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자신들이 사는 땅을 자손들로부터 잠시 빌려서 쓰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나아가 자신들이 선택한 일의 결과가 일곱 세대 이후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심사숙고했단다. 심지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삼림 관리 대장에는 장차 보수하거나 재건축할 건물들에 쓰일 나무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처음 건물을 세울 때 사용된 목재의 수명을 고려하여 동종의 어린 나무를 미리 학교 어느 곳에 심어 수백 년 이후를 대비해 놓은 했다는 것이다(김종철, 2019).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오멘탈리티, 땅을 보는 인식·마음들은 다른 여타 인식 지평이 그렇듯 근대 이후로 크나큰 단절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땅에 울타리를 치며 소유권을 주창하던 인클로저를 시작으로, 인간과 자연이 땅과 맺고 있는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 혹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말 할 수 있다. 이는 칼 마르크스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물질대사의 균열’로 바라보던 연구에서도, 토지와 노동(인간)이 전통적으로 분리되지 않았음을 고찰한 칼 폴라니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폴라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토지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의 여러 제도와 떼어낼 수 없도록 엮인 자연의 한 요소이다. 전통적으로 토지와 노동은 분리되지 않았다. 노동은 인간 삶의 부분을 형성하며, 토지는 자연의 일부인 채 남아있고, 삶과 자연은 함께 뭉쳐 유기적 전체를 구성한다.(K. Polanyi, 1944 : 464p)”

즉, 폴라니 표현대로라면 ‘유기적 전체’가 비-근대 사람들과 문화에서 드러나는 지오멘탈리티라 이를 수 있다. 이는 고대의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우리의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었다.

1854년 인디언 추장 시애틀은 땅을 팔라는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간디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땅은 우리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만 단 한 사람의 탐욕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⁴⁰⁾

하늘과 땅, 인간은 더불어 공존해왔고, 소수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사고파는 대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생각의 전환은 빠르고 깊숙이 빚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근

40) 슈마허(E. F. Schumacher),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문예출판사, 2002,에서 재인용

대 자본주의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재산권·소유권은 지오멘탈리티를 타락시켰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⁴¹⁾ 이 빠른 지오멘탈리티의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윤홍기 교수는 급속히 변해가는 한국의 전통 지오멘탈리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며 아쉬움을 표했다.

“환경에 이로운 한국의 전통 지오멘탈리티는 현대 도시지역 개발업자에게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도시개발과 부동산 사업을 주도하는 지오멘탈리티는 이윤추구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자본주의 사고방식으로 대치됐다. 전통 한국 시골의 자연과 인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토지를 이용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래도록 지속가능한 토지 경작을 마음에 두고 농사짓는 농부의 지오멘탈리티는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도시의 부동산 개발업자의 지오멘탈리티와는 대조될 수밖에 없다(윤홍기, 2019).”

“이러한 풍수지리설에 기저를 둔 한국인의 *geomentiality*는 근래에 와서 현대적인 한국인의 *geomentiality*로 대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최근(특히 1960년대 초반 이후) 급격히 변화해 오고 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경관에 잘 나타나 있다. 도시경관이 구미선 진국의 현대 도시 경관처럼 되어감에 따라 재래 한옥과 골목길의 경관이 사라져 가고 양옥, 마천루 및 넓고 곧은 길 그 자리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 어디를 가나 편리성, 경제성 위주의 건물 및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각지의 지역적인 특성이 소멸하고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시골 경관에서도 초가지붕은 사라지고 어색하지만 경제적이고 편리 위주인 시멘트기와나 양철지붕으로 바뀌었으며 논두렁이 꼬불꼬불했던 크고 작은 논밭들은 일정 면적의 바둑판식 직선 논두렁의 경지로 바뀌었다. 가장 보수적인 무덤(분묘) 경관에서도, 단독 묘지는 공동묘지 또는 보다 더 서구적인 공원묘지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한국인의 재래 *geomentiality*는 급격히 현대 한국인의 *geomentiality*로 대치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 경관은 특히 1960年代 초반 후 급격히 변하고 있고, 이 변화는 우리나라 *geomentiality*가 음양오행 풍수지리설에 기저를 둔 것으로부터 자본주의(이윤추구주의), 기능주의, 구미지향주의에 기저를 둔 현대 *geomentiality*로 바뀌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상 우리나라 문화지리 현상의 조성에 있어서 무덤(분묘)을 제외한 풍수지리설의 중요성은 극히 무력해지고 있고, 무덤 경관에 있어서도 풍수지리설의 힘은 급속히 위축되어 가고 있다(윤홍기, 1987)”

가장 보수적이라는 무덤 경관조차 변해가는 이 지점은, 한국의 지오멘탈리티가 변하는 속도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다. 어쩌면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급속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서, 수천 년간 지속가능한 형태로 자리잡은 지오멘탈리티를 버리면서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

41) 마조리 켈리(Marjorie Kelly)는 우리가 그간 유지해 온 소유권 모델이 금융 착취를 최대화한다는 의미에서 ‘착취적 소유권(extractive ownership)’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금융의 부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부를 위하여 소유권을 생성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와 우고 마테이(Ugo Mattei)는 소유권이 착취적일 경우 공동체의 사회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그 권리 인정을 철회할 권리가 공동체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안새롬, 2020)

6) 토지·주거 문제의 지오멘탈리티 – 투기적, 토건적, 수탈적 지오멘탈리티

지오멘탈리티는 부동산 문제에도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 토지에 관한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주거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이를테면 헨리 조지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독점(지대와 불로소득 독점)구조를 짚어내며 지오멘탈리티의 변화를 관찰했다.

“물질적 진보에 의해 기대효과가 생긴다. 여기서 기대란 미래의 토지가치에 대한 것이다. 모든 진보하는 지역에서는 지대가 꾸준히 상승하고, 사람들은 이를 지켜보며 미래의 토지가치가 확실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런 기대로 인해, 토지를 이용목적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을 받을 목적,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려 한다. 이들은 그것을 최선의 용도로 투입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적당한 시기에 팔아 높은 가격을 실현하는 것을 중요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면 곳곳에서 토지가 유휴화되고 그 결과 한계지는 생산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위치보다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⁴²⁾⁴³⁾

(1) 투기적 지오멘탈리티

토지와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사회, 한국 사회다.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투기적’ 지오멘탈리티가 형성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더 이상 사는 곳도 한낱 재화도 아니고 불안이자 욕망이며 가장 확실한 투기처이자 꿈이 되어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연속된 실패 끝에 만들어졌지만, 현행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게 하는 주요인이라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의 지오멘탈리티에 외부 충격이나 정책 실패 등으로 변화가 생길 때, ‘부동산 시장’은 이전과는 달라진다. 이전에 먹혔던 정책이 유효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정책 신뢰도’와 같은 변수에 균열이 생겨버리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투기 과열은 이미 손 써볼 수 있는 지점을 흑 지나버렸는지도 모른다.

이를 ‘부동산불패신화’라고 한다. “부동산을 사면 손해는 안 본다”는 지오멘탈리티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사는 이 신화의 들킨한 물적 배경이 되었다. 집값이 여타 재화나 주식 시장처럼 등락을 반복했던 경험이 없다. 그렇게 “내 땅 내 집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극단적인 ‘사유재산 제일주의’가 자리 잡는다. 지금도 부동산 정책은 스포츠 경기보다 더 뜨거운 온 나라의 주목을 받고, 어떤 정책이든 뭘 내놨다 하면 손해를 보는(이것은 ‘손해’보다 그간의 불로소득이 차단당한 것이다) 이들의 강경한 저항에 맞부딪힌다. 유독 부동산 보유세에 조세저항이 강한 것도 그

42) 시원의 발제문 중, (헨리 조지(1879), 『진보와 빈곤』)

43) 케인즈의 투기적 화폐수요와도 비슷하다. 화폐를 보유하고자 하는 동기(‘멘탈리티’에 근접한)가 달라질 경우에는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 이를 투기적 토지수요, 혹은 투기적 부동산 수요라 이름붙일 수도 있겠다.

까닭이다.

2) 토건적 지오멘탈리티

이런 식으로 ‘투기적 지오멘탈리티’가 생겨버리면 ‘실거주 수요’와 큰 관계없이도 자본의 외연 확장 움직임과 같이 점차 토지개발의 확장이 일어난다. 투기가 토건으로, (닭이냐 달걀이냐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게) 번지는 것이다. 서울의 중심지부터 차례차례 개발을 거쳐 신도시를 만들고 또 신도시를 만들고, 수도권 밖으로 점점 넓혀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당연히 (정보도 시간도 권력도 남아도는) 선지적 투기자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말이다.⁴⁴⁾ 이 한가운데는 ‘토건적 지오멘탈리티’가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단 뭔가를 지으면 된다.”, “뭔가를 파면 나온다”라는 명제로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으로 분칠한 4대강 공사가 대표적인 토건적 지오멘탈리티가 그 모순을 내보인 사례다. ‘자연이라는 잠재적 ‘자원’을 인공적으로 변형해 화폐수익과 연결된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뿐 리 깊이 오염된 지오멘탈리티가 4대강 공사의 기저에 흘렀다. 이 전 방위적 개발 논리는, 아직도 곳곳의 지방정부나 정부의 재정계획에 잔뜩 스며들어 있다. 공항을 짓고, 신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개발하는 식으로 말이다. 정부의 그린뉴딜은 이 흐름에 역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의 지오멘탈리티는 극단적인 역사 경로를 거쳐와 ‘지속가능성’과 ‘균형’과는 멀어지고 말았다. 이것은 한국이 ‘기후악당’인 까닭을 말해주는 하나의 설명일 수 있겠다.

3) 토지수탈(Land grabbing)의 지오멘탈리티⁴⁵⁾

투기와 토건이 국외로 눈을 돌리면 토지수탈이 된다. 이는 개발(Development)의 문제이자 국가 간 부정의의 문제, 남(Global South)-북(Global North) 혹은 제 1세계와 제 3세계의 문제가 된다.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구 어느 곳이든 지오멘탈리티에 스며든 서구중심주의는 실물계에서 ‘땅뺏기(Land Grabbing)’로 드러나고 있다(스테파노 리베르티, 2011). 신식민주의라 불리는 방식이다. 땅을 ‘터전’으로 여기는 지오멘탈리티가 자리 잡은 선주민(토착민) 지역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수출용(자국수입용) 식량기지로 재편하는 글로벌 땅투기, 땅뺏기가 빚어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초국적 금융자본의 약세

44) 한편, “녹지가 자본이다”는 말이 등장했다. 한국 사회의 지오멘탈리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일지다. 자본은 벌써 녹지확보에 들어갔고 이는 녹지의 희소성을 반증할지도 모른다. 각종 생태위기, 환경오염 속에서 녹지를 확보하는 시도로, 이는 환경관리주의 정도의 지오멘탈리티도 가지고 있지 않다.

45) 이것을 어떻게 이름붙여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다. 식민주의적 지오멘탈리티, 개발(development)적 지오멘탈리티, 토지수탈의 지오멘탈리티 중에 용어사용을 고민하다가 (개발은 토건과 국어 용례상 구별이 어려움에, 식민주의는 다소 낡은 표현임에) 마지막으로 정한다. 토지수탈(Land grabbing)은 땅뺏기·토지강탈·토지수탈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2008년 이후 두드러지는 1세계 기업-국가의 3세계 토지 매수, 투기, (지속가능하지 않은) 토지 사용을 지칭한다.

가 이 땅투기로 이어진다는 점이 아주 곡 할 노릇이다. 자국의 땅뿐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의 값싼 땅을 사들여 자국의 국민을 배를 불리겠다는 미명 아래 부를 축적하는 개발꾼(Developer)에게 어떤 지오멘탈리티가 자리잡고 있을까. 이를 ‘토지수탈의 지오멘탈리티’라고 명명한다.

한국의 경우는 농어촌공사의 짓거리에서 더 잘 드러날 듯하다. 한국 기업들과 공적금융기관, 공사들은 2000년대 이후 이 땅투기와 땅뺏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대우가 마다카스카르에 가서 한 짓, 포스코와 삼성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하는 짓을 보면 한국의 왜곡된 지오멘탈리티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일 수 없다. 올바른 지오멘탈리티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지평과 국가 간 기후정의의 관점에서도 제안될 수 있다.

7) 지오멘탈리티의 확장 – 생태시티준십과의 만남

이 마음들은 바꾸기가 어렵다.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얹혀 있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묻기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 만들어져 자리 잡은 지오멘탈리티는 논리에 바탕을 두지 않고 당연한 ‘상식’이 되어간다. 부동산 계급사회의 주범은 땅을 사고파는 ‘재화’로 보는 시선이다. ‘집’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 모양인 지오멘탈리티에서는 그린뉴딜도 어렵다. 이 지오멘탈리티에서는 부동산 정책도 필연적으로 실패하고야 만다. 한국판 그린뉴딜이 담고 있는 지오멘탈리티를 살펴볼 필요가 필요하나, 한국판 뉴딜을 들여다보면 ‘토지’에 대해서 일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땅 위에서 벌어짐에도 말이다. 주거 문제를 사유하는 지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스무레한 것은 오직 그린리모델링 뿐이다. 하지만 녹색전환이 생존의 차원임을 생각할 때 한국의 불평등을 쥐어잡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 없이, 투기적 토지수요를 해결할 방도 없이 어떻게 전환을 일구어낼 수 있을까. 이후에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녹색 전환을 일구어내기 위한 지오멘탈리티를 고민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어떤 지오멘탈리티가 요청되는가. 먼저 이전의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을 살펴보고 그들의 ‘균형잡힌’ 지오멘탈리티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온고지신이라, 균형 잡힌 지오멘탈리티의 단초가 일면 그곳에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인간과 자연, 사람과 땅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할 수 있는 지오멘탈리티 탐색에 임하였으면 한다.

다음으로는 지구한계과학과 기후과학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지오멘탈리티’다.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토지이용에 부과되는 생태적 한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한한 소유에서 ‘유한한 뿌리내림’으로 바뀌어야 한다. 토지 이용의 양적 규모와 질적 사용에 있어서 뚜렷한 생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넛 경제 모델의 동심원 사이의 영역을 인지하는 형태와 같이 멘탈리티

가 자연적·사회적 한계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는 점을 시사한다.

이어서는 생태시티즌십 담론을 살펴보려고 한다. “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은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시티즌십 개념에 세계시민주의와 생태주의적 지향을 통합한 것으로서, 생태적 세계시민의 권리, 권한, 책임, 의무, 배려와 그것들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일체의 제도와 사회적 관행을 의미한다(박순열, 2019).” 생태시티즌십은 기후위기라는 미중유의 사태 앞에 마주해, 문제 해결에 긴요한 새로운 시민의 모습을 탐색하는 과정의 개념이었다. 이는 올바른, 균형잡힌, 지속가능한 지오멘탈리티를 모색하는 본 글의 취지와 비슷한 맥락을 공유하고, 따라서 이 개념과의 연결짓기를 통해 올바른 지오멘탈리티로의 윤리적 요청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남는 질문은 여전히 있다. 지오멘탈리티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부동산·주거·토지 문제에 의미있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담론의 지형을 보다 섬세하고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혹은 기후위기와 전 지구적 불평등으로 요약되는 우리 시대에 요청되는 지오멘탈리티에 대해 유의미한 탐구를 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연구에서 박순열 도시재생연구소장과 두 개념을 들고 만남을 가져본다.

2. [만남 – 박순열] 지오멘탈리티와 생태시티즌십

- 도시재생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prolog

박순열(이하 순열): 잘 들리나요?

장윤석(이하 윤석): 네 지금은 잘 들립니다.

순열: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윤석: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제가 인터뷰를 요청한 것은 선생님께서 사회 문제 특히 도시·환경·주거 문제를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의 무의식 근저에 있는 인식과 지향에 초점을 두신 걸 눈여겨 봐두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태 시티즌십⁴⁶⁾ 연구를 따라가며, 이 연구들이 그간 우리 사회가 다다른 각종 지구적 사회적 한계 앞에서 요청되는 사람·시민상을 말하기 위함이라 여겨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질문지를 쓰려고 하는데 다른 인터뷰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기분도 들기도 했고, 지오멘탈리티와 생태시티즌십 모두 다 생소한 개념들이라서,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주장에 그치고 끝나겠다 싶어서 텍스트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1)기후위기 시대에 요청되는 멘탈리티(인식유형, 인식구조 또는 가치지향), 그리고 (2)생태시티즌십 논의를 확장 또는 원용하는 경우에 도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큰 두 주제로 하고, 그밖에 제 연구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과, 선생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들을 여쭐까 하는데 팬참겠지요?

순열: 그래요. 그렇게 진행을 하지요.

2) 지오멘탈리티와 생태시티즌십 – 두 개념의 비교

윤석: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오멘탈리티와 생태시티즌십이 어떻게 비교·검토·이야기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다른 배경과 맥락에서 출발한 두 개념을 연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오멘탈리티의 경우 문화지리학에 배경을 두고, 경관과 공간에 묻어 들어가 있는 문화와 그 문화 근저에 있는 마음들을 이르는 과학적 혹은 중립적 개념인 반면, 생태시티즌십은 자유주의 정치학에 배경을 두고, 시민의 권리, 권한, 책임, 의무 등 ‘덕목’ 뿐 아니라 이에 연관되는 제도와 관행까지를 포괄하는 넓고 정치학적 개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두드러지는 차이는 “생태시티즌십은 생태적인 것과 정치체가 특정한 인간에게만 부여하는 지위, 권리, 관행의 복합체인 시티즌십의 결합” 임에 비해 지오멘탈리티는 땅과 문화가 부여하는 것이지요. 지오멘탈리티가 문화적인 것에 비해

46) “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은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시티즌십 개념에 세계시민주의와 생태주의적 지향을 통합한 것으로서, 생태적 세계시민의 권리, 권한, 책임, 의무, 배려와 그것들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일체의 제도와 사회적 관행을 의미한다(박순열, 2019).”

생태시티즌십은 정치체제가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바로 이 개념의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쭙고 더 설명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도 여쭙습니다.

순열: 제가 생태시티즌십이나 지오멘탈리티에 대한 이해가 깊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추론을 해보면요. 생태시티즌십과 지오멘탈리티 양자가 사물이나 대상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다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대상이나 사물, 사회적 강제(혹은 힘)를 바라보는 관찰자, 연구자,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개념화되고 다른 형태로 접근이 된다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생태시티즌십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땅에 대해서 이야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 이 땅이 인간이나 다른 비인간 생물 종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땅 자체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 땅을 다른 땅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비인간 생물 종들이, 혹은 그 이전 시간이나 그 이후 시간과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관찰할 것인가에 따라 그 땅의 속성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보다 제가 이 논문⁴⁷⁾을 쓸 때하고 현재하고, 한 일 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태시티즌십을 바라보는 생각이..

윤석: 네? 어떻게 바뀌었지요?

순열: 조금이라면 조금이고 많이 라면 많이 바뀌었는데, 내가 이 논문을 쓰던 일 년 전에는, 방금 내가 한 이야기로 다시 표현하자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속성 혹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었고, 그것을 현시점에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적으로 보다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작년에 강하게 했었는데, 그러나 현재는 그 입장으로부터 조금 다르게, 결이 약간 다르게 되었어요. 본질적인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사태를 다른 관계에서 보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또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개념의 차이는 아까 표현한대로 문화지리학이나 정치학의 학문의 차이라기보다, 문제가 되는 사태가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있고, 따라서 가장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있느냐를 가정하고 접근할 것이냐, 혹은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용자, 연구자, 관찰자에 의해서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볼 것이냐의 차이인 거지요. 최근에는 후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윤석: 그렇군요, 왜 그런 생각 변화의 계기가 있으셨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순열: 제가 한 2, 3년 가까이 루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최근에 이에 대한 논문⁴⁸⁾도 한 편 냈어요. 이 연구를 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지요. 사실

47) 박순열, 「생태시티즌십 : 생명과 자유를 구현하는 새로운 시민의 모색」, 환경사회학연구 ECO 23(2), 2019.12

48) 박순열. 2020. 「‘사회’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가?: 사회의 가능성과 변화에 대한 관찰」.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는 애초에 생태시티즌십에 대해 이야기 할 때도 그 어떤 긴장을 느끼고는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규범적으로 도달해야 할 상태가 있다,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가정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현재 우리가 봉착한 사회의 상태가 너무 복잡하고 결코 단일한 요인들에 의해서 환원될 수 없다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것들을 약간 절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고 글을 써왔는데, 최근에는 그 절충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전에 절충했던 입장보다 어느 한 입장을 강하게 갖는 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령, 생태시티즌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블로카디아 문제를 예로 들면, 어떤 하나로 다른거를 환원될 수 없는 중충결정 상태라고 썼는데 -그게 알튀세르가 썼던 표현이지요- 이는 다른 많은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반드시 우월하진 않지만,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희망 규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논증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풀어내지는 못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때와 약간 그 부분에서 다른 입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윤석: 음 그렇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판적 실재론이나 윤리학에서 칸트주의자들이 많이 말하는 실재와 분명한 윤리적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이 사태들을 바탕으로 결합하는 그 지점에 가깝다는 걸로 들리네요. 화이트헤드 철학에 기반한 생태학에 따르면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 자체는 어쩌면 오류를 잔뜩 가미한 형태의 방식이고, 생태학적 모델은 규범적 미래나 설계된 미래를 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수한 생태계의 그물망 안에 담긴 현실의 복잡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요. 그런 느낌이 맞을까요?

순열: 그거와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거와는 또 약간 다른 인식의 문제, 존재의 문제, 그리고 학문적인 접근의 문제가 있지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들을 끌어가는, (논문에 썼던 거와 비교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차이는 생태시티즌십을 둘러싼 어떤 이론적인 변화와 쟁점이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어쩌면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오멘탈리티는 ‘땅을 보는 마음틀’이라는 면에서 지리학자들이 쓰는 정말 객관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기후위기나 지금 한국의 부동산-토지 문제에 비추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잘못된 방식으로 지오멘탈리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올바른 방향이 있고, 이 방향은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근대 이전의 사람들이 가졌던 지오멘탈리티에 영감을 얻는 생태주의적 접근법과, 록스트룀의 지구한계과학이나 지금 기후과학의 증명된 접근을 동시에 취한다. 마

공간과 사회. 30(3). 통권 73호 pp. 62-98.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1927~1998년)
독일의 사회학자로 체계이론으로 유명한 구성주의자이다.

땅히 과학에 기반하고 생태적 지혜에 영감을 얻은 윤리적인 ‘올바른 지오멘탈리티’가 존재할 것이다, 가정을 해두었지요. 그런데 아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잠깐 씩 들기도 하더라고요. 복잡한 사회문제를 단순하게 압축해서, 이론적으로 순수하고 분명한 ‘올바른 멘탈리티’를 제안하는 것이 학문적인가 고민이 됩니다.

3) 생태주의와 자유주의의 문제 – 지오멘탈리티에 있어 생태주의의 접근에 대한 이야기

윤석: 제가 지오멘탈리티로 근대 이전 사람들의 토지관을 관찰 할 때 시애틀 추장과 칩코 운동 등 비-근대적인 토지관을 가진 이들의 멘탈리티를 균형 잡힌 것(따라서 이 시대에 필요한 멘탈리티)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지오멘탈리티는 생태주의의 색채가 묻어있는 개념인 듯합니다. 한편, 그래서 이 지오멘탈리티와 자유주의 이론에 기반이 된 생태시티즌십이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간 자유주의와 생태주의를 멀게 여겨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순열: 비근대적인 토지관이나, 자유주의와는 다른 멘탈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졌던 점과 생각을 말할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선택지는 근대의 성취물 중에 긍정적인 것들, 이를테면 자유 평등 인권과, 이와 분리된 시대에 있었던 전-근대적인 혹은 비-근대적인 생활양식 두 개가 함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태 문제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아름다웠던 공동체를 상상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혹은 근대가 성취한 좋은 것과 전근대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섞으면 새로운 형태의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전-근대의 좋은 것들은 전-근대의 좋지 않은 것들과 한 쌍이었고, 근대의 좋은 것들은 근대의 좋지 않은 것들과 한 쌍이었고,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분리해서 각각을 갖다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현실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현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좋은 상태로 눈을 돌려, 토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과거의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나 사상을 현재에 맞게 재구성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바람직했기 때문에, 지금도 바람직하고 통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별로 학문적으로 엄밀함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석: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태주의적 낭만화가 학문적으로 엄밀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특히 사회과학적 엄밀성을 이야기 할 때는 아름다웠던 과거의 공동체 이야기를 가져오는 건 조금 문학적 영역에 가깝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저는 생태경제학을 전공할 것 같은데 이 학문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학과 윤리학과 과학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넛경제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간 쌓아놓은 과학들에 기반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지속가능성의 이름으로 말할 때, 경제학과 과학과 윤리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적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단순한 추억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서, 그때 있었던 -맑스 표현으로- 특별히 물질대사의 균열이 크게 나지 않는 형태로 존재했던 문명들에 대한 복기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있지 않을까요?

순열: 그런 생각은 요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생태적 맑스주의나, 사회나 환경의 물질대사의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의 문제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과거의 그런 공동체가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면 그 공동체는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교육, 사람들의 친밀성, 그걸 떠받치는 문화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공동체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듯이 위계적이고 억압적이고, 개인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된 형태의 공동체들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자유주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지금의 사람들이 소규모 공동체를 사람들이 상상하고 대안을 이야기하지만, 그때 소규모 공동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면, 현재 우리기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하는 자유, 평등,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의미 있게 작동하지 못했지요. 현대사회는 사회과학적 표현으로는 기능분화적인 사회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에만 온전히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자율성을 갖는 거잖아요. 직장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과, 소비자로서의 행동과, 대학에서의 행동이 다 다르기에, 한 사람이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갖는 자율성이 등장하는 건데, 이걸 공동체 안에서 생산과 경제와 교육과 친밀한 관계가 한 곳에 융축이 되면 그 자율성이 어려워지지요. 예를 들어, 옆집 아저씨인데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500원짜리를 500원에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가, 혹은 바로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이 사회적 규범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지금처럼 편하게 그런 행동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반 생태적인 행동을 하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느냐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삶이 지역 공동체라는 범위 내에서 융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규범, 과학의 문화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되게 쉽게 생각을 하거나, 그 문화로 인해 얻게 되는 현대 사회의 성취들이 어디 있는지 생각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소규모 비-근대적 공동체의 낭만화는) 사회과학적으로 엄밀하지 않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불가능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많은 환경사회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이 현대 사회가 기능분화 된 사회인 탓에 문제가 많다, 인간의 소외가 많다, 와 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다 정리하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소규모 공동체로 돌아가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위치로 돌아와 생각을 해보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맑스가 생각한 것처럼, 6시간 동안 어업하다 6시간 동안 밭일하다가 6시간 문학 혁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전혀 할 수 없잖아요. 다기능적인 역할을 다시 하나로 합치면 사회적인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 너무나 몰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별로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윤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생태주의 공부나 이반 일리치를 참 좋아하나 느꼈던 한계점이 아마 그런 지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판은 유효하나, (복잡한 현대 사회 앞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 자체가 마땅치 않은 거지요.

4) 자유주의와 맑스주의(생태사회주의)의 문제

윤석: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생태시티즌십은 자유주의에 많이 기반한 이야기잖아요, 반면에 기후정의나 생태정의 같은 경우는 맑시즘의 영향이 짙지요. 그러니까 생태사회주의자들이 기후정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지오멘탈리티도 제가 쓰는 순간 부동산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생태사회주의의 색채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생태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윤리적 경로 혹은 제안과 생태시티즌십은 어떤 면에서 어떤 비교, 생각해 볼 지점이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맑스에콜로지도 공부하시고, 탈성장 담론과 기후정의에도 관심을 많이 두셨는데, 이들과 비교했을 때 생태시티즌십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예컨대 저는 자유주의 이론의 반 생태적 함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⁴⁹⁾ 특히 폴라니의 시야에 기반해있어 자유주의 이론의 ‘겉으로 번쩍한 어여쁨’이 위기의 씨앗이라는 생각,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적 자유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적이지요. 그래서 때 꼭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상적인 질문이네요(웃음).

순열: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음, 생태시티즌십에 대해서 자유주의를 출발점으로 삼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맑스주의 입장처럼 현대사회를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계급 간의 갈등과 사회주의 혁명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맑스주의 입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로 기능분화 되어있는 현 사회를 자본주의라는 경제체계가 최종, 가장 우월하고 중심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가정하지만, 만약에 사회는 그렇

49)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국가중심 그리고 국가간 체계가 갖는 본질적인 한계 와 더불어 에커슬리(R. Eckersly, 2005)는 자유주의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결핍과 제도운영자들의 단기적, 제한적인 안목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 했다(박순열: 2019에서 재인용).

게 특정한 하나의 구분체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거나 그게 나머지 것들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한 거지요. 저는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맑스주의적인 해법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생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그리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히 개별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있어서는, 계급 이론적인 접근은 별 답을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 계급이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이기 때문에 반 생태적이고 친 생태적이라는 것은 자본론에서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대 사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 출발해서 이론을 풀어간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 있다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관심 있는 건 어느 계급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계급에 속해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경제적인 영역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가, 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가치나 태도로 문제를 풀어가는가 생각해 볼 때, 맑스주의가 대답해줄 있는 이야기가 없어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생태시티 즌십이라는 자유주의 이론들을 가져다 쓴거지요.

도시일 수도, 빨전소일 수도, 오일채취현장일 수도 있는 어디선가 벌어지는 어떤 갈등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자 남자, 직원, 인종 다 다른데 이걸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으로 나누어 접근한다는 것이 난센스라 생각합니다. 원주민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가 있는데, 원주민 문화와 노동자 계급이 타협할 수 있나,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약탈적 행태를 하는 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화석 연료 기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일을 지역의 자본축적으로 단언할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계급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또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다른 시민들과의 관계 역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뤄보고 싶어 그 개념을 썼었고,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자유주의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저 학문적으로, 제가 주변에서 환경 갈등 조사 다니면서 만나는 동네 주민들 나이 많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왜 다른 방식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지, 이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왜 정치제도를 통해 풀어보려고 하지 않지, 이 사람들은 왜 단기적인 이해관계와 작은 이익에 몰두하지 이런 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인 자원, 방법론적인 틀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걸 찾다 보니 생태시티즌십이라는 개념을 쓰게 된 거죠. 게 환경문제 기후변화를 해결해갈 유일할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걸 통해서 이전에 스스로 찾지 못하던 걸 부분적으로는 찾았지요.

우리가 가령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환경갈등을 민주성, 생태성, 국제성 세 가지 균형추를 바탕으로 한 생태시티즌십을 통해 다루고, 나머지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식에서 방향을 찾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세련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5) 생태시티즌십과 환경스튜어드쉽

윤석: 그렇군요, 제가 자유주의를 일면적으로 파악한 면이 있을수도 있지 싶습니다. 저는 특히 기업들의 아시아 생태학살 연구를 하다 보니 맑스에콜로지에서 가지고 있는 이론적 함의가 커서 저는 그 면을 강조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반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민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생태시티즌십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가능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환경스튜어드쉽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지구를 지키는 청지기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이 개념과 생태시티즌십은 어떻게 대조해볼 수 있을까요.

순열: (우리가 했던 생태시티즌십 논의를) 세련되게 하면 환경스튜어드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집단으로서의 인간과 나머지 비인간을 놓고 하면 스튜어드쉽이 말이 되는데, 그렇지만 만약 비인간 생물 종이 아니라 동료 인간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은 많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 일반을 대표해서 어떤 개인이 어떤 집단이 어떤 사람들이 비인간 자연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의 한 결일 뿐이에요. 그 문제를 옆의 동료와 어떻게 같이 풀까 이라면 어려운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는 산림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런데 옆에 B라는 사람이 삼림은 조금 훼손돼도 그 안에 있는 동식물 종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 C라는 사람이 그 둘 다 아니라 지표면 밑에 있는 미생물들이 더 중요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워지죠.

이렇게 대립하는 게 있는데도, 스튜어드쉽은 많은 경우에, 규범적으로 (아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바람직한 상을 스튜어드가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스튜어드들이 실은 서로 다른 형태로 규범적인 상태를 그리고 있으면, 이 문제를 먼저 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늘은 산림을 그다음 날은 포유류 보존을 그다음 날은 박테리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스튜어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이 개념이 좀 오래되어 얼마나 발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 그런 것 같아요. 생태경제학도 이런 결의 비판을 받아서 사회생태경제학이라는 분과로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튜어드쉽도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6) 변화를 위한 문턱값 낮추기 - 기후위기 시대에 요청되는 멘탈리티를 위하여

윤석: 한편 처음에 이야기하신 ‘바람직한 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오류, 한계점이 계속 머리에 맴도네요.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요청되는 멘탈리티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위기를 통해 역설적으로) 증명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인식유형 혹은 인식구조 혹은 가치지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드린 물음이었는데, 그 전제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물음도 드리기가 애매해지기는 하네요. 기후위기 시대에 요청되는 멘탈리티(인식유형, 인식구조 또는 가치지향)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순열: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느 하나로 환원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답답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요청되는 멘탈리티나, 부동산 문제에 연결되는 이야기 정도는 있는 듯합니다.

개인들이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현재 자신이 보고, 관찰하고, 무엇인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이런 선택이나 결정에 대한 부담이 너무 강하거나, 이 선택이나 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한 사람의 온 생애 동안 크게 떠맡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거나 선택을 하는데 너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침묵하거나, 다수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사태가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면적인 것을 하나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다면적인 면들이 다면적인 상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다면적인 것들 중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 기준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정해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입장에서 새로운 것들을 더 자세히 보고 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을 공표하고 그것을 보는 것에 따른 결정의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완화되어야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의제기하고 싶어요,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데 너무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고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하면 사람들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최근에 이야기되는 기본소득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대학 입시 문제와 연결해 한 번의 선택이 전체를 결정 짓는다면 사람들은 못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한 번의 선택은 한 번의 선택만으로 남기고, 그 선택을 다른 방식으로 복원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완충장치가 작동하면 사람들은 그 다면성을 다면성으로 바라보기 쉽고, 그렇게 하면 문제해결도 좀 쉬워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관계설정, 새로운 결정이 그 사람의 생사를 거는 것이 아니어야 했으면 해요.

기후위기 시대에 요청되는 멘탈리티?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 그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게 말랑말랑하고 사람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동)구조

아니라는 게 현재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기후변화 문제가 있고 이것을 규정해낸 특정한 사회적인 권력과 지식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게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지식 권력의 복합체로서의 기후변화와 지오멘탈리티에 대한 문제를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문턱값을 낮춰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새로운 것을 하고 탐색하고 시도하는 게 위험부담이 너무 크면 그렇지 못하게 된다, 그럼 그것은 결과적으로 기존 체제의 유지 재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문턱값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 제도적인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 것이고.

7) 지오멘탈리티의 활용과 리서치

순열: 다시 지오멘탈리티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는 지오멘탈리티를 좀 더 학문적으로 분석 도구의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지오멘탈리티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를 찾아보면 어떤가 싶어요. 가령 땅을 어떻게 보는가와 땅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땅에 대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땅과 그 위에 있는 생물 종을 어떻게 보는가, 땅과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땅을 어떻게 보는가, 현재의 땅과 과거의 땅과 미래의 땅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지오멘탈리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는가에서 어떻게 느끼는가, 이건 약간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측면이 될 수 있을거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태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까지 규범적인 것을 담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지오멘탈리티는 대단히 분석적이고,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비교 가능한 개념인 한편, 규범적이고 바람직한 면도 짚는 개념이 되겠지요.

가령 한국의 2020년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오멘탈리티를, 제가 논문에서 했던 작업처럼 예를 들어 땅-부동산-권력형, 땅-자연-평등형 이렇게 유형을 나누면 지오멘탈리티가 마냥 추상적인 땅에 대한 뭐가 아니라 현시점에 구체적인 (연구 도구가) 될 수 있지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50대, 혹은 지주층의 땅과 집에 대한 독특한 구성요소에 뭐가 들어가 있고, 요소의 관계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 개념이 훨씬 더 분석적이고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될 거예요.

윤석: 정말 나중에 리서치를 꼭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단순히 개념만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개념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 지오멘탈리티와 거버멘탈리티, - 생태 감수성·소양과 권력과 지식

순열: 그리고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이 있잖아요? 이 거버멘탈리티

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지오멘탈리티라는 개념이 문화적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푸코가 봤던 것처럼 지식 권력의 복합체 위에 형성되는 거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의 땅과 세계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자연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 사회 안의 구조와 결과물에 영향을 받는다면 말이에요. 그 안에는 권력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또 권력과 결합된 지식이 들어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적인 무엇인가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권력이나 경제로부터 벗어나 문학적인 의미로의 지오멘탈리티가 아니라 그것들에 불박여있는 지오멘탈리티를 상상해 볼 수 있겠다 싶네요.

윤석: 원래 이 개념은 문화지리학자 윤홍기 교수님이 사용하셨는데, 한국이나 마오리족이 가졌던 되게 옛날의 풍수지리관과 그 사람들이 땅에 가지고 있던 걸 바탕으로 경관이나 경치에 대한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는 데 써서, 어떤 권력이나 지식·사회제도가 스며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짚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면, 푸코의 통치성이나 탈성장 담론의 ‘상상계의 탈식민화’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그 맥락을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성장주의의 부산물이 우리에게 남은 것처럼, 땅에 대해서도 사유재산 제일주의부터 부동산 불폐신화 등 특정한 부산물이 멘탈리티에 흔적처럼 분명히 남아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측면으로 계속 고민 중이에요. 윤홍기 교수님께도 메일을 한 통 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고 되었으면 한다고, (저 같은 후학이) 연구해준다면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연구는 아마 이 방향으로 가도 괜찮겠지요?

순열: 괜찮을 거 같아요. 그걸 좀 더 우리 사회에 맞춰서 이걸 약간은 경험적이고 분석적인 것들을 집어넣어서 같이하면 충분히 괜찮은 연구주제고, 여러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웃음).

윤석: 선생님 근데 제가 계속 여쭈고 싶은 점은, 저는 기후위기 심리학이 짚어내는 인식적 오류나 편향이 어떻게 보이느냐면요,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연결 자체가 끊어지고 그 부분에서 생태적 소양⁵⁰⁾이나 생태 감수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멘탈리티로 보여요. 장수풍뎅이가 어디서 살아? 할 때 백화점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라면, 기후위기가 와서 여기가 아작나든 지구와 미래가 아직나든 알 바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땅에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내 발로 땅을 딛고 자라온 경험이 없이, 도시 아파트에서 자라와,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오멘탈리티 없이 사는 사

50) 카프라 와 마테이(F. Capra and U. Mattei)가 강조한 생태적 소양(ecological literacy 또는 eco-literacy)이 필요하겠지요. - “생태적 소양은 어느 종의 폐기물은 다른 종을 위한 먹거리가 되고, 물질순환은 생명그물을 통해 지속되고, 생태순환의 동력이 되는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나오고, 다양성이 복원을 보장하고, 생명은 전쟁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해 이 행성에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어떤 개별체의 자산이 아니라 전체 관계망의 자산이며 언제나 전체 공동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카프라·마테이, 2015:232).”

람들이 집을 2, 3억 이런 화폐단위로 산술하고 투기시장에 거리낌 없이 뛰어드는 것이 아닐까 하고 묻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인식적 오류, 편향, 무관심 등으로 표현되는 현대인들의 멘탈리티와, 집이 사는 공간에서 투기처로 변모해 대지와의 관계가 과거의 역사적 맥락과 미래의 가능성을 망각한 채 화폐적 관계만 남아버린 지금의 지오멘탈리티가 흡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어쩌면 끊어졌던 연결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가상의 화폐적 관계에서 구체적인 보금자리(쉘터)로, 소유권에서 주거권으로 땅과 집에 대한 연결이 회복되는 방식으로 지오멘탈리티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윤리적인 요청이 강하게 들어간 방식의 지오멘탈리티인 거죠. 고민입니다.

순열: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권력이 모든 영역에 잘 편재되어있고, 권력이 아닌 게 없고, 세부적인 미시적인 영역에서 권력이 작동하고 지식이 작동하지요. 그런데 대항 권력 대항 운동 자체도 특정한 형태의 권력과 지식의 결합이고, 그것에 의해서만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그 대항 운동을 만들어낸 권력과 지식은 과연 선이냐 하고 물을 때, 대답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현재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작동해서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비 인간 생물종과의 관계를 대단히 화폐 중심의 혹은 자신의 사적인 재생산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자연을 다르게 바라보는 게 땅을 다르게 바라보는 게 집을 다르게 바라보는 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이미 그렇게 했겠죠. 그들이 그렇게 못한 것은 또 다른 권력이 작동한 것인데, 그럼 또 다른 형태의 누군가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혹은 새로운 형태의 차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지식과 권력을 이용해(?)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주체를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의 주체 생산이 정당하고 규범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지요.

기후변화 시대에 제가 한 명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온 곳에 이상기후가 덜 나타났으면 좋겠고, 삶의 공간에 잔혹한 일들이 더 적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것에 관련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사회과학적으로 어떤 특정한 규범적인 지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분석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석: 이건 저도 기후활동하는 입장에서 맨날 느끼는 부분이긴 합니다(웃음).

순열: 제가 생태시티즌십을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 생태주의 세계주의를 말했고, 이 외에도 더 좋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자신들이 유일하게 타당한 방식으로 봤었던 기후변화와 같은 어떤 사태에 대해서, 유일하게 타당한 게 아닐 수 있겠다,

다른 식으로 접근하면 이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지점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환경갈등,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 결정, 최근에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가지는 보통의 경우나 사회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어떤 유일하고 근본적인 대립 구도가 있거나 유일하고 근본적인 규범적 가치가 있어서, 나머지 가치들은 그 아래가 되거나 (근본적이고 유일한 가치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부당한 이해관계나 허위의식에 사로잡혀있거나 하는 식으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이상한 거 같아요.

윤석: 일종의 결정론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죠. 특히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올바른 지오멘탈리티 이야기한다고 올바른 지오멘탈리티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이론틀을 만들고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실천적인 방식의 제언이나 전략이 무조건 필요한 법인데, 그런 부분에서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9) 민주적, 생태적, 세계적

윤석: 선생님의 표현으로 ‘민주적, 생태적, 세계적 지향이 녹아든 민주적이고 사려 깊은 시민’이 이 사회에 많아진다면, 땅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은 부분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지속가능한 혹은 균형 잡힌 지오멘탈리티를 말하기 위해 이 세 개의 지향점은 좋은 길잡이가 되겠다 싶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지향은 독립적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상호 구성적이기에, 배타적인 관점으로 지금껏 양자택일 해온 관행과 결별하고 구성해가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제 물음과, 올바른 지오멘탈리티에 대한 구성원리로 민주적, 생태적, 세계적 지향을 원용해 접근해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적 생태적 세계적 이 세 축이 유용한 까닭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땅투기 문제를 보면 경제적 민주성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진행되고, 스프롤 현상이라 부르는 옆옆으로 개발이 번져가는 이 현상은 그린벨트 해제되고 일어나는 방식을 보면 생태적 가치에 부적합하고 일어나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땅뺏기(Land grabbing)는 한국 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의 땅을 사들여서 플랜테이션을 하는 토지에 관련한 세 가지 문제들이 각각 극명히 드러내는 지점을 짚어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상호보완적인 원리로 생각을 할 때, 한국의 국내 부동산 투기 문제나, 옆옆 신도시 개발하며 확장되어 산 깎는 면이나, 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땅뺏기 문제를 하나로 혹은 상호작용하는 문제로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기후정의 환경정의 생태정의 토지정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순열: 여전히 가령 우리가 중요한 환경갈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특히 초국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시했던 세 개의 축이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

한 길잡이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태와 이를 둘러싼 논의들을 보면,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거나, 그 복잡성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이 유일하다고 하는 논의들이 일방적이니까요.

이 문제를 땅의 문제나 부동산의 문제나 도시개발이나 공유지와 관련하여, 이 일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일이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일어나는가, 이 일이 사회(지구) 전반적인 공공성을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나누어서 쓸 수 있겠지요. 이렇게 중요한 판단기준으로서 세 가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면, 이미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듯이, 나머지 것들을 희생하면서 하나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물을 수 있어요.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마치 롤즈가 말하는 가치들 간의 최소 수혜자의 원칙처럼 다른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은 가치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 혹은 사회적으로 최 약자의 이익과 가치가 후퇴하지 않는 선에서 나머지 것들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가치들을 재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중요한 물음은, 토지에 관련해서, 누구의 눈으로 누구를 위해서라고 하는게 더 분명하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싶어요. 가령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해당 지역 옆에 있지만 전해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지금까지는 국가, 그리고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차후에 거주할 사람들의 질서를 최우선으로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갔지요. 이것이 괜찮은거냐, 하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생태시티즌십이나 (올바른 지오멘탈리티), 기후정의와 같은 규범적 논의들이 충분히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10) 생태시티즌십과 부동산문제, 주거정책의 함의

윤석: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면, 이제는 도시재생연구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웃음). 보내주신 논문⁵¹⁾도 잘 읽어서, 생태시티즌십 논의와 도시·주거·부동산 논의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지오멘탈리티를 부동산 정책에 가져오는 까닭은, ‘경제학’적 접근법이 수요-공급으로 환원하면서 놓치는 것을 보고 싶고, 그걸 놓쳐버린 상태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을 펴니까, 지금 있는 문제들이 더 심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이웃관계나 사회적 관계나 공동체 등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셨고, 결론적으로 총체성을 강조하시면서 사회적 연결망과 문화적인 것들이 사람들에 영향을 끼치는 바가 많다 말씀하셨지요. 저

51) 박순열·박순신, “정비사업 주민의식조사 연구 : 사회적 관계와 도시재생”, 한국도시재생학회, <도시재생 Journal of Korea, urban regeneration association> 제3권 제2호 (2017. 12), p. 53-72)

도 지오멘탈리티 개념을 부동산 담론에 가져오며 이렇게 말을 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시티즌십 논의를 확장할 경우, 도시재생이나 개발의 과정에서 민주적 참여-공론화와 생태적 수용성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도시개발 과정에서 민주성과 생태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정책적으로 도입이 되면 단순히 그간 해온 ‘환경영향평가’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는 단순히 “그린리모델링 몇 백 호”, “녹지면적 확대”, “도시숲 조성” 같은 수직적 정책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순열: 우리가 지금 만드는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형태가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다 다룰 수는 없지요.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대상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 싶어요. 정책 대상이나 효과 이런 면에서 고민하지 못한 면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사회과학자들도 이런 (섬세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리모델링이나 녹지는 누가 실제로 사용하는가, 도시숲은 누가 원하느냐, 무엇을 대가로 도시 숲을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도시 숲을 만드느냐 하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균형정책 대신에 도시 숲을 만들 수도 있고, 농촌에 가는 돈을 옮길 수도 있고, 청소년에 가는 돈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다른데서 이전된다고 치면 무엇을 대가로 도시숲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느냐 첫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근에 그것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입자냐 장기거주자냐 단기거주자냐, 고령이냐 청년이냐 어린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논의를 사실 잘 안하잖아요. 이런 논의들을 해갈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드는 게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성의 문제, 생태성의 문제, 세계성의 문제와 더불어서 다른 중요한 기준들, 이를테면 정의와 공평과 세계관과 계층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넣으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부동산·경제 정책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정부 정책이나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가부를 이야기하거나 찬성 반대를 하거나 동참하거나 동참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에 대한 자신의 결정이 나머지 삶의 다른 모든 것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럼 사람들이 극단적인 결정을 하거나, 다른 대안을 생각 못한다는 것이죠. 가령 내가 A지구에 살고 있는데, A지역 재개발 참여를 안 했다, 그로 인해 내 삶이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대단히 극단적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특정 지역에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혜택이나 불이익이 삶 전체에 가지 않도록,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보완이나 회복이 가능하도록 다른 완충 지대를 사회가 얼마나 만

들어낼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한 물음이에요. 그래야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시켜줄 수 있고, 또 여유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건데, 우리 사회는 그게 없이 유일하게 한 가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남은 삶에 지대한 영향이 가지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는 신조어)라던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라던가 왜 그러는지 생각해보면, 그 선택이 나머지 삶을 너무 크게 결정짓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 안거는 게 이상한 거지요. 생사가 걸린 문제이니까.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 제 생각에, 기능 분화된 사회에서 조금 더 살만한 민주적인 사회가 되려면, 삶의 경로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데 이 결정이 나머지 삶에 종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기능체계에서 보완될 수 있고, 보완될 수 있으면 한 곳에 그리 몰리지 않을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으면 부동산이 덜 중요해지는 거지요. 대학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대학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고.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경향은 몇몇의 기능체계와 사회적인 조직이 전체에서 너무 강한 결정력을 가지는 거지요. 한 사람의 삶에서도요.

부동산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부동산이 나머지 삶의 기회를 너무 많이 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삶의 경로에 대한 선택의 폭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저개발 지역의 사람일수록 크게 와 닿는다, 그래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동산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세입자, 장기거주자, 미성년, 청년 약자들에게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가야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선택 폭은 넓어지고, 이 사람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 당연히 상층부의 부동산 불로소득도 다른 부분으로 당연히 이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1) 마무리

윤석: 말씀 감사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네요. 저는 그린뉴딜의 이름으로 1, 2년 정도 녹색 전환을 모색해왔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점에서 근본적인 한계에 계속 마주쳤던 것 같아요. 섬세하지 않은 그린뉴딜이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없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문턱값을 낮추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에요.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마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웃음).

순열: 보고서 마무리 잘 하시고, 쉽지 않은 주제니까, 열심히 잘 해보세요. 결과물 나오면 잊지 말고 꼭 보내주고요. 그럼 나중에 또 만납시다.

3. 제언 - 민주적, 생태적, 세계적 지오멘탈리티와 이에 바탕을 둔 섬세한 그린뉴딜

1장에서는 지오멘탈리티의 개념을 소개하고, 지오멘탈리티의 성격과, 개념의 가능성을 논했다. 그리고 지구한계과학과 기후과학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지오멘탈리티’를, 근대 이전의 사회와 공동체의 지오멘탈리티를 살펴보며 ‘균형 잡힌 지오멘탈리티’를 살펴보며, 기후위기 시대에 요청되는 올바른 지오멘탈리티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박순열 선생님과 함께 지오멘탈리티와 생태시티즌십 두 개념을 마중물 삼아 대담을 나누었다. 이 두 개념은 유사성도 차이점도 있었지만, 그보다 추상적-가치 지향적 개념을 다루고 이론화 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유의해야 할 점을 확인하여, 지오멘탈리티를 연구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 따라,

3장에서는 첫 번째로, ‘토지·주거문제를 분류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지오멘탈리티의 분석틀(framework)’을 모색해보고, 이러한 작업에 이어, 두 번째, 올바르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지오멘탈리티의 요청에 대해 ‘민주적, 생태적, 세계적 지오멘탈리티’를 제안해본다. 세 번째로, 지금의 부동산 정책과 전환 정책에 이 민주적, 생태적, 세계적 지오멘탈리티가 시사하는 점을 말하며 이에 바탕을 둔 ‘섬세한 그린뉴딜’에 대해 사족을 덧붙여본다.

1) 지오멘탈리티의 분석틀

지오멘탈리티가 생태시티즌십을 만났을 때, 추상적으로 ‘땅에 대한 마음틀’이라 정의해둔 지오멘탈리티를 생태시티즌십의 체계화 연구 작업에 비추어 이론적으로 구체화 해볼 수 있다. 민주주의, 생태주의, 세계시민주의라는 생태시티즌십의 세 가지 가치지향을 지오멘탈리티에 원용해 토지·주거문제에 구체성을 지닌 지오멘탈리티의 분석틀을 만들어본다.

이를 아래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1). 땅과 토지를 대하는 멘탈리티가 있는 것처럼 토지·주거문제를 대하는 멘탈리티·접근방식·인식유형이 있음을 가정하였다.

	민주주의(평등)	생태주의(생태·환경·기후)	세계주의(세계시민주의) ⁵²⁾
상반되는 지오멘탈리티 유형	투기적 지오멘탈리티(speculative geometality)	토건적 지오멘탈리티(development ment)	토지수탈의 지오멘탈리티(Land grabbing geometality)
문제의 (두드러진) 유형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장과열, 2030대의 영끌,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과 부동산	도시 스프롤 현상,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란 도시공원일몰제,	1세계의 남반구 토지수탈(land grabbing), 마다카스카르 대우

	아파르트헤이트, 대규모 전세난, 젠트리피케이션, 용산참사와 청계천-노량진 강제퇴거 4대강 댐 토지 강제수용 경제적 (자산) 불평등	녹색-젠틀리피케이션 도시 숲의 문제(지역과 도시의 격차), 재건축-재개발 시 길고양이와 비인간동물 생존 문제 4대강 공사 (단기적)기후위기 - 녹지면적 축소(기후위기 적응실패)	토지강탈 사태 포스코,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파푸아 팜유 플랜테이션과 열대우림 방화 브라질 열대우림을 =무단 벌목의 다국적기업 (장기적)기후위기 - 기후난민
연결되는 가치	경제적 평등, 주거권	환경권 기후위기로부터의 안전권(생존권)	탈식민주의, 세계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침해된 권리	평등한 집·땅 경제적 민주주의 침해, 주거권 침해,	생태적 공간 국민의 환경권(헌법에 보장된 의미로), 비인간 동물과 자연의 죽음(학살, 침해),	안전한 집·땅, 공간 국제적 인도조약, 생태법, 과리협정, 지속가능한 발전권 주거권 침해, 해수면 상승과 땅의 잠김
관련단어나 멘트, 현상 - 말에 스며들어있는 지오멘탈리티	부동산공화국, 집은 사는 것(사유재산 제일주의) 부동산불폐신화 영끌 강남좌파 “녹지가 자본이다”	“일단 뭔가를 지으면 된다.” “뭔가를 파면 나온다.” 새마을 운동	“남 나라 땅이니까 괜찮다” “저기는 땅값이 싸니까.” 북반구 중심의 지도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집의 관계	토지이용 고갈(IPCC, 지구한계과학) 사람과 자연(생태, 환경)의 관계 땅과 사람의 관계 땅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	(공간상 거리가 있는) 땅과 땅의 관계 땅과 사람의 관계
정의 해결할 수 있는 지점(나오고 있는데안)	토지정의 토지공개념(분배 정의) 주거권 보장	환경정의·생태정의 커먼즈의 주체화장(인정적 정의) 커머닝	기후정의 기후정의 확립 생태법(Ecocide law) 제정
대항운동	보유세 인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권 운동(free-housing), 임대료 동결운동	커먼즈 운동(경의선 공유지, 송현동 솔방울 커먼즈) 동물권 운동, 생태운동, 기후운동	전 지구적 기후정의 운동, 다른 개발(the another development)운동
공생연구소의 연구적용	평등한 토지 - 토지공개념 - 시원	생태적 공간 - 커먼즈의 넓은 주체의 권리, 녹색 - 하연	기후정의의 문제 - 나경

<표1> 지오멘탈리티의 분석틀 범주표 - 생태시티즌십의 가치지향성 구분을 원용해 발전

2) 민주적, 생태적, 세계적 지오멘탈리티 - 균형잡힌, 지속가능한, 올바른 지오멘탈리티의 제안

토지·주거 문제를 분류하고 접근하는 ‘지오멘탈리티의 분석틀’ 작업은 민주성, 생태성, 세계성 세 개의 가로축을 가진다. 이는 1장에서 짚어냈던 투기적, 토건적, 수탈적 지오멘탈리티와 각각 대응하고 이 연구에서 곳곳에 인용한 토지·주거问题是 이 범주에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중요한 질문은 다음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지오멘탈리티의 가치지향성은 무엇일까. 1장에서 균형잡힌, 지속가능한, 올바른 지오멘탈리티라고 묘사했던 부분을 민주성, 생태성, 세계성 세 가치지향성을 축으로 다시 재구조화해본다.

이 세 가지 가치들은 잘 보면 어느 하나의 문제로만 국한하거나 환원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민주적, 생태적, 세계적 가치지향은 개별적으로 독립적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상호 구성적이고, 이렇게 접근할 때 어떤 것을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대신에 다른 것과의 관계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유형의 어떤 가치지향을 상상할 수 있다(박순열, 2019).” 어느 하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상호 가치들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지오멘탈리티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 이 세 가지 가치지향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차원에서만의 지향이라기보다 반-투기, 반-토건, 반-수탈의 지향이라는 점에서 구체성을 지닌다. 2030 땅투기가 부동산이 삶에서 너무 커져서 벌어지는 것이라면, 생존주의 전략이 ‘영끌’과 ‘빛투’가 되어 투기적 지오멘탈리티가 형성된 것이라면, 그들의 삶에서 부동산의 비중을 줄여 투기 할 필요 없는 지오멘탈리티 – 집은 그냥 사는 집일 뿐인 – 으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한 나라에서 ‘토건’의 비중이 과다해졌을 때, 굳이 필요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필요를 바탕으로 토건 개발을 일삼는 강력하고 딱딱한 토건적 지오멘탈리티에는, 토건을 빼는 것, 그 난개발이 가져온 폐해와 부산물을 되새기고 성찰하는 지오멘탈리티가 중요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전 지구적인 토지 부정의(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기후 부정의)의 근저에 자리잡은 토지수탈의 지오멘탈리티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지금 일어나는 거대한 부조리에 대항해 이전까지는 없었던 지구적 차원의 세계적 지오멘탈리티를 필요로 한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마주해 근대주권국가의 배타적 틀을 벗어던지는 힘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토지·주거 문제의 본질에 있었던 투기적, 토건적, 수탈적 지오멘탈리티에 대응하여 이를 해결하고 해소해나갈 지오멘탈리의 방향을 각각 민주적, 생태적, 세계적 지오멘탈리티라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안은 완결성을 띠지 않는다. 그보다, 어떤 지오멘탈리티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요청되는가 하는 물음이 공론장에 제기되고, 가치들이 토론을 통해 경합하고 연결되어 사유하고 구체화되는 과정은,

52) 세계주의는, 비단 국민국가의 영토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공간적 차이를 지녔다면 국가 간 영토선의 경계 말고도, 서울과 지역의 관계일 수도 있음을 덧붙여 둔다. 북반구·남반구의 문제처럼 영토적 경계를 포함해 (배타의 역사, 식민주의, 종속 이론)의 역사적 경계를 포함한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세계주의를 지구주의 혹은 행성주의라고도 확장해 쓸 수 있겠다.

그 과정으로서 지금껏 토지·주거문제를 다뤄온 좁고 딱딱한 담론판에 균열을 내지 않을까.

3) 섬세한 그린뉴딜 - 사람도 생태도 기존의 전환을 보완할 하나의 제언

그러나, 지오멘탈리티의 변화는 방향을 가리키고 제안한다고 똑똑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오멘탈리티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간 부자연스러운 투기적·토건적·토지수탈적 지오멘탈리티를 형성한 구조적 동인과 정책의 경로-한계를 섬세하게 살피는 것이 선결 과제와 같다.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잘못된 정책과 국가기조(성장주의, 토건 중심, 제국주의적 경제구조)는 투기적, 토건적, 수탈적 지오멘탈리티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열핏 비가역적이라 이를 수 있을 만큼, 한 번 형성되었을 때 그 견고함을 자랑하는 지오멘탈리티에 어떻게 해야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을까.

그럴 때 “변화(혹은 전환)를 위한 문턱값 낮추기”가 중요하게 등장할 수 있다. 지금 일어나는 녹색 전환(그린뉴딜)에 있어서 거대한 전환 담론과, (혹은 당위적이고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멘탈리티에 대한 요청만 남는다면 그 간극으로 인해 사회의 구체적 측면과 이론의 추상적 영역은 잘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 전환을 위한 “문턱값 낮추기”가 필요하다 이를 수 있겠다.

즉, 개인의 삶에서 부동산이, 국가 경제에서 토건과 수탈형 무역의 비중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녹색전환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항목과 시도는 섬세함을 띠어야 한다. 이미 지오멘탈리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전보다 섬세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펴나갈 수 있다. 앞선 ‘지오멘탈리티의 분석틀’과 ‘민주적, 생태적, 세계적 지오멘탈리티’의 제안을 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이드라인처럼 쓰는 것은 어떠한가. 마치 도넛 모델을 걸고 지구적 한계와 사회적 한계에 유의하는 것처럼 말이다. 앞서 정리한 투기적·토건적·수탈적 지오멘탈리티에 대한 경계와, 민주적·생태적·세계적 지오멘탈리티에 대한 지향은 주요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 때, 수요-공급의 획일화된 축이나, 표심과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방식의 접근을 경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 이는 토지 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의 개발(Development),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문제에 있어도 고려해 볼 지점을 다면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는 되겠다. 정책에 있어서는 섬세한 그린뉴딜의 요청이 되고 말이다. 전환에 필요한 지오멘탈리티는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것으로 섬세한 녹색전환의 출발점이 되리를 기대한다.

VII. 결론

1. 닫을 내리며

이렇게 공생연구소의 네 연구원은 각자의 항해를 마쳤다.

나경은 기후재난의 피해가 차별적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피해를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부동산 양극화를 지목하였고, 그리고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기후정의를 요청했다. 김혜미 간사는 활동가로서 다층적이고 모순되는 현실을 짚어주며 주거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자연 안에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주거의 범위를 네모난 땅과 주택을 넘어 공동체와 생태계로 확장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이것이 기후정의의 실현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다만 기후정의의 범주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미진했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정책에 대한 다층적 논의를 소개하고 제안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시원은 기후정의와 토지정의를 연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환경친화성에 집중했다. 한국의 조지스트들의 이론을 틀어보며 헨리조지의 녹색화 가능성을 검토하다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을 만났다. 남기업 소장의 천연물 기본소득 제안에 기반하고, 김윤상 교수의 '자연자원'. 환경으로의 '토지원리 확장'을 더해 '토지세와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는 천연물 기본소득'을 대안정책으로써 검토하였다. 나아가 '인간 종 특권'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한 토지공개념의 확장을 새로운 대안의 상상으로 제안한다. 이론을 검토하고 논리체계를 갖추는 학문적인 연구가 낫설어,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가다듬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토지공개념을 녹색의 지평으로 넓히는 작업은 의미가 깊다.

하연은 커먼즈라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땅을 소유하는 방식을 다시 바라보고자 하였다. 안색롬 솔방울커머너님과 만나 이야기 나누며 이제껏 주체로서 자리하지 못하였던 인간 아닌 존재들이 땅을 향유하는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한편,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하는 땅과 연결되어있는 무수히 많은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소유권의 핵심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질문이 남았다. 선행연구에서 커먼즈의 여러 이론들을 제시하였으나 깊게 분석하여 '토지커먼즈'로 적용하는데 부족함이 있었고, 이를 제언과 밀접하게 연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윤석은 '지오멘탈리티' 개념을 통해 부동산·주거·토지 문제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무언가를 잡아내고 싶었고, 이를 투기적, 토건적, 수탈적 지오멘탈리티로 명명하였다. 박순열 도시재생연구소장과 만나, '지오멘탈리티 분석틀' 작업을 해보았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올바른, 균형잡힌, 지속가능한 지오멘탈리티의 요청에 민주적, 생태적, 세계적 지오멘탈리티를 제안해보았다. 덧붙여 녹색전환을 위한 지오멘탈리티를 탐구하며, 섬세한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을 남겼다.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이겠지만

다음 연구를 기약하며, 전환 담론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를 두기로 하고 갈무리를 맺어본다.

2. 우리의 대안

용어부터 부동산과 주택 대신 ‘주거’로 바꾸기를 요구한다. 지금까지의 주거가 물리적인 ‘주택’의 동의어였다면, 녹지, 지역 사회, 공공의 공간도 주거의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 토지가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공공재로 보장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상품화되는 구조를 교정해야 하고, 전환 과정에서 시민 주체의 참여가, 주거 빈곤층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주체로 등장해야 한다. 전환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되지 않는 것,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보장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쾌적한 주거는 배타적 공간인 ‘집’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주거는 주택을 넘어서야 하고, 재난을 버텨낼 회복탄력성을 갖는 녹지처럼 다양한 요소가 주거를 구성한다. 환경과 공존해야만 안전한 주거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안전망을 갖추면서도 자연의 한계 안에서 작동하는 경제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

토지세와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는 “천연물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토지를 천연물로, 지대를 “다른 존재를 배제시키고 타인의 뜻을 가로채서 얻는 이익”이라고 정의할 때 이론적 뒷배가 생긴다. 이 전환의 대안책이 시행된다면 토지투기가 사라져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결할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순수혜 세대의 증가로 조세저항이 줄어드는 것은 이 전환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천연물의 지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서구와 완전히 다른 복지국가 모델을 보일 수도 있다. 나아가 토지정의는 인간 집단 내부의 불평등,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수억의 생물종 대 인간종의 문제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커먼즈가 던지는 질문들을 통해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던 이들을 주체라는 조명 아래 무대로 이끌어 내자고 제안한다. 그간 분배의 정의를 말할 때, 그 정의를 마땅히 보장받을 대상에 조차 속해있지 않은 존재들이 있어왔다. 그렇기에 누가 정의를 실현 받을 대상이 되고, 그런 정의를 논의하는 장의 주체로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가,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는 소유권의 핵심이 관계가 되어야하고, ‘자연 보호’의 스튜어드십을 넘어 인정적 정의를 바탕으로 생태계라는 연결망 속 같은 터전을 사는 동등한 구성원으로 이제껏 자연과 맺고 있던 관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다.

토지·주거문제를 분류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지오멘탈리티의 분석틀’을 제시해 보았다. ‘민주적, 생태적, 세계적 지오멘탈리티’는 반-투기, 반-토건, 반-수탈의 지향이라는 점에서 구체성을 갖는다. 이 지오멘탈리티의 세 가지 가치지향성 축은 어떤 지오멘탈리티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요청되는가 하는 물음을 공론장에 제기

할 것이다. 이를 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처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개인의 삶에서 부동산이, 국가 경제에서 토건과 수탈형 무역의 비중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녹색전환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항목과 시도는 섬세함을 띠어야 할 것을 제언으로 남겨둔다.

3. 연구 의의와 가능성

기후정의, 토지공개념, 커먼즈-커머닝, 지오멘탈리티 네 가지 색의 실은 서로 상이한 듯 보였지만, 연구를 진행해나감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맞아들어가는 부분들을 발견했다. 하나의 완전무결한 이론이나 접근은 없다. 다면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양하게 연결짓는 접근법을 시도했다. 양자택일(trade-off)이나 우선순위 매기기, '선택과 집중'의 경쟁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상호 보완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은 무척이나 소중해 보인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지라 유달리 고민할 지점이 많았다. 그럼에도 주제의 중요성을 함께하는 연구원 모두가 알았다.

인터뷰에서 김혜미 간사가 얼른 주거판과 기후판이 만나 지각변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토로한 것이 떠오른다. 모두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기후위기와 코로나 환란 앞에서 당면한 사회의 복잡한 복수의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도넛 모델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구한계와 사회적한계를 동시에 고려하며 다양한 대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는 도넛 모델이 가지는 힘처럼, 우리의 대안과 제안들이 그런 양상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연구 구성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거와 토지로 시작한 연구가 비인간 생명까지 확장되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 기후위기는 지금 지구 위에 밭붙이고 선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3초에 한 종씩 멸종하는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담론 전환은 결국 그 담론이 대상으로 삼는 주체의 확장을 통해 가능한 듯하다. 누구의 언어로 누구를 배제하지 않고 담아서, 누구를 위해 말하는가. 결국 이 시대의 정의와 대안은 얼마나 섬세한가, 어떻게 연결짓는가에 있지 않을까.

4. 연구과정과 소회 -코로나 시국의 공동연구

주제에 따라 각 장은 완결성을 갖지만, 시간적으로 우리는 한 달 간의 주제별 세 미나를 통해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발제하고 고민을 나눴고, 다음 한 달간은 풀리지 않는 부분을 들고 각지에서 움직이는 학자와 활동가를 찾아 나섰다. 그 사이사이에 같이 매주 만나며 민달팽이 활동가들과 만나거나,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간담회에 참여하여 주거 복지와 정책을 분석해보기도 하였다. 반빈곤 영화제에 참석해

“푸시-누가 집값을 올리는가(2019)”를 보기도 하고, 솔방을 위크에서 솔방을 커머너를 만났으며, 전국학생행진과 학회학술네트워크 주관의 주거권 포럼에 참석했다.

네 연구자들은 처음 공동연구를 시도했다. 오랜 시간 기후위기와 대안 경제 등 새로운 공부를 하고 토론해왔지만 공동연구는 또 다른 영역이었다. 주제의 폭이 넓어 논점을 분명히 잡고 차근차근 진척하기가 쉽지 않았다. 뜻을 같이 한다고 글이 척척 써지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한 사람은 무조건 가독성이 있어야 한다며 간결한 글을 요구했고, 다른 사람은 풍성한 논의를 담아내기 위해 긴 글을 써야만 했다. 회의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누군가는 아무 말이라도 했지만, 다른 사람은 정확한 의견이 생기기 전까진 침묵했다. 글을 쓸 때도 목차를 먼저 써두는 이가 있나 하면, 직감이 와야 쓰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도 그러한 ‘차이’ 덕에 서로가 서로의 보완책이 되었다. 길이 막혔을 때 쉼 없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이 덕에 해결책을 찾아내거나, 너무 많은 아이디어로 다른 길로 쌤을 때 토론을 정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짚어내 주기도 했다. 깔끔한 개요를 계속 건네준, 전 편집장 출신 연구원 덕에 목차는 간결하고 아름다워졌다. 학자 꿈나무인 연구원의 ‘무릇 연구란’이 래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 덕에 각 주제들의 연결성을 끊임없이 찾아냈다.

9월부터 12월까지 네 달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만나서 나눠야 할 연구와 걸림돌을 공유하지 못하고 각 연구자의 스스로의 뜻이 되었다. 마감캠프도 계속 미뤄져 결국엔 화상회의 앱을 밤새 키고 한탄과 회의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마침표를 찍었다. 코로나 시대의 공동연구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다른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쳐나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낯설고 어려운 순간이 여럿 있었음에도, 짧지 않은 시간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비슷한 고민을 갖고 헤매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민달팽이유니온의 정용찬, 김채린 님, 환대로 맞이해준 김혜미, 남기업, 안새롬, 박순열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는 연구비의 절반을 비건 식당의 상생에 기여하며 마음을 나눈 나경, 시원, 하연 윤석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공생연구소에서 연초부터 던져온 작은 질문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를 이룬 것이 벽차다. 개인의 이윤이 아닌 사회 전체의 정의를, 인간 중심적 논의를 넘어서 자연과 타 생명을 주체로 한 대안을 함께 탐색해 본 것만으로도 지나온 시간들이 의미 깊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함께 한 상상이 실현돼, 각자 반짝이며 오롯이 원하는 삶을 살다, 그 삶의 여행길 가운데서 마주할 날이 오길 바란다.

참고문헌

1. 서론

- 장윤석(노마) (2020),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②코로나와 기후위기」, 생태적지혜연구소 미디어, 2020.03.22.
<https://ecosophialab.com/%EC%BD%94%EB%A1%9C%EB%82%98-%EA%B8% B0%ED%9B%84%EC%9C%84%EA%B8%B0-%EA%B7%B8%EB%A6%B0%EB%89% B4%EB%94%9C-%E2%91%A1%EC%BD%94%EB%A1%9C%EB%82%98%EC%99%80-%EA% B8%B0%ED%9B%84%EC%9C%84%EA%B8%B0/>
- 장윤석(노마) (2020),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③코로나와 그린뉴딜」, 생태적지혜연구소 미디어, 2020.09.02.
<https://ecosophialab.com/%EC%BD%94%EB%A1%9C%EB%82%98-%EA% B8% B0%ED%9B%84%EC%9C%84%EA%B8%B0-%EA%B7%B8%EB%A6%B0%EB%89% B4%EB%94%9C-%E2%91%A2-%EC%BD%94%EB%A1%9C%EB%82%98%EC%99%80-%EA% B7%B8%EB%A6%B0%EB%89% B4%EB%94%9C/>
- 전강수 (2016),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부동산정책의 전개」, 돌배게, 257p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민중의 소리, “[그린 뉴딜 리포트] 코로나19 경제대책, 그린 뉴딜로 나아가야 – 2022년 대선까지 열린 의제 ‘그린 뉴딜’”, 2020.4.13
- 옥스팜(Oxfam), 「불평등 보고서 2020」, 2020.01
- 한국갤럽, WIN(WideWorldwide Independent Network of Market Research), “기후변화 관련 인식 – WIN 다국가 비교 조사”, 2019.12.31.
- “연소득 대비 집값’ 서울은 12배, 뉴욕·런던보다 월등히 높다”, 「한겨레」, 2020.8.30.

2. 기후정의

- 김현우 외 (역) (2012). 「기후정의」, 이매진, 원저: Ian Angus (2009). *The Global Fight for Climate Justice*
- 홍기빈 (역) (2018) 「도넛 경제학」, 학고재, 원저: Kate Raworth (2017), *Doughnut Economics*
- 김민정 (2020). 기후정의와 마르크스주의. 환경사회학연구 ECO, 24(1), 51-84.
- 김민정 (2015), 「한국, 기후 정의를 말하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김상현 (2020). 그린뉴딜 다시 쓰기 : 녹색성장을 넘어. 창작과비평, 48(1), 31-49.

- 김윤상 (2019). 부동산 정책과 특권 없는 세상, 「황해문화」, 2019.3, 30-45,
- 박범기 (2019). 비혼 1인 가구 시대, 주거정책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100up
아카이브,
- 이정찬 (2019),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 One NYC 2050 및 기후
활성화 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정민우·이나영 (2011).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한국사회학」, 45(2),
130-175
- 최지희 (2019). 청년주거로 보는 비혼여성주거,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프로젝트 토론회
- 홍덕화 (2019.12), 기후정의와 전환의 정치,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제4회 대화의
집 발표 자료집」,
- 홍덕화 (2020). 기후불평등에서 체제 전환으로 : 기후정의 담론의 확장과 전환
담론의 급진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24(1), 7-50.
- 한상운 외(2019),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반기웅, “모두가 우울한 부동산 공화국”, 「경향비즈」, (2020. 7. 11),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7111034011#c2b
- 조효제, '기후변화, 절체절명의 인권문제, 「한겨례」, (2015.08.18.)
- “강남 집값을 이해할 수 없다는 당신에게”, 「한겨례신문」, (2020.09.01),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60167.html>
- “기본주택 15년만 공급하면 집값 문제 해결된다”, 「오마이뉴스」, (2020. 8. 20),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65612
- 기후변화로 연간 2000만 명이 집 잃는다...('Oxfam) 보고서', 「더데일리포스트」,
2019.12.09.),
- <https://www.thedaily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1858>
- “반지하 사는 청춘도 뜨겁고 싶다”, 「시사인」, (2015. 12. 1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33>
- “전세보증금 포함해 총부채 한도 설정하면?”, 「경향신문」, (2020 8 26),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66>
- “‘집콕’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집옥’에 내몰리는 1평의 삶”, 「서울신문」,
2020년 8월 30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31015012>
- Bernie Sanders and AOC Unveil a Green New Deal for Public Housing,
「CITYLAB」, (2019.11.15.)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11-14/inside-the-green-new-deal-for-public-housing-act>
- 「Green New Deal for Public Housing

Act」 <https://www.sanders.senate.gov/download/gnd-housing-text> 검색일:
2020.12.04.

The Just Transition Research Collaborative (JTRC) (2019). 「Climate Justice from Below: Local Struggles for Just Transition」,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UNRISD)

3. 토지공개념

- 김민정 (2020). 기후정의와 마르크스주의. 환경사회학연구 ECO, 24(1), 51-84.
- 김윤상 (역) (1988). 진보와 빈곤. 도서출판 무실, 29-38. 원저: Henry George (1970). PROGRESS AND POVERTY.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 김윤상 (2002). [토지정책론: 토지사유제에서 지대조세제로]. 고양: 한국학술정보.
- 김윤상 (2004). 알기 쉬운 토지공개념.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김윤상 (2019). 부동산 정책과 특권 없는 세상. 황해문화, 30-45.
- 남기업 (2004).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대안적 경제체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 남기업 (2016). 헨리조지의 사상과 기본소득. 녹색평론 제148호, 162-174.
- 남기업 (2020). 천연물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 공동선.
- 양해림 (2015). "21세기 글로벌 기후변화와 윤리적 정의(Justice)." [환경철학] 29: 1-33.
- 전강수 (2012). 토지의 경제학. 돌베개, 153-168.

4. 커먼즈

- 권범철, (2020),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101, 17-49.
- 박인권, 김진언, 신지연 (2019).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 '경의선 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69, 62-113.
- 안새롬, (2020),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 대기 커먼즈를 위한 시론」, 환경사회학연구 ECO, 24(1), 333-370.
-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399-442. 커먼즈번역네트워크, 정남영, 윤영광 (2018). 「커먼즈 가장 오래된 짚음의 씨앗」. 웹진.
- 최현, 따이싱성 (2015). 「공동자원론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제와사회, 108, 166-198
- 경의선공유지가 꿈꾸는 제3의 공간. 「서울대저널」 (2019.02.25)
- 공덕역 경의선 철도부지...시민 공유지 될까, 상업시설 될까. 「경향신문」 (2019.06.12)
- 여기가 종착지 또 어디로 가나. 「한겨례21」 (2019.06.17)

“[솔방울커먼즈 시리즈] ①도시의 땅을 딛고 사유하기, 그리고 커먼즈를 만들어가기”. 생태적 지혜연구소, 2020년 8월 25일 수정, 2020년 10월 3일 접속 <https://ecosophialab.com/%EC%86%94%EB%B0%A9%EC%9A%B8%EC%BB%A4%EB%A8%BC%EC%A6%88-%EC%8B%9C%EB%A6%AC%EC%A6%88-%E2%91%A0%EB%8F%84%EC%8B%9C%EC%9D%98-%EB%95%85%EC%9D%84-%EB%94%9B%EA%B3%A0-%EC%82%AC%EC%9C%A0%ED%95%98%EA%B8%B0/>

“[솔방울커먼즈 시리즈] ②소유 절대주의 도시를 넘어서: 송현동 숲공원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 생태적 지혜연구소, 2020년 8월 25일 수정, 2020년 10월 3일 접속.

<https://ecosophialab.com/%EC%86%94%EB%B0%A9%EC%9A%B8%EC%BB%A4%EB%A8%BC%EC%A6%88-%EC%8B%9C%EB%A6%AC%EC%A6%88-%E2%91%A1%EC%86%8C%EC%9C%A0-%EC%A0%88%EB%8C%80%EC%A3%BC%EC%9D%98-%EB%8F%84%EC%8B%9C%EB%A5%BC-%EB%84%98%EC%96%B4/>

“[솔방울커먼즈 시리즈] ③도시계획과정에서 참여와 커먼즈: 송현주민 되기”. 생태적 지혜연구소, 2020년 9월 14일 수정, 2020년 10월 3일 접속.

<https://ecosophialab.com/%EC%86%94%EB%B0%A9%EC%9A%B8%EC%BB%A4%EB%A8%BC%EC%A6%88-%EC%8B%9C%EB%A6%AC%EC%A6%88-%E2%91%A2%EB%8F%84%EC%8B%9C%EA%B3%84%ED%9A%8D%EA%B3%BC%EC%A0%95%EC%97%90%EC%84%9C-%EC%B0%B8%EC%97%AC%EC%99%80/>

“경의선 공유지를 떠나며: 우리, 다시 세상을 커머닝하자”, 문화연대 홈페이지.
2020년 4월 29일 수정, 2020년 10월 14일 접속,
<https://culturalaction.campaignus.me/48/?q=YToxOntzOjEyOj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3850137&t=board>

Lee, K., Bernardi, M., Diaz, J., and Yi, H. (2020). 「도시의 공유 기반 활동들과 커먼즈: 바르셀로나와 몬트리올의 사례들과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 (H. Yi, ed.) C.I.T.I.E.S

5. 지오멘탈리티

김종철 (2019),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녹색평론사
박순열, (2019) 「생태시티즌십 : 생명과 자유를 구현하는 새로운 시민의 모색」, 한국환경사회학회, ECO, 2019, vol.23, no.2, pp. 67-98 (32 pages)
박순열·박순신 (2017), “정비사업 주민의식조사 연구 : 사회적 관계와 도시재생”, 한국도시재생학회, <도시재생 Journal of Korea, urban regeneration association> 제3권 제2호 (2017. 12), p. 53-72)

박순열 (2020), 「‘사회’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가?: 사회의 가능성과 변화에 대한 관찰」. *공간과 사회*. 30(3). 통권 73호 pp. 62-98.

윤홍기 (2019), 「마음틀과 땅」,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제 266호, 13.

윤홍기 (1987), 「韓國의 Geomentality에 대하여」, 地理學論驚(지리학논경), 第14號, 1987年 12月, pp.185~191

윤홍기, (2011), 『땅의 마음』, 사이언스 북스.

윤홍기 외 3인 (2012), 『전통생태와 풍수지리』, 지오북

케이트 레이워스 (2017), 홍기빈 역 (2018), 『도넛 경제학』, 학고재, 원저: Kate Raworth (2017), *Doughnut Economics*

자크모 달리사 외(2018), 강이현 역 (2018), 『탈성장 개념어 사전』, 그물코, 214p, 원저: Giacomo D'Alisa, Federico Demaria and Giorgos Kallis(2018), *Degrowth: A Vocabulary for a New Era*

요한 록스트룀·마이티스 클룸 (2015),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에코리브르, 2017 원저: Johan Rockstrom & Mattias Klum(2015) *Big World, Small Planet*

칼 폴라니 저, 홍기빈 (역) (2016)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원저: K. Polanyi(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464p

시애틀 추장 연설 (1854), 워렌 제퍼슨 외 2인 엮음 (2005), 이상 역 (2015), 「어떻게 공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인가」, 가기날

스테파노 리베르ти (2011), 유강은 역 (2014), 『땅뺏기』, 레디앙, 원저: Liberti, Stefano(2011), *Land grabbing. Come il mercato delle terre crea il nuovo colonialismo*

채효정,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서평]자본의 ‘가치’는 자연의 ‘무가치화’를 통해 만들어진다, 워커스, 2020.10.13.)”

안새롬, [솔방울커먼즈 시리즈] ①도시의 땅을 딛고 사유하기, 그리고 커먼즈를 만들어가기”. 생태적 지혜연구소, 2020년 8월 25일 수정, 2020년 10월 3일 접속 <https://ecosophialab.com/%EC%86%94%EB%B0%A9%EC%9A%B8%EC%BB%A4%EB%A8%BC%EC%A6%88-%EC%8B%9C%EB%A6%AC%EC%A6%88-%E2%91%A0%EB%8F%84%EC%8B%9C%EC%9D%98-%EB%95%85%EC%9D%84-%EB%94%9B%EA%B3%A0-%EC%82%AC%EC%9C%A0%ED%95%98%EA%B8%B0/>